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과 의의

— 사회진화론 비판과 공화주의 형성과정 —

—

2018년 11월 21일(수) 10:00-18:00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4 ——— 일정표

제 1 세션

서구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 사상의 전파와 한국내 수용

- 14 ——— 〈발표1〉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의 동아시아 수용의 맥락
- 41 ——— 〈발표2〉 구한말 이후 한국에서 서구 공화주의의 수용과
입헌정치체제의 지향
- 61 ——— 〈발표3〉 구한말 개화파의 공화주의 인식과
20세기초 계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수용
- 유길준과 장지연의 경우를 중심으로 -
-

제 2 세션

20세기초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비판과
공화주의 인식의 양상

- 99 ——— 〈발표4〉 20세기초 독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극복과
평화사상의 형성
-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의 경우 -
- 125 ——— 〈발표5〉 1910년대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공화주의·공화제 수용 양상
- 171 ——— 〈발표6〉 1910년대 해외독립운동가의 국제정세 인식과
‘공화제’ 임시정부 구상
-

일정표

등록 09:30~10:00

전체 진행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김현철 연구위원

개회식 10:00~10:10

환영사: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제1 세션 10:10-12:20

주제: 서구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 사상의 전파와 한국내 수용

사회: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 발표 |

1. 이병택(동북아역사재단)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의 동아시아 수용의 맥락

2. 신철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구한말 이후 한국에서 서구 공화주의의 수용과 입헌정치체제의 지향.

3. 김현철(동북아역사재단)

구한말 개화파의 공화주의 인식과 20세기초 계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수용 - 유길준과 장지연의 경우를 중심으로 -

| 토론 |

강진옥(숙명여대), 김종학(동북아역사재단), 손병권(중앙대)

오찬: 12:30-13:50

제2 세션 14:00~16:00

**주제: 20세기초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비판과
공화주의 인식의 양상**

사회: 김형목(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 발표 |

4. 김기승(순천향대)

20세기초 독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극복과 평화사상의 형성
-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의 경우 -

5.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1910년대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공화주의 · 공화제 수용 양상

6. 윤대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10년대 해외독립운동가의 국제정세 인식과 '공화제'임시정부 구상

| 토론 |

이동연(선인역사문화연구소), 황민호(송실대), 신호승(동북아역사재단)

휴식: 16:00-16:20

제3 세션 16:20-17:30 | **종합 토론**

사회: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

참가: 제1, 2세션 참가자들(사회, 발표, 토론자)

폐회식: 17:40-18:00

1 세션

서구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 사상의 전파와 한국내 수용

사회: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발표1〉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의
동아시아 수용의 맥락

발표 | 이병택(동북아역사재단)

〈발표2〉

구한말 이후 한국에서 서구 공화주의의
수용과 입헌정치체제의 지향

발표 | 신철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발표3〉

구한말 개화파의 공화주의 인식과 20세기초
계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수용
- 유길준과 장지연의 경우를 중심으로 -

발표 | 김현철(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강진옥(숙명여대)

김종학(동북아역사재단)

손병권(중앙대)

1

세션

〈발표1〉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의
동아시아 수용의 맥락

이병택(동북아역사재단)

토론문 :
강진옥(숙명여대)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의 동아시아 수용의 맥락

이병택(동북아역사재단)

1. 진화론의 애매성과 동아시아적 이해 방식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과학이론이다. 반면에 공화주의는 정치적 주의를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위의 두 사물을 사상이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비슷한 사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물은 의도하는 바가 분명 다른 것이다. 의도하는 바가 다른 두 사물을 특정한 시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주어진 두 사물을 자신들이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면, 이론적 차원에서는 불공평한 것일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실상 일반사람들은 과학과 이념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과학이론이 정치적 차원에서 해석되고 이용되는 일은 예외가 아니라 다반사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특히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성격을 띠다고 생각된다. 사회가 진화하는 데 변하지 않는 통치를 고집하는 일은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과학 내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특정한 과학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사고유형이다. 즉 진화론을 과학적 맥락에서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식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사고방식들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사고의 불균형을 겪게 된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사고의 불균형 문제이다. 열강의 침입을 걱정하는 가운데 받아들여진 사회진화론은 사람들에게 “적자 생존”, “생존경쟁”, “우승열패”,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새롭게 가르쳤다. 인간사에서 우승열패의 관념은 특별나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 당시의 국제관계가 약육강식의 인상을 깊이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 의미가 한층 더 강렬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란 믿음이 뿌리내렸다. 생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적자(the fittest)가 되어야 했다. 인간의 통상적 사고는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써 적자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적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난제가 제기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 당시 성공한 자를 적자로 규정하는 성향이 있다. 승리의 결과가 곧 적자를 증명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 당시 강자로서 부각된 서구가 곧 적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성공 원인을 알고 따라잡는 것이 약자에게는 급선무가 된다.

“적자”란 표현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 흥미로운 단어이다. 적자는 환경에 상대적이다. 특정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에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생존을 하게 되고, 그 형질이 유전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 변화가 어느 단계를 지났을 때 새로운 종(種)이 생성되는 것이다. 칼레오파고스라는 환경이 주어져야 그 환경에 잘 적응한 변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진화론은 생존을 조건짓는 환경의 특징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이론이다. 생존과 환경의 초점은 서구의 형이상학적 사고의 틀을 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동아시아의 지식인에게도 비슷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진화의 관념은 불변의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선호를 흔들었고 도덕의 지속적 가치에 대한 회의를 낳게 했다. 한말에서 생존경쟁의 대표적 주창자인 윤효정은 생존경쟁의 열기가 고대, 중고(中古), 근세에 다른 까닭을 깨문는다.¹⁾ 여기서 그의 질문과 관심의 초점이 고전적인 그것과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드러난다. 우선 행위의 동기를 의(義)에 둘 것이냐 아니면 이(利)에 둘 것인지를 따지던 고상한 논쟁은 생존의 차원으로 옮겨 갔고, 시대를 초월한 윤리적 규범을 모색하는 대신에 특정한 시대(약육강식)에 맞는 행동준칙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유교

1) 윤효정, 「생존의 경쟁」, 『대한자강회월보』, 제11호, 1907. 5. 25.

의 이상적 정치로 간주되었던 삼대(三代)와 같은 과거가 아니라 진화의 과정과 종차 역을 품고 있을 미래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진화론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통찰이다. 그러나 상호관계 즉 적응에 초점을 지속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론적으로는 두 항 중 하나의 항을 고정시켜야만이 관련된 다른 항을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실천을 고려하는 인간의 일상적 태도는 유기체나 환경 중 하나의 항에 방점을 두게 마련이다. 이 점은 미국에 진화론이 수용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노빅에(Peter Novick) 따르면 미국의 보수주의자는 유기체에 강조점을 두었고, 앵글로색슨민족의 인종적 우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화의 사고를 활용했다. 역사학에서는 제도를 유기체로 보면서 “맹아 이론”이 나타나기도 했다. 맹아 이론은 게르만의 옛 제도들이 점차 성장해서 미국의 제도로 발전했다는 식의 설명 방식이다. 반면에 진보사학자로 알려진 터너(Frederik Jackson Turner)가 제시한 프론티어 명제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요소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생물학의 발전도 환경을 강조하는 연구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인간 통념에 따라서 방점이 유기체나 환경으로 번갈아 가며 진자(振子)처럼 흔들린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상대적 개념은 고착화와 절대화의 경향을 가진다는 점이다. 적자는 강자로, 강자는 물리적 힘을 가진 자로 고정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동서의 구분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도 그런 식으로 해석되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the stronger)의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치체제에 따라서 강자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과두정에서의 강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고, 민주정에서는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한 자가 강자가 될 것이다. 절대적 정의의 개념을 찾는 소크라테스는 그의 주장에 상당히 당혹해 한다.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듣는 참석자들도 트라시마코스의 진의를 틀림없이 통속적 의미의 강자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위의 맥락에서 볼 때 진화론적 사고는 통속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사고방식을 낳았을 것이다. 첫째, 삶의 목적은 철학이 내세웠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생존에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 사실상 근대정치사상의 주요 인물인 홉스(Thomas Hobbes)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적 삶의 목표를 낮추려는 시도는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 정치의 목적은 고상한 삶이 아니라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 혹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는 정부가 아무리 고

상한 목표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생명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러한 정치이론은 일견 저급해 보이지만 정치적 억압의 한계를 확정한다는 면에서 대단히 견고한 기초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진화론이 전제하는 생존의 논리도 일차적으로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에는 홉스의 이론과 다른 독특한 면이 있다. 스펜서(Herbert Spencer)는 사회적으로 적자를 많이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개입 혹은 도움은 개인들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적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자가 줄어들고 허약한 자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펜서에는 일종의 목적론적인 자유방임적 사고가 있고, 그 목적론에 따라 환경보다는 유기체에 방점이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지했을 것이다. 제국주의는 제국의 생존 논리를, 민족주의는 민족의 생존 논리를, 개인은 개인의 생존 논리를 주장했고, 가능하다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도 그 생존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통속적 생존경쟁의 관념을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생존의 사실은 곧 경쟁을 통과해서 나온 결과이기에 그 수단의 여하에 관계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통속적인 생존논리는 내적으로 갈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으로 진화론은 지금 현재의 생존자에 대한 존경을 함의한다. 지금 현재의 존재는 진화의 과정에서 힘들게 살아남은 것들이기에 기본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수적 태도와는 정반대로 진화론은 변화의 논리로 인해서 모든 존재를 상대화시키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어떠한 존재도 그 현재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고 지금 그 상태에 안주하거나 그 상태를 전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주어진 현실과 단절하는 혁명적 사고와 달리 진화론적 사고는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양가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 원칙상 이 양가적인 태도는 건전한 회의적 사고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간본성의 일상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현실에 대한 양가적 태도는 현실을 수용하는 숙명론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인간의 노력에 의한 현실 변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진화론에 역사적인 발전단계론이 결합할 경우에 진화론은 혁명론으로 바뀔 수 있었다.

다윈(Charles Darwin)은 인간의 노력을 간과하지는 않지만, 자연의 작용이 압도적이라고 주장한다.²⁾ 여기서 자연은 자연에 작동하는 법칙의 총체를 지시하는 줄임말이다. 스펜서의 경우에도 인위적인 노력을 대단히 의심스럽게 본다. 일본이 헌법을 만든다는 소식에 그는 오랜 시간 형성된 역사와 관습을 존중하라고 조언할 정도였다. 말하자면 과학이론으로서 진화론은 자연의 힘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자연이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야생 동물을 가축화하거나 야생 식물을 가져와 작목하는 경우에도 그 힘의 원천은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진화론의 수용은 인간의 노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서구의 우월한 상태를 인정한 이상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자연의 힘에 기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극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서구의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발전에 뒤쳐진 독일에서는 자연을 강조하는 과학 대신에 인간의 작위가 개입될 수 있는 역사를 강조하였다. 일본의 근대역사학은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Leopold von Ranke)의 비판적 사료비평에 입각해서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수립하고자 했다. 사실상 독일에서 Wissenschaft는 과학이 아니라 정신수련에 해당하는 용어였다. 이 용어가 과학(science)으로 번역되면서 대단히 많은 혼란이 생겼다. 이 현상은 미국의 역사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아시아의 지식인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진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인간실천의 지침이다. 존재와 당위의 간극을 연결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사람은 과학으로부터 인간실천의 지침을 뽑아내려는 것을 인식론적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진화론에 대한 서구 사회의 논쟁에서 이미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생물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을 옹호했던 스펜스에 반해서 헉슬리(Thomas H. Huxley)는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은 자연계에만 적용될 뿐 인간 사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헉슬리는 도덕과 윤리의 독자성을 통해서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을 긍정했다. 진화론의 동아

2) Robert Maynard Hutchins, editor in chief, *Darwin*, in *Great Works of the Western World*, (Chicago, London, Toronto, Geneva, Sydney, Tokyo, Manila: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52), p.32.

시아적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엄복(嚴復)은 헉슬리의 주장에 더 공감했다.³⁾ 통상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존재와 당위의 간극은 그다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론가들은 자신의 실천적 관심에 따라 진화론으로부터 실천에 대한 서로 다른 지침을 읽어냈다.

사회진화론이 동아시아 지식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첫째는 계보학적 연구의 경향이다. 어느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따라 이루어진 연구방법이다. 둘째, 진화론적 사유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사유들과 긴장관계를 가지며 혼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밝히는 연구이다.

계보학적 연구는 역사연구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계보학적 연구 중 유봉희는 영국의 진화론사상과 독일의 진화론사상의 차이를 강조한다. 전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진화론을, 후자는 국가 우위 사상을 내재한 진화론을 발전시켰다. 유봉희는 신소설의 작가 이해조, 현상윤, 양건초를 헉슬리·키드 → 엄복·양계초의 계보에, 이인직을 블룬칠리·헤켈 → 가토 히로유키의 국가주의 계보에 위치시킨다. 첫 번째 계보는 약육강식과 우승열패의 세계를 “반전통·반윤리적” 세계관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계보는 위계적·계서적 문명론과 식민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특히 유봉희는 양반의 봉건성에 대한 이인직의 증오는 외세나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침묵하게 했고, 이러한 사고는 이광수에게 이어져서 위계적·계서적 문명의 눈으로 조선을 바라보게 했다고 지적한다.

유봉희의 추론을 따라가면 누가 더 나쁜 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외세”나 “제국주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외세는 한편으로는 개화의 모델로,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를 침략하는 강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지배계층으로서의 양반의 무능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조선의 “전통”과 “윤리” 중 보존해야 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모두 폐습에 불과한가의 질문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대답해야 숙제였을 것이다. 이 대답에 따라서 그들의 노선은 서서히 가닥을 잡아갈 것이다. 불행하게도 진화론이 도입된지 10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유봉희,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 계보-신소설 작가들의 사회진화론 인식론에 대한 서설」, 『한국학연구』, 제32호, 2014, pp.181-192.

한말과 같은 변화의 시대에 책임과 비난의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속에서 ‘보수’의 길은 힘든 것이다. 앞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았듯이 현실은 수구와 개혁이 긴장하며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 것도 개혁하지 않으려는 것은 나쁜 짓이며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신이나 광신은 위기의 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간본성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수주의의 흔적은 있었던 듯하다. 장인성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으로부터 한국보수주의의 기원을 찾으려 한다. 유길준의 보수주의는 그가 “사직왕조를 뜻하는 전통적인 국가 관념”을 보수하려는 대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⁴⁾

…국가를 보수하기 위해 ‘선왕의 제도’는 변경할 수도 있다. 옛 법을 변경할지라도 ‘선왕의 종묘사직’을 보안한다면 이는 선왕의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된다. 선왕의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선왕의 제도를 보수할 수 있다는 역설의 논리가 성립한다. 이러한 역설은 선왕의 종사(宗社), 즉 군주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체용론을 빌려 말한다면, ‘선왕의 종사’를 보수하는 것이 체(體)가 되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옛법’을 시세에 맞게 바꾸는 것은 용(用)이 될 수도 있겠다.⁵⁾

장인성에 따르면 유학자들은 시무에 따른 변통의 개혁론(자동사적 변통의식)에 익숙했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바꾸면서 보수해야 한다는 주체적 의지를 강조하는 자동사적 보수의식과는 구별된다. 유길준에게 “군주제는 변혁할 수 없는 제도다. 그것은 자동사적 보수의 대상이”었다.⁶⁾ 유길준의 보수주의는 화이(華夷)의 틀에 갇혀 선왕의 제도를 고수하고자 한 위정척사파나 중화관념을 근대문명관으로 대체하고자 한 급진개화파와 결을 달리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즉 왜 군주제를 고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유길준은 던지지 않고 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대답은 대략 그가 화이의 문명적 도덕관을 벗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의 정치적인 신중성 때문일 것이다. 한말 일어난

4) 유길준 원저, 장인성 저, 『서유견문』(파주: 아카넷, 2017), p.43.

5) 위의 책, p.352.

6) 위의 책, p.351.

복벽운동의 논리를 보면 후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왕정론자들은 전제군주정이 정치의 안정과 외세침략으로부터의 방어에 유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는 이토 히로부미가 전제군주인 고종으로부터 국권을 빼앗으려 했을 때 허구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전제군주인 고종 한 사람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으니 말이다.⁷⁾

그러나 정치사의 맥락에서 볼 때 사려깊은 정치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복종의 문제일 것이다. 정치적 복종의 효과성은 오랜 복종의 습관에 크게 의존한다. 익숙한 통치방식에서 다른 통치방식으로 이행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나타난다. 현대정치학의 단골 메뉴인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성공한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과,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방식으로 정치가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도 복종 문제의 어려움을 증명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군주제의 형식적 소멸 이후 한국정치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공동체의 단위로서의 민족(국민)의 수립과 그 복종의 양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까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정치에서 민주적인 안정적 복종 양식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국정치에서 지배와 복종의 특징을 일컫는 용어이다. 비록 이 용어가 한국적 지배와 복종을 잘 특징짓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적 특수성을 규정하려는 노력으로 본다면 시사하는 점이 많다. 즉 서구의 개별 나라도 그 나름대로 특수한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유길준은 영국과 프랑스의 통치와 복종의 차이를 부각시키려 했다. 그가 영국정치의 안정성과 탄력성에 주목했다는 점은 그의 한국정치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장인성이 언급하는 체용론이 방법론적으로 진화론보다 더 나은 사고를 제공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서구철학사의 맥락에서 볼 때 진화론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실체론(substantialism)을 비판한다. 체용론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을 전제한 체용론은 서구의 힘에 압도당한 각 나라의 자긍심을 어느 정도 유지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대의 과학적 사고

7) 박현모, 「왕정복고에서 공화정체제로: 3.1운동 전후 복벽운동 연구」, 이동수 편, 『공화와 민주주의의 나라』 (서울: 인간사랑, 2013), pp.80-103.

와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인문학의 정신주의로의 경도는 위와 같은 이론적 틀에서 기인하는 것이리라.

다른 한편 박찬승은 사회진화론을 “낡은” 인식틀로 비판한다. 그는 사회진화론을 비교적 일관된 사고체계로 규정하면서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여타 다른 정치적 실천운동과 결합되어 가는 모습에 주목한다. 1880-90년대 사회진화론은 개화사상과 결합되고, 1905-19년에는 자강운동론, 1910년대 실력양성론, 1920년대 문화운동론을 떠받치는 기초 관념으로 기능하다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뒤 사회진화론은 해방 이후 자본주의 근대화론과 결합되면서 부활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박찬승은 한국사회가 선진화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진화론과 같은 “낡은” 인식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낡은” 인식틀이란 “실증주의적, 자연주의적 관점”을 의미하고,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역사법칙의 동일성,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동일성”을 지시한다.⁸⁾ 사회진화론을 비판하면서 그는 대체로 독일의 정신주의적 인문학을 지지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독일의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군국주의와 나찌즘에 동조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학문적 발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진화론을 “낡은” 인식틀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박찬승과 비슷한 시각에서 이송희는 사회진화론이 국권회복의 논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제국주의 논리를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제국주의 논리로서 제국주의를 극복하려는 논리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의 사고방식에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한다.⁹⁾ 즉 제국주의를 부정하면서도 제국주의를 닮아가는 우리의 이중성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개화사상가들이 주장한 민족주의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파악하는 제국주의의 쌍생아에 지나지 않았다. 장지연, 박은식, 그리고 신채호는 힘의 논리에서 조선의 약점을 각각 단결력의 부족, 허약한 물질문명, 그리고 정체의 부실에서 찾았다.¹⁰⁾ 그들은 서구사회의 강점을 나름 파악했고, 그 시각에서 단체의 수립, 식산의 장려, 그리고 입허공화제 수립의 처방을 제시하며 조선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8) 박찬승, 「사회진화론 수용의 비교사적 검토-한말 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영향」, 『역사비평』, 1996.2.

9) 이송희, 「한말 사회진화론 수용과 전개」, 『역사와 경계』 제22호, 1992.6, p.41

10) 우남숙, 「한국근대사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 양식-장지연·박은식·신채호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1집 1호, 1999.7, p.55.

그러나 그들은 조선의 약점을 이해하기는 했으나 서구가 어떻게 그러한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고찰하지는 않은 듯하다. 예를 들어 장지연은 한국사회의 단합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단체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서구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단합을 위해서 집단 내부의 경쟁과 대립을 부정하고 단지 단체의 결성과 단합력의 배양을 역설했다. 즉 그의 방법론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정신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이와 달리 서구의 사상적 노선들 사이를 건너뛰기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상적 노선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신채호는 사회진화론의 틀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경쟁의 원칙을 상호부조의 원칙으로 대체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되찾는다. 또는 사회진화론을 따라서 가장 진화한 인민주권론에 입각해서 입헌공화제를 수립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후 마침내 무정부주의로 귀착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의 사유는 진자의 운동처럼 한쪽 끝에서 다른 극단으로 치다랐던 것이다. 신채호와 장지연은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기존의 정신주의적 이상주의로의 회귀했지 않나 생각된다.

정신주의적 이상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필자가 보기에 방법론의 부재라고 생각된다. 즉 ‘어떻게’ 단합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식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입헌공화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철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진화론적 사유를 따른다면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서구사회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 또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진화론적 사고에 침잠했다면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각자 그 나라의 결사(association) 양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했을 것이다. 진화론적 사고에 적합한 태도는 ‘선언’이나 ‘구호’의 형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길을 찾는 방식일 것이다.

한편 신채호나 박은식이 역사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자 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국가를 상실한 상태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길은 역사를 기억하는 길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민족의 역사를 진화론적 사고의 관점에서 독해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선형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조선의 역사를 조망하기 때문에 그들은 초역사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

들은 ‘역사적인 인종적 인격’(historic racial personalities)¹¹⁾을 근대의 ‘거족적인’(national) 근대적 민족과 구별하지 않는다. 역사적인 인종적 인격은 통상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등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종적 단위의 구별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적’ 혹은 ‘씨족적’(tribal) 성격의 결사를 넘어서서 거족적 결사로 진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연구 이전에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선형적 민족의 개념으로 결박해 버렸다. 민족의 ‘혼’이나 ‘얼’은 진화를 거부하는 동일화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연구는 민족을 신의 초월적 이념(Idee)으로 간주하는 랑케(Leopold von Ranke)의 민족주의 역사학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덧붙여 민족이 초월적 이념으로 상승됨으로써 정치적 결사는 민족에 덧붙여진 부가물 정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결사에 대한 사고는 빈약해졌다. 정치적 결사에 대한 빈약한 사고와 실험은 해방 이후 한국정치사의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¹²⁾

박은식과 신채호는 근대민족주의 역사의 한 경향을 따라서 ‘조선민족’을 새롭게 수립하려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민족을 기술적인(descriptive) 의

11) Winston Churchill, *The Second World War I*, (London, Toronto, Melbourne, Sydney, Auckland: Cassell & Co.Ltd., 1955), p.15.

12) 논자에 따라서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제헌헌법을 만들 때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연원은 한말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긴 연원을 가진다고 한다.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19)』, 『공화와 민주』(서울: 인간사랑, 2013), pp.104-145. 그러나 실제로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제헌의회에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적극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를 설명하는 현재의 한국정치학의 현황은 민주공화정에 대한 합의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또한 해방 이후에 수입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을 생각하면 민주공화정에 대한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는 없다고 본다. 김영명, 『대한민국 정치사: 민주주의의 도입, 좌절, 부활』(서울: 일조각, 2017) 참조. 무엇보다 해방 이후 수립된 북한의 정치체제와 6.25 남침까지 고려한다면 민주공화정에 대한 합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더 많은 맥락적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민주공화정에 대한 합의의 주장은 북한의 6.25 전쟁의 정치적 대의(cause)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25 전쟁이 ‘인민해방’전쟁인지 아니면 ‘민족통일’전쟁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대의에 의한 것인지는 침략의 당사자가 밝혀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만일 그 전쟁이 민주공화정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해방 이전까지 형성된 민주공화정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점이다. 덧붙여 6.25 전쟁의 침략 당사자를 가려내는 논쟁이 한국사회에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 논쟁은 미국에서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의 책임문제에 대한 좌·우 역사학자의 논쟁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생각된다. 반면에 6.25 전쟁의 정치적 대의에 대한 논쟁은 주의를 끌지 못했다. 만일 해방 이후에 민주공화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6.25 전쟁은 ‘헌정의 위기’(constitutional crisis)로 표현될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헌정의 위기로 이해된 6.25 전쟁은 미국의 내전(남북전쟁)과 비슷한 사례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미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규범적이고 가치평가적인 것으로 간주한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민족을 수립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스튜어트 밀(John Stewart Mill)은 정치적 결사의 의미를 가진 민족과 역사적인 인종적 인격의 차이를 기초로 제국통치를 구상했다. 다시 말해 그는 기술적 의미의 민족과 가치평가적 의미의 민족을 구분하고 그 차이의 공간에서 제국관리를 기획했다. 메타는 그 차이를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기술적인 의미에서 “민족”은 단순히 서로 구분되는 족속들(peoples)을 외연적으로 표시하는 자리표기(placeholder)이고, 공통의 문화, 언어, 습관, 혹은 전통을 공유하나 아직까지는 반드시 서로 구분되는 정치공동체로 통합되지 않은 인민들을 지칭하는 그 용어의 전근대적 사용에 가장 가깝다. 가치평가적 의미에서 민족은 특정한 종류의 정치적 사회로 그들 스스로를 조직해온 사람들을 지시한다.¹³⁾

위와 같이 민족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수립되는 것임을 인도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한 역사가는 인도인의 민족 개념 구성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이처럼 인도인은 ‘민족’개념(특정 집단은 정치체 중심부에 있고, 다른 집단은 정치체 외부에 있고, 또 다른 집단은 정치체 주변부에 있다고 보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 개념은 1885년 인도국민회의 창설을 계기로 제도적 형태를 갖추었다. 인도국민회의는 불충분한 정치적 대표, 차별적인 행정, 부의 유출, 불평등한 토지세 제도에 대한 비판을 더 밀고 나아갔다. 인도국민회의의 민족의식은 제국으로부터(제국의 통치 구조로부터, 제국의 다른 부문에서 복무한 병사와 노동자로부터, 제국의 연계에 이바지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은 인도인 상인과 금융업자로부터) 생겨났다.

여왕이 여황제가 되고 국가의 제도가 더욱 견고하게 시행되던 때에도 영국인

13) Mehta, Pratap Bhanu. 2012. “Liberalism, Nation, and Empire: The Case of J. S. Mill,” in *Empire and Moder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New York, Melbourne, Madrid, Cape Town, Singapore, Sao Paulo, Delhi, Mexico C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38.

은 과거의 중층적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인도의 주권은 인도인에게 있다는 생각은 거부되거나 적어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1885년까지 인도 지식인들은 새로운 통치 형태의 중요성을 파악했으며, 그들이 정치적 조직을 결성한 까닭은 인도라 불린 실체 및 인도의 영국인 통치자들과 관련이 있었다.¹⁴⁾

기술적 의미의 민족과 가치평가적 의미의 민족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제국통치의 방향은 변형을 겪었다. 일본의 제국통치에 대한 방향도 조선민족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존재했다. 조선민족의 정치적 결사의 오랜 내력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제국주의의 틀 내에서 조선의 자치를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요시노사쿠조(吉野作造)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¹⁵⁾ 그는 자유주의자 스튜어트 밀의 입장과 흡사하게 문명사적 입장을 견지했다. 진화론적 사고 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스펜스는 군사적 사회로부터 산업적 사회로의 진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논자에 따라서는 산업사회에 적합한 근면과 검소 등의 자질을 진보의 시각에서 가치평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자질들을 익히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훈계성의 권고가 ‘자유방임’의 논리와 단절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진화론적 사고 내에서도 민족중심의 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진화론적 사고 내에는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었다. 미국에서 진화론의 보수파는 게르만민족과 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진화론의 유기체와 환경의 상관관계에서 ‘유기체’가 연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역사학의 연구방향을 노빅(Peter Novick)은 ‘민족주의적·인종주의적 역사서술’이라 이름한다.¹⁶⁾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마도 ‘맹아이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이론은 고대 게르만의 자유로운 마을의 관행으로부터 뉴잉글랜드 타운의 기원을 찾는 식의 연구였다. 역설적이게도 유기체 중심의 역사연구는 랑케의 이념적 민족사 서술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랑케는 게르만의 습속에 내재한 ‘개인적 자유’(personal

14) 제인 버뱅크, 프레더릭 쿠퍼 지음/ 이재만 옮김, 『세계제국사』(서울: 책과함께, 2016), p.467.

15) 한상일, 『제국의 시선: 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서울: 새물결, 2004).

16) Peter Novick, *That Noble Dre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특히 제3장 Consensus and legitimation을 참조.

freedom)와 같은 특징을 초월적인 민족적 특징으로 간주하고 영국사서술에 사용한다. 반면에 진화론의 진보적 해석은 ‘환경’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것으로는 ‘프론티어 테제’(frontier thesis)가 있었다.

위와 같이 진화론 자체에 대한 상반된 이해를 고려해 볼 때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진화론적 사고의 틀은 더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먼저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점은 과학정신일 것이다. 서구사회도 과학정신이 발전하는 데는 수많은 오해와 저항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과학의 의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일본, 한국이 서구의 과학정신을 수용하는 데는 좀 더 독특한 점이 있었다. 우선 이것을 정신주의적(mentalistic) 과학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서구의 발전에 과학정신이 핵심이라는 점과 과학은 “원인”(cause)을 탐구하는 데 있다는 점은 간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용어로 세상사를 풀어내는 것은 일차적인 과제였을 것이다. 과학의 중요성은 역사학을 과학으로 규정할 일본관학의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¹⁷⁾

이런 점에서 량치차오(梁啟超)의 『음빙실자유서』의 도입부는 흥미롭다. 그는 이 책의 서두를 과학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한다. 「성과와 실패」에서 그는 “세상의 이치는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 이후 「근인과 원인에 관하여」에서 그는 다시 원인(遠因)의 탐구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한다. 여기서 서구 과학의 정신에서 중국의 문제를 바라보려는 그의 태도가 역력히 나타난다. 인과율에 따라서 세상사를 보면 “진화의 이치”가 나온다. 진화의 관점에서는 “세상일에는 성공이란 것도 없고 실패라는 것도 없다. 그리고 “진화의 이치는 한이 없어서, 한 등급 나아가면 또 한 등급이 있고 한 단계 나아가면 또 한 단계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주어진 현실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에 따르면,

식견이 얇은 자들은 우연히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서 실패라고 하는데, 이는 여기서 실패한 것이 저기서 성공하기도 하고 지금 실패한 것이 나중에 성공하기도 하여 내가 실패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성공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

문이다. 한 푼의 노력을 다하면 반드시 한 푼의 유익함이 있으므로, 오로지 날로 부지런히 힘쓸 따름이다. 다만 원인 만들기를 일삼으면 언젠가 결과를 거두는 것은 반드시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만약 눈앞의 것에 연연하여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일을 벌이지 않는다면, 결국 성공하는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을 벌이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곳에 서는 사람이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실패하는 곳에 서는 사람이다.¹⁸⁾

위의 인용에서 량치차오는 진화론으로부터 ‘대장부’ 혹은 ‘영웅’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규범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서 량치차오는 진화론적 사고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자’(political agency)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드러낸다.¹⁹⁾ 대중의 역량이 약하고 외세의 압력으로 망해가는 나라에서 정치적 변혁과 국가 강화에 동원할 인재를 배출하려는 욕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육시킬 능력을 갖춘 지식인이 필요했다. 그 결과 지식인과 정치엘리트 사이의 거리는 서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가까워졌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계몽지식과 권력의 유착 관계는 유교의 전통과도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 현상에 덧붙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정치 행위자에 대한 강조는 개혁이나 혁명을 강조하는 정치문화가 싹트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이른바 정치에서 진보론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전략을 자리잡게 했다. 해방 후 좌와 우를 막론하고 뒤처짐에 대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정치개혁과 혁신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일은 한국정치의 일상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환경은 제도가 천천히 진화하거나 성장하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자연선택’이 빠진 진화론이 지배적 흐름이 된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화론의 외양을 한 진보론이 지배적 사고의 유형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대체로 국가주의로 경도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서구 근대사상사에서 자연과 역사의 큰 긴장이 존재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로 대표되는 자연(Nature)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고의 흐름이 한편에 있었

17) Margaret Mehl, *History and the State in Nineteenth-Century Japan*, (Copenhagen: The Sound Book Press, 2017), introduction.

18) 량치차오 지음/강중기·양일모 외 옮김, 『음빙실자유서』(서울: 푸른역사, 2017), p.20.

19) Jun-Hyeok Kwak and Leigh Jenco, edit., *Republicanism in Northeast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5) pp.100-103.

고, 다른 한편으로는 루소(Jean Jaque Rousseaux)로 대변되는 인간의 개조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을 표방하며 역사(History)를 강조하는 사고의 흐름이 있었다.²⁰⁾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동아시아는 크게 보아 후자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생각된다. 가장 큰 배경은 그 당시 급박한 상황인식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자유’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자유의 성장이 빈약했던 동아시아에서 공화주의 정신의 성장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공화주의의 첫째 조건은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2. 공화주의와 자유의 문제

공화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서 볼 때 몇 가지 공화주의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가깝게는 공화의 윤리적 덕목의 관점에서 공화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 정체와 관련해서는 혼합정을 중심으로 공화정을 설명하는 입장이 있으며, 정념의 측면에서는 자의적 지배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충동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참여’(participation)를 강조하는 아테네식의 모델과 ‘법’이나 ‘제도’를 강조하는 로마식의 모델이 있다.²¹⁾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테네식 모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한 것으로 민주정의 혼란을 구제하려는 의도에서 혼합정이라는 구체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로마식 모델은 주로 대가문(집단) 간의 질투 혹은 라이벌 관계를 법이나 제도를 매개로 규제하려는 관점에서 나왔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테네식 모델은 군주정에 대한 반대의 정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과도한 민주정을 온건하게 만드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군주정에 대한 거부로부터 생겨난 로마 공화정의 역사와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만일 동아시아

에서 공화주의의 생성이 있었다면 그 이전의 통치방식에 대한 반대로부터 공화주의 의식이 싹틔울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헬레니즘 철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고 이와 더불어 ‘신로마공화주의’ 연구가 활발해졌다.²²⁾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1960년대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²³⁾ 이 입장에 따르면 공화주의 연구는 자유주의의 비대성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 기존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에 대한 불만 또한 공화주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신로마공화주의 연구에 대한 동아시아에서의 수용을 한 연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²⁴⁾ 첫째, 동아시아에서는 비지배(non-domination)로서의 자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구에서는 민주적 경쟁(democratic contestability)이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고 증진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이해했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신로마공화주의가 가진 반포폴리즘적 입장은 적극적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의문시되었다. 동시에 신로마공화주의는 자의적 지배에 대항해서 인민에게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귀족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대중의 의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비-지배의 자유에 대해 의심을 가졌다.

둘째, 공화에 대한 관념은 한, 중, 일 세 나라에서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은 ‘공화’(共和)를 공동체의 관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사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배를 사회적 정의의 이슈와 연결시킬 공간이 적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신로마공화주의에 대한 반응이 별로였다. 우선 일본은 군주제의 나라였고 더욱이 비-지배가 ‘겸허’(謙虛)라는 사회적 미덕에 대립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중국에서 신로마공화주의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제안한 ‘화해사회’(和諧社會)의 개념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신로마공화주의는 시민참여적 혹은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신로마공화주의는 정치공동체에 조화(harmony)를 복원하려는 시도 정도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나라들에서

20)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ited,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Third E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Adam Smith 편 참조.

21) 김경희는 아테네식의 혼합정 이론을 ‘공화민주주의’로, 로마공화정의 이론적 근거를 ‘공화주의’라고 부른다.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정신문화연구』 2007 봄호 제3권 제1호, p.114.

22) 김용민, 『키케로의 철학』, (파주: 한울, 2018), pp.45-46.

23) Daniel J. Kapust, *Republicanism, Rhetoric, and Roman Political Thought: Sallust, Livy, and Tacit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8-9

24) Jun-Hyeok Kwak and Leigh Jenco, edited, *opcit.*, pp.2-3.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는 민족주의적 공동성을 탈각시키려는 자유주의의 시도에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위의 논의에 의거해서 추론해보면 동아시아에서 공화주의의 수용은 그다지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고, 대체로 군주정의 대안적 정치체제로 이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소개된 정부형태의 분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의 정부분류에 따르면 채택할 만한 정체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면 공화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공화국을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하는 ‘민주공화국’의 이름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서구정치사상사에서 공화정을 ‘민주적’ 공화정과 ‘귀족적’ 공화정으로 분류한 사람은 몽테스키외(Montesquieu)이다. 한편 몽테스키외에 앞서서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로마공화정을 일종의 계급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설명했다. 크게 보면 그는 혼합정체의 입장에서 공화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딱히 민주적 공화정을 언급하거나 이론화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소개된 민주적 공화정의 이론적 열개는 몽테스키외로부터 기원했고 동아시아에 개략적으로 소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the Spirit of the Laws)에서 핵심적 모델로 삼은 나라는 마키아벨리의 모델이 된 로마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제의 영국이었다는 점이다. 그의 눈에 영국은 군주제의 외양을 한 공화정이었다. 고대의 공화정과 근대의 공화정은 기반이 다르다. 흥태영에 따르면, “몽테스키외는 고대의 공화정이 검소에 기반하였다면, 이제 근대의 공화정은 상업에 기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²⁵⁾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상업이 인민의 습속을 부드럽게 할 것이란 전제에서 이루어진다. 영국의 공화주의는 고대와 달리 개인성을 희생하지 않고 부와 개인적 공적을 존중한다. 공화국은 조국에 대한 사랑, 평등에 대한 사랑에 의해 유지된다. 고대의 작은 영토의 공화국에서는 시민적 평등과 검약을 매개로 조국에 대한 사랑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큰 공화국에서 개인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는 무엇인가?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조국에 대한 사랑은 습속의 선량

25) 흥태영,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대한 정치적 독해」,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2호, p.154.

함을 낳고, 습속의 선량함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낳는다.”²⁶⁾ 상업활동은 좋은 습속을 낳고 개인과 애국심을 연결시킬 수 있다. 한편 몽테스키외는 상이한 법과 습속에 따라서 상이한 법의 정신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습속에 적합한 절제된 정부를 구상했다. 그는 자신의 방법론적 원칙에 따라 각 나라의 상이한 법과 습속을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그 속에서 법의 정신을 찾았다.

조선에서의 민주공화정의 맹아는 만민공동회로까지 소급되곤 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공화정의 관념이나 전통을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해서 추적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자의 경우에는 만민공동회를 근대정치를 여는 ‘사건’으로 간주하는 반면, 후자의 논리를 따른다면 그 사건은 이전 역사의 어떠한 전통을 잇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²⁷⁾ 어쨌거나 이 글의 목표는 공화라는 뜻과 관련된 모호한 관념들을 환기시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서양에서 공화가 이해된 방식과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는 데 있다.

먼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서구의 공화주의 논의에서 가장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는 단어는 ‘자유’이다. 자유를 소극적 의미의 ‘비개입’(non-interference)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기지배(self-mastery)라는 적극적 자유로 볼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비지배’로 볼 것이냐의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서구에서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공화주의 논의에서는 정치의 공적인 성격을 강조와 정치적 참여를 부각시키는 시각에서 공화주의 전통의 수립과정을 추적한다. 한국에서 자유의 언급이 힘든 이유는 비개입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골이 깊은 대립구도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대립의 상황에서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대한 관점이 소개되기는 했지만 그다지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오지는 못했다고 본다.²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대립은 정

26) Montesquieu, *The Spirit of the Laws*, edited by Anne M. Cohler, Basia C. Miller & Harold S. Sto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42.

27) 전인권, 정선태, 이승원 공저, 『1898 문명의 전환-대한민국 기원의 시공간』, (서울: 이학사, 2011). 책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저자들은 정치문명의 전환이 1898년의 시공간에서 기원했다고 말한다. 한편 박명림은 공화주의적 관념들이 조선시대에도 낫설지 않은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공화주의 이전의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The distinctiveness of republicanism in modern Korea-Ideas and constitutions”, *Republicanism in Northeast Asia*, edited by Jun-Hueok Kwak and Leigh Jenco.

28)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페릿과 사피로의 글을 참조.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공화주의 정신에

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평등)의 대립으로 진행됐다. 물산장려운동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한 좌파적 비판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어쨌거나 자유라는 말에 함의된 격한 이념적·정서적 긴장 때문에 한국의 공화주의 연구자들은 자유라는 말을 역사 연구에 사용하지 주저하는 듯하다.

로마공화정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 리비우스(Livius)는 그의 로마사에서 공화정의 시작을 ‘자유 로마 인민들’(Liberi...populi Romani)라는 의미심장한 구절로 시작한다.²⁹⁾ 강조를 위해서 문장의 구성에서 자유를 가장 앞부분에 배치한 것이다. 그의 역사기술을 따라가면 자유의 첫 번째 의미는 왕의 ‘오만’(superbia)에 대한 귀족들의 질투로부터 시작한다. 왕을 몰아낸 후 귀족들은 평민들이 타르퀴니우스 왕가의 지배로 다시 이끌리지 않을까 우려해서 평민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한다. 가장 심각한 공화정의 위협은 귀족 자체로부터 나왔다. 귀족의 자제들 중 계급적 위계질서 속에서 왕족적 방종을 누리던 사람들은 타르퀴니우스의 복귀를 꾀한 음모에 가담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노예 상태가 되었다고 불평했다. 그 당시 콘술직을 맡은 부루투스의 두 아들이 그 음모에 가담했다. 그는 자신의 지휘 하에 법에 따라 반역자가 된 두 아들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점은 왕가에 딸린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왕가의 재산을 공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편 왕으로부터의 위협이 없어지자 평민들은 귀족들의 억압을 참기 힘든 것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관직을 요구했다. 이로부터 인민위원(Tribunes)이 출현하게 된다.

대해서는 페티트가 큰 기여를 했다. Philip Pettit,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샤피로는 권력적 측면의 분석을 강조하면서 비지배를 강조한다. Ian Shapiro, "On Non-Domination",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Vol. 62 Issue 3, 2012, pp.293-336. 한편 자유주의 시각에서 자유의 문제를 가장 흥미롭게 제기한 사람은 셸일 것이다. 그는 아담 스미스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서 자유의 문제에 접근한다.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nchor Books, 1999).

29) 리비우스는 자유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문장을 구성한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Liberi iam hinc populi Romani res pace belloque gestas, annuos magistratus, imperiaque legum potentiora quam hominum peragam. Quae libertas ut laetior esset proximi regis superbia fecerat." 그는 자유인민이 된 로마인의 평화와 전쟁의 사안, 일 년 단위의 행정관, 권위에서 법이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된 점을 다룬다. 그리고 자유를 더욱 달콤하게 한 것은 마지막 왕의 오만함에 있었다고 말한다. Livy, *History of Rome, Book I-II*,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y B. O. Forster,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p.218.

페티트(Pettit)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로마공화정의 모델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의 자유의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비토(veto)의 자유이다. 공화주의적 제도는 비토를 통해 견제를 가능하게 설계하는 데 핵심이 있다.³⁰⁾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연구는 계급 간의 질투에 의해서 공화정의 건강성이 유지된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로마공화정은 사실상 귀족들 간의 라이벌 관계에 의해서 운영되었고, 평민의 역할은 귀족들의 라이벌 싸움에 동원된 정도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³¹⁾ 타키투스(Tacitus)가 지적하듯이 결국 귀족들 간의 내부적 다툼에 모두가 지쳐서(discordiis civilibus fessa) 로마공화정은 막을 내리고 사람들은 일인자지배(princeps)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³²⁾

리비우스의 지적에 따르면 로마공화정의 통치는 왕의 기능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분산시키고 임기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왕이 담당하던 제사의 기능은 제사장으로, 통치의 기능은 두 명의 임기제 콘술로, 위기시에는 한시적으로 기능하는 독재관을 두었다. 이것은 왕정을 폐지하더라도 ‘임페리움’(imperium)으로 말해지는 정치적 권위의 약화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뜻한다.

한말 왕정에 대한 애착 혹은 미련이 가시게 된 주요 사건으로 고종이 군민공치의 약속을 배신하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한 것에 대한 실망, 그리고 1907년 고종의 퇴위가 거론된다. 로마사와 비교해서 한국인의 군주정 배경은 스스로 왕을 몰아낸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형식이었다. 이것은 왕정에 대한 적극적 거부나 배제의 형식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린 선택의 형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로마와 달리 한국은 왕과의 대결을 통해서 공화정적 정치권위를 수립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영향은 대한민국임시헌장에 있는 ‘구황실우대’ 조항에 대한 논쟁에서 나타난다. 이 조항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는 인민주권의 선언과 황실우대가 모순이라고 보는 해석이고, 둘째는 독립운동이라는 과도기를 감안해서 이 조항의 수단적 필요성을 역설하는 입장이다. 오항미는 황실우대 조

30) 다른 한편 비토의 제도화가 가진 문제점으로는 의사결정의 지연과 방해를 들 수 있다.

31) Sheldon S. Wolin, *Politics and Vision: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0), Ch. Three, The Age of Empire: Space and Community 참조.

32) *Cornelii Taciti Annalium*, Recognovit Brevique Adnotatione Critica Instruxit C. D. Fish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06), p.1.

항이 정체로서의 군주정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수립이 가져온 권위의 부재와 정통성 수립의 고민’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³³⁾ 그에 따르면 인민주권 선언과 황실우대가 모순이라고 보는 해석은 당위론에 매몰되어 임시정부 수립 상황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덧붙여 로마에서 공화정체수립의 정통성은 왕정에 대한 거부와 자유의 수립에 대한 내부 구성원 사이의 인정에 초점이 두어졌다. 이에 반해서 ‘대동단결선언’은 대외에 대해서 민족의 주권상속을 선언한다. 상속의 대상은 조선왕조로부터 민족으로 이동했지만, 논리적 측면에서 이것은 통치의 정통성을 ‘상속’의 논리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상속의 논리는 임시정부헌정 논쟁에서 ‘혁명’의 논리와 대립했다. 하지만 혁명의 논리를 내세워 구황실우대 조항을 삭제하고자 했던 여운형조차도 황실을 벌하자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革命은 徹底하여야 할지라 執政者의 恩惠를 云云함은 愚說이오 그렇다고 余는 皇室을 罰하잖은 아니라’고 주장했다.³⁴⁾ 따라서 새로운 질서 수립에 동반해야 할 권위의 부재와 정통성 수립의 고민과 이에 덧붙여 민족 정체성과의 공생 속에서 공화정의 실존적 의미는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치적 권위의 안정을 위해서 양이(攘夷)노선을 유보하고 왕정복고의 합의를 이루었다. 외세의 위협 앞에서 극심한 내부적 투쟁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왕정복고 이외에는 다른 출구를 찾지 못했던 것 같다.³⁵⁾ 그리고 정치적 정통성을 만세로부터 세습된 천황계보에서 구했다. 다나카(Stefan Tanaka)에 따르면 일본의 관학역사가인 시라토리쿠라키치(白鳥庫吉)는 일본민족의 기원을 하늘(天) 곧 천황제도에 두고 일본민족에 정체성을 부여했다.³⁶⁾ 실존하는 군주를 앞세운 일본에 비해서 현실적인 정치적 구심점을 상실한 한민족의 정체성 수립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왕조의 정통성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신화나 인종, 심지어 ‘혼’과 ‘얼’로 민족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상속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의 민족적 레

토릭은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기 힘들었다. 오히려 외부와의 대조와 대립의 경험이 작동하는 가운데 역사적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천황제를 유지한 일본에 비해 정치적으로 느슨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식민지 상황이라는 그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임시정부헌법의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위의 논쟁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한 가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 있다. 흔히 공화주의는 왕정에 대비되어 말해진다. 그러나 두 사물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으로 말해져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로마의 경우에도 왕이 수행한 기능은 그대로 살렸다. 권위와 복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상 왕을 정기적으로 선출할 경우 왕정은 공화정으로 기운다고 말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대통령제는 공화제의 틀 속에서 이해된다. 덧붙여 왕정이 가진 장점으로 ‘평안’(tranquility)을 들 수 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귀족들 간의 라이벌 싸움이 가져온 사회적 혼란은 공화정 몰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결국 일인지배로 귀결되었다.

두 사물의 결합과 관련해서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벌어진 왕정 옹호파인 토리파(Tory)와 공화정 옹호파인 휘그(Whig)파의 협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³⁷⁾ 우선 토리파는 스튜어트 가문의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앉힐 경우 세습의 원칙이 깨질 것을 우려했다. 세습의 원칙이 깨질 경우 세습군주제가 아닌 선출군주제로 변할 것이고, 이것은 왕정보다는 공화정에 가깝게 될 것이라 보았다. 특히나 그 당시에는 안정적인 선거의 관념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토리파는 새로운 왕을 선출할 때마다 한 차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다. 따라서 토리파는 공화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의 우려는 영국의 역사를 볼 때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았다. 이에 대해 휘그파는 토리파의 우려를 풀어주면서 공화정의 원칙을 수립해야 했다. 휘그파에 따르면 습정을 수립하는 것은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상속자를 지명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섭정이 계속 통치하는 나라는 인민이 지명하고 고정시킨 정규적인 세습군주들에 복종하는 나라보다 더 공화국에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스튜어트 가문을 배제하고 새로운 군주를 지명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1688년 혁명의 협상으로 대중정부의 원칙이 더욱 확고해 졌으며 왕

33) 오항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 ‘헌법국가’로서의 정당성 확보와 딜레마」, 『국제정치논총』제49집 1호, 2009, p.293.

34) 오항미,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p.291.

35) Donald Keene, *Emperor of Japan: Meiji and his World, 1852-191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36)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66.

37) David Hume, *The History of England VI*, (Indianapolis: Liberty Fund, 1983), pp.524-525.

의 폐위로 인해서 겪었던 앞선 혁명의 혼란은 빗겨가게 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군주정의 외양을 벗어던지지 않고 공화정을 수립한 영국이 가장 자유가 잘 실현된 나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자유의 실현 문제와 관련해서 혁명의 논리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 같다. 한편으로 한국사회는 개혁과 혁명의 논리로 앞선 것들을 부정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근대의 한국사회보다 더 급속하게 근대화를 진행한 한 나라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양시양 레짐’의 잔재를 해결하지 못한 프랑스와 비슷한 특징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³⁸⁾ 특히 지적하고 싶은 점은 사회제도의 안정성 문제이다. 제도의 통치가 아니라 인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교체 때마다 통치가 바뀌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러한 급변현상의 연속은 사회를 흔들어 자유의 신장을 촉진하기에는 지나친 혼란을 가져오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혼란은 생활습관과 제도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세습의 관습은 인류사에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진 것이다. 이 세습의 관습을 다듬고 늘려서 사회적 안정의 원리로 만들어 내는 것이 영국적 관행이다. 아버지에서 아들로의 특정한 세습으로부터, 규칙에 따른 왕위계승으로, 나아가 특정한 성격을 갖는 일련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승계(공화주의적인 권위의 승계)에 이르기까지 세습은 원시적 관념으로부터 세련된 관념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발상은 진화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생각된다.

덧붙여 유길준의 『서유견문』에는 권리라는 말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된다. 이 영향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자유는 권리의 쟁취 정도로 이해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이다. 권리는 쟁취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것 또한 근대화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유를 권리의 시각이 아니라 책임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유길준은 또한 ‘법률은 장수이고, 권리는 병졸이다’고 말한다.³⁹⁾ 책임 회피의 습관은 조선의 신분제의 원칙에 기인한 바가 크다. 세종 시대에 있었던 부민고소제 찬반의 논쟁과

38) Bruno Latour, *The Making of Law*, translated by Marina Brillman and Alain Pottage, (Paris: Polity, 2010). 라투르는 프랑스 사법부가 아직 절대왕정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제 1장의 제목(In the shadow of Bonaparte)에서 암시한다. 반면 요즘 사회면을 강타하는 재벌 총수들의 행태를 볼 때 한국은 강력하거나 뛰어나지 못한 왕의 자의적 혹은 폭군적 성격의 통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정치가 사회의 확대경이라는 전제를 갖고 볼 경우이다.

39) 유길준 지음·허경진 옮김, 『서유견문』(파주: 서해문집, 2004), p.142.

그 결론을 볼 때 사회정의의 원칙보다는 신분제의 원칙이 우선했다. 신분제의 원칙을 우위에 두고서 잘못에 대해서 고발은 하게 하면서도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지 않은 점은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에서 책임 회피의 나쁜 관행이 지속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덧붙여 한국의 민법은 권리로부터 권리의 주체와 객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 반면에 웬델 홈즈 판사의 보통법은 책임(liability)의 문제로부터 법을 설명한다.⁴⁰⁾

끝으로 임시정부헌법에는 급진적인 평등의 목소리(第3條: 人民은 男女貴賤及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가 나온다. 앞서 공화정에 대한 설명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라는 말이 함의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한 가지만 지적하면 급진적인 평등의 요구는 때때로 공화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화정의 의의는 계급의 존재와 대립을 전제로 했을 때만 존립할 수 있다. 만일 사회적으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배와 비지배를 말할 하등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사회에는 빈부의 격차와 어떠한 형태의 계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화주의의 정치적 구호는 의미를 잃게 된다. 반면에 민족적 담론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평등과 단결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한 반면, 대외적 불평등을 부각시키면서 내부의 불평등을 숨기는 역할을 하곤 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은 한 목소리의 선언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보인다.

40) Oliver Wendell Holmes, *The Common Law*,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91)

토론문

강진옥(숙명여대)

이병택 선생님의 글은 19세말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의 수용방식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일견 사상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를 연결하는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병택 선생님은 사회진화론의 수용을 통해 확산된 진화론적 사고가 현실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 즉 현실을 수용하는 숙명론으로 기울거나 인간의 노력에 의한 현실 변혁을 주장하는 혁명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진화론적 사고는 숙명론 보다는 인간의 노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혁명을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이해한다. 이 같은 진화론적 사고의 혁명적 방향으로의 전개는 중국과 일본 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체용론을 통해 확인되는데,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을 전제로 한 체용론은 오늘날 인문학의 정신주의로의 경도현상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신주의로의 경도 현상은 왕을 대신해 주권을 상속한 민족을 선형적 이념의 형태로 바라봄으로써, 진화론적 사고라 볼 수 있는 ‘어떻게’를 중심으로 한 방법론적 고민의 부재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진화론적 사고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의 영웅과 같은 정치적 행위자의 강조를 통해, 제도를 통한 통치보다는 혁명과 개혁에 방점을 둔 인치 중심의 한국 정치의 전형성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진화론의 외양을 갖췄지만, 진화론적 사고가 부재한,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는 방식이 공화주의의 수용적 맥락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실천적으로 왕과의 정치적 대결을 통해 자유를 획득하지 못하고, 상황에 떠밀려 왕

정이 폐지됨으로써 서구와 다르게 비지배와 같은 자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오늘날 한국적 공화주의가 자유 보다는 정치의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공동체 중심으로 나아가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해된다. 또한 왕 대신 주권의 자리를 상속한 “느슨한 민족 정체성”이 정치적 구심점으로 역할하지 못함으로써, “권위의 부재와 정통성 수립의 고민과 민족 정체성의 공생 속에서” 한국의 경우 민주공화정의 실존적 의미가 모호해졌다고 비판한다. 즉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의 수용적 맥락이 환경보다는 유기체의 실천적 측면에, 존재보다는 당위에, 자연보다는 역사에, 제도보다는 정치 행위자 중심의 혁명과 개혁에 방점을 두고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진화론에 대한 동아시아의 수용적 패턴이 공화주의의 수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전개된다는 이병택 선생님의 주장은 사상적 공통분모가 없어 보이는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의 연결고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라 생각된다. 더불어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를 수용하는데 있어 보여지는 동아시아의 문제점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치적 문제점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병택 선생님의 통찰은 탁월하다.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들을 제시해, 글의 발전에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이 글은 두 개의 장 안에서 논리적 분절 없이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저자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각 장은 구체적인 세부 제목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정리한 후, 다른 세부 제목 하에서 다음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분절해 정리하면 이 글을 이해하는데 보다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 이 글은 환경과 유기체, 자연과 역사, 존재와 당위등 이분법적 방법론에 기반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이분법적 접근은 하나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상이 수용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맥락을 사장시키고, 단순화하기도 한다. 이분법적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이 글은 동아시아 3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사회진화론과 공화주의의 수용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 동아시아 3국의 역사적 경험은 개별적으로 상이했기에 두 사상의 수용적 맥락에 있어서도 유사성 보다는 상이성이 두드러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연유로 동아시아 3국의 수용적 맥락의 상이성보다

유사성을 제시하는데 보다 더 설득적인 논리가 요구된다. 한 예로 8페이지에서 량치차오의 진화론적 수용의 방식이 한국정치를 포괄한 동아시아의 국가주의로의 경도로 이어졌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량치차오가 한국과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 사료 없이, 중국의 수용 방식이 그대로 한국과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었다는 가정 하에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주장을 보다 더 명료하게 제시할 풍부한 역사적 사료가 요청되는 지점이다.

1

세션

〈발표2〉

구한말이후 한국에서
서구 공화주의의 수용과
입헌정치체제의 지향

신철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토론문 :

김종학(동북아역사재단)

구한말이후 한국에서 서구 공화주의의 수용과 입헌정치체제의 지향

신철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1. 서론

이 논문은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서양 공화주의(공화제) 논의의 내용과 특징을 특히 정치체제 논쟁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한말에 서양으로부터 전해진 사회진화론, 민족주의, 공화주의, 기독교 등의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조선의 세계사적 위치를 짐작하고, 조선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데 도움을 줬다. 특히 국가 통치체제 문제에 있어서, 공화주의 사상은 기존의 군주제를 극복하고 문명사회로 나가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또한 1897년 대한제국 수립이후 독립협회의 의회 개설 요구, 그리고 이런 독립협회의 요구를 공화정치를 꿈꾸고 황제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보수파의 주장을 볼 때, 이미 공화주의가 조선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현실정치의 이념 투쟁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화국(정)의 라틴어 단어인 “res publica”는 고대 로마 공화정의 경험에서 유래했으며, “공공의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공의 것”이란 “사적인 것”, 즉 “가족의 삶의 밖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공적인 일의 영역”을 의미한다(Haakonssen 1995, 569). 보통 공화주의의 의미와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그것을 군주정과 비교하기도 하나(Canovan 1991, 433-4), 사실 군주정의 존재 여부가 공화주의와 근본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Honohan 2002, 1; Maynor 2003, 4). 엄밀하게 말해서 공화주의는 특정한 정치체제의 종류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조승래 2010, 15). 로마 공화정의 수호자였던 키케로는 “res publica”는 어떤 국가형태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공공의 것을 가능하게 할 주체(결국 정체의 문제로 연결됨)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공공의 것 그 자체가 담보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김경희 2007, 123, 134).

그러나 3·1운동이전까지 거론된 공화주의 또는 공화제에 조선인의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원래 서구 공화주의 전통이 발전시켜 온 자유, 법치, 혼합정, 시민의 미덕 등 다양한 원칙과 제도에 대한 이해는 거의 보이지 않고 공화주의를 다만 ‘왕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체제’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 한일합방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공화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데 공감은 있었으나 현실적인 대안으로까지는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1910년 이후에는 (민주)공화제가 국권회복 후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는 하지만, 구한말 공화주의 논의가 반드시 왕정의 폐지로 결론이 날 필요는 없었다. 왕이 존재하면서도 얼마든지 공화주의 정신의 구현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것이다.

왕의 존재 하에 의회 설립을 주장한 사람들도 공화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한말 공화주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 중의 하나는 혼합정으로서의 공화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다면 공화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발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정리하면, 이 논문에서는 구한말 조선인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접한 서구 공화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이것을 조선의 지식인들과 인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2. 3·1운동 이전 정치체제 논쟁: 입헌군주제 vs 공화제

1870년대 개항이후 3·1운동 이전까지 공화주의 또는 공화제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당시 국내에 소개된 공화주의는 국가체제 또는 정

치체제¹⁾로서의 공화제가 주를 이루었다. 즉 ‘왕이 없는 정치체제’의 의미로서 공화주의가 주로 논의되었지,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와 제도인 자유, 법치, 시민의 덕성, 공공선, 혼합정 등에 대한 이해는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화주의(공화제)와 관련하여 언급된 서양 사상가들의 주장들도 깊이 있는 분석과 평가보다는 단순한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 부분 시대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개항이후 3·1운동까지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1910년 한일합방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이 된다. 한일합방이전, 즉 국왕이 존재할 때는 개화파와 계몽 사상가들의 현실적인 대안은 입헌군주제였다. 공화제를 ‘왕이 없는 정치체제’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이해한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공화제를 대놓고 추구하는 것은 너무 혁명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선택이었다. 공화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공감은 존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입헌군주제가 최대치였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후 조선에 왕이 사라지자 국권 회복 후 정치체제로 공화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 1919년 초대 임시정부의 헌법에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으로 명시한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정치체제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1896-8)는 대한제국의 중추원을 일종의 상원으로 하는 의회 설치를 주장했다. 민중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원 설치에는 반대했던 서재필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협회의 주장에 대해서 고종과 측근 신하들은 “대통령을 새로 뽑아서 공화정치를 하라는 말인데”²⁾라며 지나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입장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공화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지향했던 것은 입헌군주제였다.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고 발표한 여섯 가지 조목의 제일항의 내용은 “외국인에게 의지 말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황권을 굳게 할 일이다”³⁾라고 돼있다. 독립협회는 철저하게 대한제국의 황제권을 전제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만큼 한일합방이전에는 공개적으로 공화제를 주장하기 힘들었다.

1) 이 글에서는 국가체제와 정치체제를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적으로 국체를 주권의 소재에 따른 국가형태, 정체를 주권이나 통치권의 행사방법에 따른 국가 통치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서구 정치사상의 역사에서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2) 『매일신문』(1898년 11월 9일).

3) 『독립신문』(1898년 12월 12일).

그리고 당시 합법적인 애국계몽단체였던 대한자강회(1906-7)와 대한협회(1907-1910)도 공화제를 가장 우월한 정치체제로 여겼으나 현실적으로는 입헌군주제로의 변화를 목표로 삼았다. 예외적으로, 비밀조직이었던 신민회(1907-1911)만이 공화정체의 수립을 공식 목표로 삼고 활동하였다. 유영렬은 합법단체 구성원들이 공화정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지 못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당시 전제군주제 아래에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상을 타개하고자 했고, 둘째, 당시 국민 수준이나 사회 분위기 상 공화정체는 무리라고 봤으며, 셋째, 입헌제도 아래서는 군주제와 민주제의 정치적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⁴⁾

1910년대는 공화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였다. 민주공화주의 사상은 한말에 이미 소개된 공화주의 전통에 중국의 신해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더해졌다. 그리고 외국 문물을 접한 인사들의 적극적인 소개와 활동의 결과, 국권이 수복된 이후 채택할 정치체제로서 입헌군주제보다 민주공화제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한일합방이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단체가 신한청년당이다. 1918년에 결성된 신한청년당은 여운형이 대표였고, 김규식, 장덕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당헌에 명시했다.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을 승리하는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발발하는 변화 속에서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 노선을 택하게 된다.⁵⁾ 한편,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광복회는 공화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구한말의 문헌들에 드러난 당시의 국체와 정체에 대한 논의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보편적인 정체 분류는 군주제와 공화제로 나누는 것인데, 군주제는 다시 전제정과 입헌군주제로 세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제를 귀족공화제와 민주공화제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민주제를 공화제와 혼용하는 당시의 용법을 고려할 때 귀족공화제는 제외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구한말 현실적 논의 속에서 의미 있는 정체 구분은 전제정, 입헌군주제, 공화제였다. 1910년 이전에 활동했던 단체들, 예를 들면, 독립협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등의 입

4) 유영렬, 『신편 한국사 43: 국권회복운동』.

5) 한상도, “신한청년당과 공화주의 노선의 정리,” 『신편 한국사 47: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장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제정체, 입헌군주제, 공화제 중에서 전제정체는 결함이 있는 정체이고, 입헌군주제와 공화제는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이 당시 정치적 과제는 군주가 전권을 휘두르는 과거의 전제정치(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군주제)를 어떻게 입헌군주제나 공화제로 바꿀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구 공화주의 사상의 수용

구한말 문헌에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 사상가들의 사상이 이미 소개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몽테스키외, 루소 등의 이름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거론되었던 것이다. 현재의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내용도 일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정확하게 기술되고 있다.

3·1운동 이전의 지식인이나 애국계몽 운동가들이 정치체제를 구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전제정치, 입헌군주제, (민주)공화제로 3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화제를 민주공화제와 귀족공화제로 더 세분하기도 한다. 정치체제를 이런 식으로 3분하는 것은, 구한말 당시의 문헌이 대개 정확한 출처 없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겠지만, 용어의 사용이나 문맥을 고려했을 때 몽테스키외(또는 몽테스키외를 소개하는 2차 문헌)의 영향으로 보인다. 『서북학회월보』 11호는 국가론의 개요를 정리하면서, “몬테스큐(몽테스키외)氏는 共和制, 君主制 및 專制의 三者”로 국가체제를 나눴다고 소개하고 있다.⁶⁾

근대 공화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몽테스키외는 공화주의를 기본적으로 정치체제의 종류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공화정은 인민 전체(민주정) 또는 일부(귀족정)가 주권을 갖는 정치체제이고, 군주정과 전제정은 모두 한 사람이 통치를 하는 정체지만, 전자는 정해진 법에 따른 통치이고 후자는 법이 아니라 통치자의 의지와 변덕에 좌우된다(『법의 정신』 2권 1장, p.10).

6) 『서북학회월보』 제11호 (1909년 4월 1일), 18면.

몽테스키외가 공화정과 군주정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를 기본적으로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봤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민주정과 귀족정을 공화정의 범주 안에 넣었다는 점은 통치자의 숫자라는 통상적인 정체 분류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특히 그가 미덕, 명예, 공포라는 사람들의 정신의 상태와 삶의 방식을 중시했다는 것은 공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⁸⁾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구에서 정치체제 논의의 원류는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는 통치자의 수와 통치자가 정치를 할 때 공익 추구 여부에 따라서 좋은 정치체제를 왕정, 귀족정, 혼합정(입헌민주제)으로, 각각이 타락한 정치체제를 참주정(전제정), 과두정, 민주정(비입헌민주제)으로 분류했으며, 서구에서는 2천 년 이상 정체 분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은 민주정을 민중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종의 타락한 정체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주정에 대비되는 좋은 정치체제 -과두정과 민주정이 섞인 혼합정- 의 원래 명칭은 특이하게도 정체(polity; politeia)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체의 종류를 논하면서 그 중 한 정체의 이름을 똑같이 정체라고 붙인 이유는 이 정체(즉 혼합정)가 정체의 본질에 가장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를 중시했고, 하나의 단순한 정체보다는 다양한 요소가 섞여서 중용을 이루는 정체를 완전히 더 가까운 정체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정을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최선의 정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구한말 시기에 혼합정과 민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서북학회월보』

7) 몽테스키외는 정부의 종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결과로 나타나며, 그것은 또한 정치, 사회적 집단과 제도의 전체적인 총합에 기인한다고 봤다는 점에서 독특하다(Cohler et al. 1989, xxii).

8) 몽테스키외는 기본적으로 공화주의를 정체의 관점에서 바라봤지만, 또한 각 정체의 원칙과 특징으로 공화정은 미덕(virtue), 군주정은 명예(honor), 전제정은 공포(fear)를 들고 있다. 공화국에서 미덕이 사라져서 부패하게 되면 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고 국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법의 정신』, 3권 3장, p.22). 고대 로마 공화국 말기의 경우에서처럼 인민의 미덕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자유를 되찾으려는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몽테스키외는 민주정과 귀족정 모두 미덕이 필요하지만 귀족정에서는 그 필요성의 정도가 좀 약하다고 말한다. 귀족정에서는 귀족의 법에 의해서 다수 인민이 제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족의 제어를 위해서는 미덕이 여전히 필요하다. 군주정에서는 인민이 미덕을 갖기 힘들다. 군주는 사실 혼자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귀족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예와 관직을 줄 수밖에 없다. 귀족들의 명예욕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법의 정신』, 3권 5-7장, pp.25-7). 한편 전제정에서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노예로서 평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명예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게 공포를 불러 일으키면 된다(『법의 정신』, 3권 8-9장, pp.27-8).

12호에는 아리스돌(아리스토텔레스)이 국체를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로 나눴으며,⁹⁾ 혼합제는 “國體의 區別은 아니요 政體의 區別에 不過한다”고 적고 있다.¹⁰⁾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근대이전 서구에서 민주제(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는 역사적 지식이 부족했다. 구한말 서구 정치사상의 전파는 그것의 원전 독해보다는 -근대의 재해석과 인식의 변화가 가미된- 2차 서적의 소개에 의존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키아벨리의 정체 구분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대적인 방법이다. 왕의 존재 여부를 공화주의의 실현 여부의 중요한 변수로 보게 된 것도 마키아벨리가 정체를 군주정과 공화정으로 양분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10년 이전에 애국계몽 사상가들이 공화제의 도입에 신중하고, 국왕파들이 공화제에 극심한 반감을 가졌던 것도 공화정을 ‘왕이 없는 정치체제’라고 협소하게 이해한 탓이 크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제와 공화제는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히 왕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전에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공공선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공화정과 공화주의의 핵심인 것이다.

몽테스키외만큼 근대 공화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루소는 공화정의 의미를 법치가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국가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통상적인 의미에서 군주정의 상대 개념으로 쓰기도 했지만 법치에 더 강조점을 둔다. 루소는 법치가 이루어진다면 군주정도 공화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에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두정, 중우정, 참주정을 ‘무정부’(anarchy)로 지칭하며 공화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정했다(김용민 2016, 176).

그러므로 나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부로 다스려지든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 때에만 공공의 이익이 지배하고, 공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합법적인 정부는 공화제(republicain)다(『사회계약론』 2권 6장, p.50).

9) 『서북학회월보』제12호(1909년 5월 1일), 7면.

10) 같은 글, 8면.

그런데 위에서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특성으로 하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는 다른 말로 일반의지(general will)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의미이다.

루소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통상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군주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군주에게 교훈을 주는 책하면서 인민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공화주의자들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했고(3권 6장, p.89), 학식과 능력 있는 사람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하면서 군주정치와 공화정치를 구분하기도 했다. 따라서 루소의 공화정(공화주의) 논의에는 정치체제로서의 공화정과 국가의 조직과 통치 방식으로서의 공화정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루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다면 공화정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서북학회월보』에 따르면, 루소는 “主權은 常히 人民의게 在한 故로 國體는 唯[오직] 民主制 一이오 政體는 君主制 貴族制 民主制의 三者 分亨한다”고 소개하고 있다.¹¹⁾ 민주주의와 국가의 기원에 대한 루소의 입장을 상당히 급진적으로 해석해서 소개하고 있는 점이 매우 놀랍지만 더 진전된 기술이 없는 것이 아쉽다.

3. 구한말 공화주의 인식의 한계와 서구의 혼합정 전통

구한말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조선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공화주의(공화제)를 주로 ‘왕이 없는 정치체제’로 이해하는 것은 당시 조선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며, 서구 공화주의 이론의 역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정치체제 또는 국가체제로서 공화주의를 인식하는 것이 오류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공화주의 이해의 한 방식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치체제로서의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도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정치체제로서의 공화주의 논의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은 그것이 순수정체가 아니라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들이 섞인 일종의 혼합정(mixed regime)이라는 사실을 놓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다. 혼합정의 기본 아

11) 『서북학회월보』제11호 (1909년 4월 1일), 17-8면.

이디어는, 국가의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헌정질서를 구성할 때 순수한 정체에서 유래하는 해악(폭정이나 무정부 상태)을 피하고 각 정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를 혼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혼합’은 보통 관직을 다양한 사회 집단이나 계급에 분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Morrow 1998, 227). 공화정을 정치체제의 하나로 분명하게 자리 잡도록 만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1장에서 세상의 모든 국가를 군주정과 공화정으로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공화정의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혼합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공화주의 논의에서 이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라는 개념과 본격적인 실현은 고대 로마 공화정이 기원이지만, 혼합정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험은 로마 공화정 이전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의 과도화 경향을 균형과 조화를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 고대 아테네의 혼합정 이론은 고대 로마에 수용되어 공화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면서 공화주의 이론이 탄생하는 데 기여했다(김경희 2007, 114).

근대 공화주의의 기초를 세운 마키아벨리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가 섞여 있는 혼합정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보는데, 로마는 이에 잘 부합하는 도시였다. 리쿠르고스(Lycurgus)라는 위대한 건국자에 의해서 처음부터 혼합정으로 시작한 스파르타보다는 운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로마는 시작이 나쁘지 않았고, 우연한 사태(accidente)에 의해서 좋은 법과 제도를 갖춰가면서 점점 완벽에 가까워졌다(『로마사논고』1권 2장, pp.76-7). 이 때 로마가 완벽에 가까워져 가는 과정은 왕정으로 시작한 로마가 민주적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혼합정으로 변모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후세에 모범이 되는 좋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서양에서 혼합정 이론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인데, 그는 『법률(Nomoi)』에서 현명한 입법자가 법을 만들고 도시의 최선자(aristoi)가 그것을 집행하는 왕정(monarchia)과 민중이 지배하는 민주정(demokratia)이 모든 정치체제의 모체이며, 각각 지혜(phronesis)와 자유(eleutheria)를 특징으로 하는 두 정체가 결합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도시가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법률』693d-e; Strauss 1990, 82). 그러나 플라톤은 왕정과 민주정의 특성이 극단에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플라톤에 따르면, 왕정의 극단적인 사례인 페르시아는 민중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도시에 우애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전쟁이 나서 민중이 필요한 때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¹²⁾ 반면에, 민주정의 극단적인 사례인 아테네는 지혜가 없고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¹³⁾

입법자는 세 가지 것을 목표로 삼고서, 즉 법 제정을 하게 되는 나라가 자유로우며 자체적으로 우애롭고 지성을 갖추게 되도록 입법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위해서 가장 전제적인 나라 체제와 가장 자유로운 나라 체제를 선택해서,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 바르게 다스려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들 곧 전제적인 통치를 하는 유형들과 자유롭게 하는 유형들 각각이 어떤 적도 상태를 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것들에 유달리 번영(eupragia)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그 각각이 극단으로, 즉 한쪽은 노예 상태의 것들의 극단으로 다른 쪽은 그 반대 것들의 극단으로 나아가갈 경우에는, 그 어느 쪽에도 유익함은 없었습니다(『법률』 701d-e).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는 다수의 빈자(평민)와 소수의 부자(귀족)로 구성되고, 각각 빈자와 부자가 주도하는 민주정과 과두정을 기본 정치체제로 본다. 그리고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정체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최선의 정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은 사회의 요소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즉 혼합정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등장시킨다는 점이다. 두터운 중산층이 양 극단의 성격을 완화시킬 때 사회가 안정된다고 본 것이다(『정치학』1265b 33; Morrow 1998, 230-1).

혼합정 이론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폴리비우스(Polybius, BC 200-118)다. 원래 그리스 출신이었던 폴리비우스는 로마에 인질로 잡혀간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로마사』를 집필했는데, 로마 공화정이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

가 각각의 장점을 공공선을 위해서 발휘하고 서로 견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Morrow 1998, 233-4). 그런데 이전의 역사가들과 다른 특징은 정체 순환론에 있는데, 이 이론의 핵심은 모든 순수한 정체, 즉 왕정, 귀족정, 민주정은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순환한다는 것이다(Polybius 2010, 372-8).

서양 역사에서 혼합정은 정의롭고 절제된 권력 사용을 통해서 정체를 쇠퇴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칭송되어 왔고, 마키아벨리도 이러한 전통 위에 있다(Sabine and Thorson 1978, 151). 마키아벨리 당대에는 특히 폴리비우스의 정체 순환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신의 저서들에서 이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다만, 마키아벨리는 혼합정을 통해서 정치체제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로마가 완전해지는 과정을 혼합정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특히 혼합정의 완성 과정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호민관 제도의 신설이었다. 건국 초기부터 로마 공화정이 막 시작될 때까지 이미 왕정과 귀족정의 요소는 갖추어져 있었지만, 아직 민주정의 요소는 부족했는데,¹⁴⁾ 다수의 평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해줄 수 있는 관직인 호민관의 선출로 비로소 혼합정이 완성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화정(공화주의)에 대한 서양의 논의의 역사는 정치체제의 종류로서의 공화주의와 공공선의 실행 여부 같은 통치 방식의 그것이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말 국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공화주의 논쟁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지향함으로써 격렬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의 서양 공화주의 이론의 도입과 적용을 논할 때 이 두 가지 성격을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4. 결론

우리나라에 공화주의 이론이 소개된 지 100년이 훌쩍 넘는다. 공화주의는 단순히 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사적 격랑 속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한 방책의 하나

12) "...우리는 이들이 해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민중에게서 자유로움을 너무 많이 빼앗은 반면에, 전제적인 것을 적절한 정도 이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나라 안에서 우애로움과 공동체적인 것을 말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다스리는 자들의 의사 결정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과 평민을 위해 내려지는 일은 없고, 그들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서 그러게 됩니다."(『법률』697c-d)

13) 그 특징이 시가(詩歌)에 대한 사람들의 옳지 못한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이번에는 아티케의 나라 체제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자세히 말해야만 합니다. 완전하고 일체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가 남들에 의해 적도(metron)를 갖게 되는 지배보다도 적지 않게 나쁘다는 걸 말씀입니다..."(『법률』698 a-b)

14) 민주정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민회가 건국 초기부터 존재했다는 점에서 호민관직의 신설을 민주제도가 추가되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로서 현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문명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공화주의(공화정)가 유력한 대안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공화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한일합방 전후로 크게 나타난다. 한일합방 이전에는 신민회 같은 비밀결사조직을 제외한 합법적인 단체와 언론들은 공화제를 문명국의 기준에 맞는 최선의 정치체제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입헌군주제를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일합방이후에는 (민주)공화제를 국권수복이후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에 반영된다.

이렇게 1910년을 기준으로 공화주의(공화제)에 대한 입장이 크게 갈리는 것은 공화주의를 주로 ‘왕이 없는 정치체제’로 제한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고종이라는 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왕이 없는 새로운 국가를 꿈꾸는 것으로 서로 이해한 공화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다. 1910년 이후로 상황이 급변하고 그것이 대세로 자리 잡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왕의 존재 여부가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한말 조선에서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공화주의 이론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혼합정으로서의 공화주의(공화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화주의의 혼합정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화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왕이 부재하는 정체의 한 종류로 이해하는 것과 정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공선의 추구 자체를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혼합정은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으로서, 정체의 한 종류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 공존이라는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앞으로의 공화주의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 마키아벨리, 니콜로. 강정인, 안선재 역. 2003.『로마사 논고』. 파주: 한길사.
- 마키아벨리, 니콜로. 신철희 역. 2013.『군주론』. 서울: 책마루.
- 루소, 장 자크.『사회계약론』. 2015. 김중현 역. 서울: 팽귄 클래식.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2009.『정치학』. 서울: 숲.
- 플라톤. 박종현 역. 2009.『법률』. 서울: 서광사.
- Montesquieu. 1989. *The Spirit of Laws*. Anne Cohler et al., trans a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ybius. 2010. *The Histories*. Trans. Robin Waterfie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2차 문헌

- 김경희. 2007.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민주와 공화의 변증법.” 『정신문화연구』30집 1호. 113-139.
- 김용민. 2016. “루소와 공화주의.” 『한국정치연구』25집 1호. 167-192.
- 유영렬. 『신편 한국사 48: 국권회복운동』. 국사편찬위원회.
- 조승래. 2010. 『공화주의를 위하여: 공화주의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서울: 길.
- 한상도. 『신편 한국사 47: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국사편찬위원회.
- Canovan. 1991. "Republicanism." David Miller, Janet Coleman, William Connolly, and Alan Ryan, ed.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Political Thought*. 433-4.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Cohler, Anne et al., 1989. "Introduction." in Montesquieu. *The Spirit of Laws*. Anne Cohler et al., trans a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akonssen, Knud. 1995. "Republicanism." Robert Goodin and Philip Pettit, ed.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Honohan, Iseult. 2002. *Civic Republicanism*. London: Routledge.

- Maynor, John. 2003. *Republicanism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Polity.
- Morrow, John. 1998.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 Thematic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Pangle, Thomas and Nathan Tarcov. 1990. "Epilogue."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bine, George and Thomas Thorson. 1978.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4th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 Strauss, Leo. 1958. *Thoughts on Machiavell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rauss, Leo. 1990. "Plato."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 기타

『독립신문』, 『매일신문』, 『서북학회월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본 발표의 목적은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서양 공화주의(공화제) 논의의 내용과 특징을 정치체제 논쟁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데”(p.1) 있다. 그런데 발표자에 따르면, 한말 ‘공화(共和)’ 개념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군주가 없는 정치체제로서의 ‘공화제(republic)’의 의미로만 전래되었을 뿐, ‘공적인 것(res publica)’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 내지 정치사상으로서의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의미는 사상(捨象)된 데 있었다. 발표의 내용 또한 대체로 플라톤 이래 루소에 이르기까지 서양 정치철학에서 정체(政體)로서의 ‘공화주의’와 정치사상으로서의 ‘공화주의’가 구분되어 왔음을 설명하는 데 할애돼 있다. 서양 정치철학에 관해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토론자로서는 본 발표를 통해 서구 공화주의의 역사에 대해 많은 귀중한 가르침을 얻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공화제(republic)와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용어는 구분할 수 없는가? 역사적으로 국왕이 없는 공화제 국가의 성립과 그 사상적 기반으로서의 공화주의 간의 관계는 토론자의 지적 역량을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일단 논외로 접어두기로 한다. 발표자에 따르면, 한말 이래 (아마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화주의 논의에서 부족했던 것은 그것이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가 섞인 일종의 혼합정(mixed regime)이라는 사실을 놓친 데 있다.”(p.6) 그리고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정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공선의 추구 자체를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p.9) 이러한 지적의 이면에는 서구 ‘공화주의’의 본질을 간과한 채, 왕권의 제도적 제한과 같은 지엽적인 정치제도 개혁안을 놓고 내부갈등을 거듭하다가 결국 망국을 초래한 한말 역사에 대한 짙은 아쉬움마저 느껴진다.

그런데 정치사상으로서의 ‘공화주의’를 정치제도로서의 ‘공화제’와 혼동한 것은 비단 근대 한국뿐만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오늘날 서양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공화주의(공화제)를 주로 ‘왕이 없는 정치체제’로 이해하는 것은 당시 조선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며, 서구 공화주의 이론의 역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6쪽) 이러한 혼동의 흔적은 본 발표문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3쪽의 “1910년대는 공화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였다.”는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1910년대는 이미 조선의 망국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식민지 이후의 민족 투쟁의 근거와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단재 신채호는 1908년에 『讀史新論』을 발표해서 처음으로 ‘民族’의 의미를 정의했으며, 특히 ‘정신상국가’와 ‘형식상국가’를 구분해서 후자가 소멸된 이후에도 전자가 유지된다면 그 민족은 사멸한 것이 아니라며 조선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仙敎’, ‘娘家’ 등에서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주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는 말은, 왕실을 부정한 국가체제를 구상했다는 의미인지, 왕권을 제한한 일종의 입헌군주제를 구상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망국 전야(前夜)의 시대상황에서 무언가 새로운 ‘공적인 것’이 발견되었으며 그 대의를 위해 투신한 조선인들이 늘어났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발표자의 주장대로 정치체제로서의 ‘공화주의’와 정치적 태도 내지 사상으로서의 ‘공화주의’가 같지 않은 것이라면, 양자를 별개의 용어로 구분하는 것이 한말의 개념적 혼란을 극복하고 당대의 정치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한말 ‘공화(共和)’ 개념의 수용과정에서 그것이 전적으로 ‘왕이 없는 정치체제’의 의미로 이해된 이유는 무엇인가?

발표자가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이 당시 국내에 소개된 공화주의는 국가체제 또는 정치체제로서의 공화제가 주를 이루었다. 즉 ‘왕이 없는 정치체제’의 의미로서 공화주의가 주로 논의되었지, 공화주의의 핵심가치와 제도인 자유, 법치, 시민의 덕

성, 공공선, 혼합정 등에 대한 이해는 잘 보이지 않는다.”(p.2) 그렇다면 그 이유를 해명하는 것이 앞으로 본 발표문의 주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共和’라는 말 자체가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랜 유래와 전통을 가진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史記』『周本紀』에 따르면, 서주(西周) 시대에 여왕(厲王)이 폭정을 해서 체(歲)로 쫓겨났다. 그 후 14년 간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함께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시기를 공동 집정을 했다는 의미에서 ‘共和’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共和’는 이러한 의미로 통용되었다. republic 혹은 republicanism이 근대 동아시아에서 어떤 경로로 ‘共和’라고 번역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처음부터 ‘共和’가 세습군주가 없는 정체로 이해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¹⁾

이와 함께 ‘공화’ 개념이 수용되었을 당시의 조선의 정치상황에 대한 천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석근에 따르면, 1880년대 중반 이후로 자유주의나 입헌민주주의와 같은 서양의 정치사상이 조선에도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됐지만, 이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전제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동원된 일종의 정치적 수사에 가까웠다.²⁾ 다시 말해서 당시 자유주의나 입헌민주주의 사상의 도입은, 선진사상의 자연스런 전파(diffusion)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전제군주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이뤄진 정치적 행위였다는 것이다. 이후 갑오개혁,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 개혁세력 - 이른바 ‘개화파’ - 이 추구한 개혁의 핵심이 왕권의 제도적 제한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설명은 큰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공화’ 개념이 ‘왕이 없는 정치체제’의 의미로 조선사회에 수용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정치적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예컨대 유길준은 『세계대세론』(1883)에서 정체를 소인정치(小人政治)와 다인정치(多人政治)로 구분한 후, 후자를 다시 ‘군민동치’와 ‘공화정치’로 구별했다. 그리고 공화정치를 ‘군주의 혈통으로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국가 내에 사(士)와 민(民)의 구별이 없으며, 유덕군자(有德君子)를 선출해서 재위 연한을 정하고 만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책을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했다. 군민동치는 입헌군주정을 가리킨다.

2) 김석근, 「개화기 ‘자유주의’ 수용과 기능 그리고 정치적 함의」,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제10집 1호, 2011.

1

세션

〈발표3〉

구한말 개화파의 공화주의 인식과
20세기초 계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수용

- 유길준과 장지연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현철(동북아역사재단)

토론문 :

손병권(중앙대)

구한말 개화파의 공화주의 인식과 20세기초 계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수용 - 유길준과 장지연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현철(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직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화속에 1919년 한국의 거족적 3·1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한국사는 물론 동아시아, 세계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3·1운동을 계기로 사실상 복벽주의를 극복하고 공화주의가 확립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선언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20세기 초반 헌법에 공화제를 명시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민주'라는 수식어와 결합한 '민주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였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민주', '공화'라는 용어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후반이어서 불과 3~40년만에 정부 형태로 공식 명기한 것은 단시일내에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3·1운동 이후 국내외에 수립 내지 선포된 임시정부들이 공통적으로 '민주공화제'를 근대국가건설의 방향으로 추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구한말 이후 당시 지식인이나 정치가들이 '민주', '공화'의 수용과정, 특히 '공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했는가가 커다란 연구대상이다. 실제로 당시 '민주', '공화'의 개념들의 혼재속에 '공화제'를 '비군주제'라는 축소된 의미의 국가형태로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구한말과 계몽운동가 사이에 논의되던 공화제 등의 정치체제론과 국가건설 구상은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한동안 논의되지 못하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

부의 수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 기존 연구에서 신용하(1986)는 1880년대 이후 개화파가 서양의 입헌국가 사상을 받아들여 소개하며 입헌군주제를 지향했고, 독립협회의 소장파들은 입헌공화국의 수립을, 그리고 계몽운동기에 이르러 국권회복의 방안으로 입헌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유영렬(2003), 이승현(2006) 등도 대체로 이런 입장에서 한말 공화제의 수용과정에 주목하였다.¹⁾ 그럼에도 서구의 ‘공화주의’에 대해 개화파와 계몽운동가들을 비롯하여 한국의 근현대 정치가 및 지식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이해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활동하였는가를 연관시켜 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²⁾

한말 개화파의 입헌군주제 구상에서 좀더 나아가 20세기초 본격적으로 공화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지향한 정치단체로서 ‘신민회’가 활동하였다. 신민회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공화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조직이었으며,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교육구국운동, 애국계몽 강연·학회활동, 출판운동, 민족산업 진흥운동, 청년운동 등을 전개하여 기울어가는 국권을 회복하려 시도하였다.³⁾

한국에서 공화주의의 수용 과정에서 독립협회의 활동, 계몽운동가들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907년 고종의 황제양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한국내에서 이를 ‘국망’으로 인식하고 점차 국가·군주·국민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공화제가 수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은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의 영향으로 한층 강화되었다. 일제 강점직후 사라졌던 공화제 논의가 1919년 등장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박찬승(1989)은 한말에 만연했던 입헌군주제론이 공화제론으로 옮겨간 결정적인 계기로 1910년의 망국과 1911년 중국

의 신해혁명을 들 수 있다.⁴⁾

한국에서 ‘민주공화제’의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⁵⁾ ‘민주’, ‘공화’라는 용어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정과 서구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각국의 실제 정치제도간의 괴리 내지 차이는 좀더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예컨대 서구에서 시대에 따라 혼용되어온 ‘민주’, ‘공화’의 개념을 서구와 다른 정치문화적 역사와 경험을 가진 한국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공화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체제로 실현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각 시기별, 주요 인물 및 관련 단체, 임시정부별로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사상사적 배경과 기원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구한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한국의 정치가와 지식인들이 공화주의와 사회진화론을 어떻게 소개하고 이해하였는지 당시 관련된 인물로서 유길준 등 개화파와 장지연 등 계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화’와 ‘민주’ 및 ‘사회진화론’등을 중심으로 당시 국제정치에서 힘의 논리에 기반한 권력정치(Power Politics) 현상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정의’, ‘평화’, ‘인도주의’가 부각되었으며, 한국이 나아갈 정치체제로서 ‘공화주의’를 지향하게 되는 과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 구한말 개화파의 전제군주제 비판 및 서구 공화주의 인식 : 유길준의 경우를 중심으로

1) 신용하, “19세기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 문제와 입헌공화국 수립 운동,” 『한국의 근대국가형성과 민족문제: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1집 (문학과 지성사, 1986); 유영렬,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政體論의 변화과정,” 『國史館論叢』 103 (2003); 이승현, “신민회(新民會)의 국가건설사상: 공화제를 향하여.” 『정신문화연구』 29권 1호(2006).

2) 한국의 근현대정치사에서 공화제와 민주주의가 수용되는 과정을 연구한 것으로서 이동수 편(2013)을, 그리고 한국 헌법에서 공화주의가 수용되고 변천되어온 측면에 대해서는 김동훈(2011)을 참조하기 바람. 최근 구한말 시기 민주, 공화의 수용과정에 대한 연구로서 윤대원(2017)을 들 수 있음.

3) 신민회는 1907년 4월 경 안창호의 주창으로 양기탁·전덕기·이동휘·이동녕·이갑·유동열·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노백린·이승훈·안태국·이시영·이회영·이상재·윤치호·이강·조성환·김구·신채호·이종호·주진수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이와 관련, 박찬승은 중국의 신해혁명이 위안 스카이(袁世凱)의 반동으로 일시 좌절됐지만, 국내외에 있던 한국의 지식인 내지 독립운동가들이 신해혁명에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하기 위해 상해로 몰려들 정도로 충격이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독일혁명 및 러시아혁명 등을 통해 전제군주제인 제정이 붕괴하는 것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아 3·1운동 후 임시정부의 국가형태를 민주공화제로 취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3.1운동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박찬승,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3·1운동 70주년 기념 논문집』,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1989; 박찬승, “한국의 근대국가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보』 200(2008);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돌베개, 2013)를 참조하기 바람.

5) 최근 구한말과 20세기초부터 일제 강점시기 한국에서 민주, 공화주의의 수용과 변용과정을 정리한 연구로서 강정인 외저,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서울: 책세상, 2002), 이동수 편, 『공화화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찾아서』(인간사랑, 2013); 전상숙, 『한국인의 근대국가관 ‘민주공화국’ 재고』(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7)를 들 수 있음.

1) 서구 공화주의의 개념 정의와 주요 내용

이하 본문에서는 박영효, 유길준 등 개화파를 중심으로 서구 근대의회민주주의 정치이념과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모델로 기존의 전제군주제 체제를 개혁하여 근대 정치체제로의 변혁을 시도해온 과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개화파들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관심을 보였던 ‘공화주의’는 서구 정치사 및 사상사적으로 다양한 흐름 하에 전개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서구 공화주의의 개념 정의와 주요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해보겠다. ‘공화주의’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공화제도를 주장하거나 실현하려는 정치적 태도”로 이해되고 있다. ‘공화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양에서 ‘공화(共和)’라는 말은 중국 주나라의 려왕(厲王)이 폭정을 일삼자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대신해 집정하던 시기(기원전 841~828)를 가리키면서 처음 쓰였다. 왕 없이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공화제(共和制)’라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왕정이 아닌 제후들의 집단 통치를 가리키던 ‘공화’가 영어 단어의 ‘republic’의 번역어로 쓰이게 되었다.

‘republic’의 어원은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이다. 이 말의 의미는 로마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가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였다. 키케로는 『국가론(De republica)』에서 “공화국은 인민들의 일이다. 그러나 인민은 아무렇게나 모인 일꾼들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인민이란 시민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인민이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인민인 것이다. 인민은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으며,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키케로는 공동의 정의, 법,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자 정치공동체로서의 공화정은 혼합정(混合政, mixed constitution)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혼합정의 관점에서 볼 때,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의적 지배 혹은 주종적 지배 관계를 제어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에 있다. 그런데 타인에게 예속 받지 않을 자유는 정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공간을 점유했을 때에만 보장된다.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

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왜 공화주의가 중요성을 띠는가와 관련하여, 그것은 군주제의 독재 경향을 제어하려는 노력이건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파편화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이건 간에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공고화를 위한 시도였다. 이러한 공화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공화주의는 고정되고 화석화된 하나의 ‘주의’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일 보편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현재성, 현장성, 맥락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처럼 공화주의의 개념은 정치투쟁의 도구로, 대체로 귀족이나 시민들이 왕의 전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벌인 투쟁에서 사용되었다. 공화주의 운동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귀족들이 중심이 된 경우도 있고, 왕과 귀족의 공동 통치에 반대해 중산층, 중하층 인민들의 권리와 정치 참여를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공화주의를 주장한 이들은 대체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힘의 균형이 무너져 전제정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으로 공화주의자들은 견제와 균형, 양원제, 권력 분립, 시민의 정치 참여 등을 제시했다.⁶⁾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정치사에서 공화주의는 군주제에 대한 저항의 논리였다.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시민들이 군주의 자의적인 일인 통치에 대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치 체제, 즉 공화제를 주장했던 것이다.⁷⁾

2) 구한말 개화파의 군권 견제와 근대 서구 정치이념의 수용

개화기 조선에서 군주제도에 관한 논의 양상을 보면, 크게 전통적 군주제도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시도하려는 입장과, 제도적으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군주제 자체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입장 등으로 구분된다. 19세기 개화기 조선에서 상소문 등에 나타난 정치개혁론의 초점은 당시 군주인 고종(高宗)을 비

6) 이상의 공화주의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김경희(2009), pp.11~25 참조.

7) 김경희(2009), p.13. ‘공화주의’라는 개념의 정의와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논의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김경희(2009); 세실 라보르드·존 메이너 지음, 곽준혁·조계원·홍승헌 옮김(2009); 인병진(2007)을 참조하기 바람.

판하면서, 군주의 권한과 위상을 어떻게 재조정하는가의 문제였다. 그 예로서 1880년대초이후 재야의 유학자들은 상소문을 올려 현재의 군주가 통치자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었으며, 개인적으로 수양에 힘쓰고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면서, 군주의 독단적이며 편파적인 인사정책이 시행되며, 특히 민씨(閔氏) 일파와 그 추종자들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따른 폐해가 심한 점을 비판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유학자들은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어진 신하의 등용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정치개혁론의 대두 배경에는 전통 유교 정치이념 하에서 사회적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군주·신·부·자 등 각 구성원이 자신의 도리와 직분을 수행해야 하며,⁸⁾ 누구보다 군주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들 유학자들은 전통적인 제도 하에서 그동안 재상들에게 부여된 정부 관리의 인사권까지 군주가 자의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확대된 군권을 견제하였다.

19세기 후반 당시 고종과 주변 권력층에 대한 비판과 정치개혁의 촉구는 박영효, 유길준 등 개화파에게도 공감되는 문제였다. 박영효는 「1888년 상소문」의 전반에 걸쳐, 정치개혁은 군주와 관료들의 수신(修身)에서 비롯되며, 우선 군주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여 시비를 판별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박영효는 현실정치의 커다란 폐단으로서 신하들이 군주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민(民)을 괴롭히며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며, 뇌물과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관리들을 축출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⁹⁾

이상 '군주의 인사정책과 관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보면, 유학자들과 개화파 모두 '전제 왕권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을 지니며, 현실 정치에서 민씨(閔氏) 세력과 고종의 심복 세력의 실각을 의도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유학자들은 기존의 정치제도의 틀 하에서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서 재상 등 관직에 종사하는 관료들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 왕권을 견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박영효 등 개화파는 서구 근대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정부 관료 중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비롯하여 평민출신이지만 신학문을 공부한 세대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

의 민(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개혁정부의 제도적 틀 하에서 왕권을 견제할 것을 구상하였다.

그 예로서 김옥균과 박영효 등 개화파는 1884년 12월 갑신정변 당시 14개 조항의 혁신정강을 발표하고 개혁을 추진해나갈 때 정부 내의 권력분립의 구체적 방법으로 서'왕실과 내각을 구분'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 후 박영효는 고종에게 올리는 「1888년 상소문」에서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왕실과 내각을 분리시켜서, 군주의 위상을 왕실 및 종묘사직을 보호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에 해당되는 직책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하였다.¹⁰⁾

박영효는 서구 근대국가의 여러 정치체제 중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미국의 공화제에 주목하였다. 특히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民)이 전제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창출하였던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 미국의 공화제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영효의 「1888년 상소문」을 보면 미국에서 공화제로의 변혁은 각 개인이 자신의 안락함, 자유 및 경제적 기반 등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서 저항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미국인들이 영국의 가혹한 정치에 대항하여 이전까지의 수동적이며 전통적인 관습과 사유에 머물러 있던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가진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전하기 위하여 식민지배에 항거하였다. 바로 이러한 미국인들의 혁명적 에너지가 바로 미국이라는 자유국가를 건설하였으며, 근대국가로 나아가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았다.¹¹⁾

1880년대에 개화파는 조선의 민의 현실이 서구의 민과 같은 상태가 아니므로 서구의 정치제도를 즉각 채택할 수 없다고 보면서, 민의 즉각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리하여 개화파로서는 조선의 현실에서 서구식 시민혁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민(民)의 정치 참여를 당장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 대신 개화파는 민의 잠재력을 키우며 정치의식을 각성시키는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친 후에 정치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¹²⁾

10) 「1888년 상소문」 전문, 294쪽 하단.

11) 「1888년 상소문」제8조, 309쪽 하단.

12) 박영효의 경우에도 「1888년 상소문」에서 군주의 권한을 기존의 '君之專權'에서 '君權有定'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이를 약간 감소하며(少減君權), 상대적으로 민이 '當分の自由'를 갖도록 함으로써 문명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1888년 상소문」 제6조, 306쪽 상단.

8) 박충석·유근호(1995), pp.11~12.

9) 「朝鮮國內政ニ關スル朴泳孝建白書」, 日本 外務省 編, 1993. 『日本外交文書』第21卷, 문서번호 106(이하 「1888년 상소문」로 약칭함), 전문, 294쪽 상단- 296쪽 상단.

3) 유길준의 입헌군주제 추구하고 공화제의 소개

이하에서는 19세기 후반 한국의 근대정치학자의 효시이자 대표적인 개화파 지도자의 한 사람인 유길준(兪吉濬)이 서구의 공화주의를 어떻게 소개하고 이해하였는가를 그의 저작과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유길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서구의 다양한 정치사상과 이론의 소개, 수용과 조선의 현실을 감안한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유길준의 정치체제 구상을 연구하여 그가 문명개화론을 수용하고 군민공치(君民共治)론을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길준이 서구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현실을 고려한 입헌군주제를 추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¹³⁾

당시 유길준 등 개화파가 정치권력의 분립을 구상하고 입헌군주제를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의 현실정치에서 전제정치의 폐단이 문제시되는 가운데 일본과 서양을 통해 입헌군주제 등 서구의 근대적 정치제도들이 상세히 소개되었던 지적 분위기가 주요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메이지유신 초기 일본의 경우를 보면, 문명개화론을 주창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세계 각국의 정부를 ‘입군(立君, monarchy), 귀족합의(貴族合議, aristocracy) 및 공화정치(共和政治, republic)’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본 문명에 편리한 것이면 정부의 형태 구분에 매달리지 말고 그 실(實)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⁴⁾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1868년에 출간된 「입헌정체략(立憲政體略)」에서 세계 각국의 정체를 자세히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그의 구분에 의하면 군정(君政)에는 군주천제(君主擅制), 군주전치(君主專治), 상하동치(上下同治), 또는 군민동치(君民同治)들이, 그리고 민정(民政)에는 귀현전치(貴顯專治), 만민공치(萬民共治)들이 해당되었다.¹⁵⁾ 이와 같이 서구 정체를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

본 지식인들은 영국을 모델로 한 ‘군민동치 또는 입헌국회’를 선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유길준이 미국 방문, 그리고 일본 서적의 독서 등을 통해 당시 서구의 입헌군주제 등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서구의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관심과 소개는 조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1880년대 초 박영효와 유길준 등이 창간작업에 참여한 「한성순보(漢城旬報)」에서는 영국의 입헌군주 정체와 미국의 공화정치가 상세히 소개되었다. 당시 「한성순보(漢城旬報)」에 소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서구 근대 정체의 특징은 권력분립에 있으며, 이들 정체가 주권재민(主權在民)과 국민의 동의에 의거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권력분립제도와 입헌군주제도에 대해 조선 내 논의가 소개와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식적으로 이의 적극적 수용을 주창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

그 후 유길준은 1883년 7월 민영익(閔泳翊)을 전권대신으로 하는 보빙사의 수행원 자격으로 미국으로 떠났으며, 1883년 9월부터 10월까지 미국 각지를 시찰하였다. 두 달 간의 미국 시찰 일정을 마친 후 보빙사 일행이 귀국한 것과 달리 유길준은 1883년 11월부터는 매사추세츠주 셸럼(Salem)시 피바디(Peabody)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모스(E.S. Morse) 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다.

그 후 유길준은 1884년 9월부터 매사추세츠주 바이필드 내 덤머아카데미(Dummer Academy)에 입학하였다. 유길준은 모스로부터 사회진화론을 비롯한 근대적 학문을 익히면서 사상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또한 유길준은 재학시절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체험하였으며, 미국의 법도와 예절을 알게 되고 학교제도, 공업, 상업, 군비, 학문, 법률, 조세 등의 법규를 살펴서 미국 정치의 대강을 이해하게 되었다.¹⁶⁾

이와 같이 유길준(兪吉濬)은 1880년대 초 일본과 미국 유학시절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모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유길준은 공화주의 등 서구의 정치사상이 일본에 소개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여 19세기 서양의 문명론을 파악하였다. 유길준의 경우, 1880년대 후반에 작성한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 세계 각국의 정체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당시 조선의 정체는 ‘군주명령체제’에 해당되는

13) 이에 대해서는 김도형(2014), pp.212-344, “제3장 문명개화론의 문명관 변화와 유교 비판”; 정용화(2004)를 참조하기 바람.

14) 福澤諭吉, 「西洋事情」初編(1867), 卷之一「備考政治」卷之三「英國政治」, 慶應義塾編, 「福澤諭吉全集」第1卷(東京:岩波書店, 1958), pp.289-290, 370-373.

15) 加藤弘之, 「立憲政體略」(1868), 吉野作造 外編, 「明治文化全集」第七卷 政治篇(東京:日本評論社, 1929), pp.17-23. 1873년 8월에 간행된 미츠클리 린소우(箕作麟祥)의 『태서권선후몽후편(泰西勸善訓蒙後篇)』은 미국인 윈스로우(H. Winslow)의 『도덕철학(道德哲學)』(1866년 출판)을 초역한 것으로서, 이 책에서는 정체(政體)를 공화정치(共和政治), 입군정체(立君政體), 군주전치(君主專治)로 구분하였으며, 미국의 공화정치의 관점에서 자연권(自然權)에 기반한 인민의 자유를 서술하였다. 澤大洋(1993), pp.99-100에서 재인용함.

16) 한철호(2009), pp.19-20.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서유견문」의 “정부의 종류”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정치체제를 소개하였다.¹⁷⁾

- 첫째, 임금이 마음대로 하는 정치체제이다.(원문: 君主의 擅斷하는 政體)
- 둘째, 임금이 명령하는 정치 체제이다. (원문: 君主의 命令하는 政體 또는 壓制政體라고 한다)
- 셋째, 귀족이 주장하는 정치 체제이다(원문: 貴族의 主張하는 政體).
- 넷째,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체제이다.(원문: 君民의 共治하는 政體 또는 立憲政體).
- 다섯째, 국민들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체제이다(國人이 共和하는 政體 또는 合衆政體라고 한다).¹⁸⁾

위에서 소개한 서양의 여러 정치 체제 중에서 유길준은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체제(군민의 공치하는 정체 또는 입헌정체)”를 선호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는 그 제도가 공평하여, 조그만 사심도 개입할 수가 없다. 국민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나라의 정령과 법률을 국민의 공론에 따라 시행하니, 사람마다 그러한 의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기를) 도리어 귀찮아할 정도이다. (중략) 정부에서 정한 제도는 임금과 국민이 함께 지켜 감히 이를 범하는 사람이 없고,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를 새로 정하면 임금과 국민이 함께 지키기 때문에, 폭군과 간신이 서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포악한 정치나 가혹한 법령을 자행할 수가 없다.”¹⁹⁾

17)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俞吉濬全書 一西遊見聞」(일조각, 1971), pp.161-165. 「西遊見聞」의 현대문으로의 인용은 유길준 지음,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조선 지식인 유길준, 서양을 번역하다」(서울: 서해문집, 2005) (이하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으로 약칭함) p.168을 원용함.

18) 이상의 내용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pp.169~172 참조.

19)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俞吉濬全書-西遊見聞」 1권, pp.168~169.;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pp.174~175 참조.

유길준은 ‘국민들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체제’(국민〈國人〉이 공화〈共和〉하는 정체〈政體〉, 공화제)가 세습하는 임금만 없을 뿐이고, 대강은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군민의 공치하는 정체, 입헌군주제)와 같다고 보았다. 유길준은 각국의 정치체제를 비교해보면,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입헌군주제)가 가장 훌륭한 규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길준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정치체제가 형성되어 왔음을 강조하였다. 즉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국민들의 풍속과 나라의 형편을 묻지 않고 그러한 정치체제를 취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한 나라의 정치체제란 오랜 세월을 걸쳐 국민들의 습관이 된 것이다.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운 것은 언어를 바꾸기 어려운 것과 같다. 급격한 소견으로 헛된 이치를 숭상하고, 실정에 어두우면서도 개혁하자고자만 주장하는 자들은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과도 같다. (그와 같은 것은) 임금과 나라에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²⁰⁾ 유길준은 구체적으로 당시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높이 평가하였다. 즉,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영국의 정치체제가 가장 훌륭하고 잘 갖추어져 있어 세계 제일이라고 불린다. 세금과 정령을 의논하는 대신은 국민들의 천거로 임명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함께 다스린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²¹⁾

이상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80년 중후반이후부터 1890년대 초반까지 조선의 정치상황과 일반 국민들의 문명화된 정도를 감안할 때, 공화주의는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유길준은 공화제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군주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들을 문명화시키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사실상 그 전단계로서 요청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그의 고뇌는 「서유견문」에 이어 1890년대 후반이후 「정치학」에서 계속되었다. 유길준의 「정치학(政治學)」은 전문적인 정치학 교과서로 기획된 것으로서 국가론, 정치사, 정치사상사 등 다방면에서 정치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한국 최초의 정치학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치학」은 미완성인 상태로 중단되어서 출간에까지 이를 수 없어 확정되지 않은 초고상태의 원고였다. 유길준이 쓴 「정치학」의

20)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p.176.

21)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p.177.

집필시기에 대해 유길준의 일본 망명시기에, 즉 1896년부터 1907년 사이에 쓰여 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책 「정치학」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라트겐(Karl Rathgen)이 도쿄제국대학에서 행한 강연을 그의 제자인 리노이에 류스케와 야마사키 데쓰조가 일본어로 번역하여 1892년(메이지 25)에 출판한 책을 유길준이 다시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²⁾ 또한 초고의 내용은 블룬츨리(Bluntschli)의 「일반국가학(Allgemeines Staatsrecht)」를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가 「국법범론(國法汎論)」(1872~74년)에서 일본어로 번역한 부분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²³⁾

「정치학」에서는 국체의 역사적 분류로서 고대국가에는 가족국가, 신권국가, 시부국가, 봉건국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근세국가에는 근세천제군주제, 입헌군주제, 대의공화제 및 연방제의 4형태로 구분하였다.²⁴⁾ 그중 대의공화제에 대해 「정치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나를 국민이 모두 직접 입법에 참여하며 행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공화국과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이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권과 감독권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치학」에서는 근세 구미의 공화국이 대체로 이와 같다고 하면서, ‘제3항 대의공화제’에서는 근세의 대의공화제를 설명하였다.

근세의 대의공화제는 종류가 매우 많으나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서 미합중국, 스

22) 김학준(2000), pp.61~63. 유길준의 「政治學」의 구성과 특징, 이론 등에 대한 설명은 김학준(2000), pp.60~83을 참조하기 바람.

23) 韓錫泰 譯註, 「政治學」(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p.5. 「政治學」은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가 편집·간행한 「俞吉濬全書」 제4권 「政治經濟編」(일조각, 1971), 397-767쪽에 수록되었으며, 원문은 흘림체의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었음. 본문에서는 이를 한석태가 현대문체로 번역하고 각주를 붙인 俞吉濬 著, 韓錫泰 譯註, 「政治學」(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이하 「政治學」으로 약칭함)에서 인용하고자 함. 블룬츨리(佛雲抽利, Bluntschli, Johann Kasper)는 독일의 공법학자로서 취리히에서 출생하였으며, 베를린과 파리에 유학하여 취리히, 뮌헨, 하이델베르크대학의 법학교수를 역임하였다. 블룬츨리는 한때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정치운동에도 간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국가학, 특히 국가유기체설을 정리한 업적이 크며, 그의 저서가 일본의 정치학계에도 소개되어 큰 영향을 끼쳤다. 「政治學」, p.38 각주 12) 참조.

24) 이에 해당하는 ‘제3항 대의공화제(代議共和制)’는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俞吉濬全書」 제4권 「政治經濟編」(일조각, 1971), pp.653~667에 해당되며, 현대어 번역문은 韓錫泰 譯註, 「政治學」, pp.111~116을 참조.

위스 및 프랑스의 공화제를 들고 있다. 이어서 이들 세 나라의 발달상을 서술한 후, 공화국이 보통 채용하는 원칙을 언급하였다.²⁵⁾

이어서 유길준은 공화제의 성립과정과 그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무릇 공화제의 원리는 인민 전체를 주권의 본체로 삼고 각개 인민으로서 주권자를 삼지 아니함으로 소수는 반드시 다수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겪어보지 않은 나라에서는 소수자가 종종 다수자에 따르지 않으려 함으로 이 제도를 급격히 모방하고자 할 때는 비상한 위원을 만들게 된다.”²⁶⁾

공화제의 수용에 대한 유길준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정치학」에서는 “정치적 자유는 문명한 인민에게 필요하나 미개한 인민에게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헌정체를 문명한 인민에게 적당하나 미개한 인민에게는 적당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공화제가 구미의 문명제국에서는 인민의 복록을 보호해 줄 수 있어도, 남미의 반개(半開)한 제국에서는 폭력과 억압을 불러 도리어 과인제(寡人制-과두제를 말함)보다도 더 무용한 것이 아닌가. (중략) 정체의 좋고 그름은 특정한 국가에 대해 특별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은 즉, 개개 국가에 통용하여 일률로 시비를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길준의 「정치학」에서는 국체의 형식은 각국의 자연적, 사회적, 교화적 요소 및 역사적 발달 등 일체의 각종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각국의 헌법은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각기 상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²⁷⁾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군주체제의 변혁을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유견문」이 쓰여진 1880년대 후반 당시 조선에서 공개적으로 군권 감소 내지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거나 군주인 고종(高宗) 앞으로 상소를 올려서 이를 건의한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은 거의 없었다. 당시 조선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군권 감소나 입헌군주제를 주장

25) 이상의 내용은 「政治學」, pp.111~112을 참조. 미합중국제도, 스위스공화국 및 프랑스공화제가 수립된 역사적 과정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 대해서는 「政治學」, pp.112~114을 참조하기 바람.

26) 「政治學」, p.114.

27) 「政治學」, pp.49~50.

할 경우 주창자가 매우 커다란 정치적 부담과 위협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럼에도 유길준은 근대국민국가를 지향한 정체개혁으로 나가는 과도기로서 군주의 권한을 감소시키며 민의 권리와 자유를 증대시킨다는, 소위 입헌 군주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국왕의 전제와 척족의 국정간섭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유길준은 1894-95년 갑오개혁시기 일련의 제도개혁을 통해 봉건적 군주전제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의도하였다.²⁸⁾ 갑오개혁당시 유길준 등이 참여한 군국기무처의 활동은 크게 기존의 통치권력 구조의 변경을 통해 왕권제한과 내각중심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²⁹⁾ 이러한 개혁을 통해 조선에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고안되어 시도되었으며, 점차 군권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갔다.

그러나 갑오개혁 당시 군주인 고종은 자기 주위에서 '군권 감소' 내지 '공화제'라는 단어가 거론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이러한 점을 추측하게 하는 예로서 갑오개혁 당시 김홍집 등이 군권 견제를 시도하자 이에 대해 고종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1895년 양력 5월 17일 어전회의에서 고종은 어느 나라나 국가 통치의 대권이 군주에게 있으며 정부 대신들이 군주인 자신의 명령을 받들어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 나라에 군주가 없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럴 경우 고종 자신은 군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김홍집 등 정부 대신들을 비난하였다.³⁰⁾ 결국 갑오개혁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군권의 제한을 통한 입헌군주체제로의 개혁을 거부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인사들을 중용하였다. 이와 같이 구한말 서구의 공화주의라는 하나의 이상적 모델·이념과 조선의 전제군주체제의 현실정치간의 괴리, 군주인 고종과 내각의 구성원인 개화파간의 갈등과 대립양상, 그리고 일본 등 외세의 개입이라는 또 다른 압력 내지 위기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나마 입헌군주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28) 김영작·윤순갑(2005), pp.577-585.

29) 갑오개혁시기 유길준,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및 박영효 등 개화파의 정치개혁 구상과 활동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왕현중(2003); 유영익(1996); 정용화(2004), pp.89-97; 김현철(2015)을 참조하기 바람.

30)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7권 (서울: 시사문화사, 1988), pp.24-25, 1895년 5월 22일, 井上-陸奥, (16) “機密 第56號, 趙軍部大臣 進退問題로 內閣이 붕괴될 지경에 이른 건”

3. 20세기초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의 수용경로와 특징: 장지연의 경우를 중심으로

1905년 11월 을사조약의 체결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화될 운명에 처하자, 조선의 지식인과 정치가들은 급박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동하에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 진출에 어떻게 대처하여 국권회복을 도모할 것인가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 시기 한국에 전래된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의 영향에 대해 제국주의 논리의 수용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더불어 근대국가형성을 위한 실력양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³¹⁾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이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에서처럼 강자의 이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이해되었다. 반면 장지연 등 계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약소국 한국이 국제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왜 약자가 되었으며, 사회진화론을 원용하여 약자인 한국에서 왜 근대화와 문명화가 필요한지를 설명하였다. 이시기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은 약자가 스스로 강자가 되는 것을 돕는 이론으로 변용되어 수용되는 측면도 띠었다.

이하에서는 구한말 및 20세기초 한국에서 사회진화론 수용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위암 장지연(韋庵 張志淵) 등 계몽운동가가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그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였으며, 조선의 독립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였는가를 살펴보게 된다.³²⁾

1) 구한말 및 20세기초 한·중·일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과정과 그 특징

일반적으로 사회진화론은 넓은 의미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생활에 적용시킨 이론으로서 보며, 좁은 의미로는 생물학적 기반위에서 사회적, 인종적 불평등

31) 이시기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정에 대한 평가의 자세한 내용들은 신연재(1991); 전복희(1996); 최기영(2003); 김석근(2004)을 참조하기 바람.

32) 장지연 등이 주도한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 등 1900년대초 주요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결성과정과 참가자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 대해서는 박찬승(1992)를 참조하기 바람. 사회진화론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계몽운동가의 정치사상을 살펴본 기존 연구의 예로서 전복희(1993), 우남숙(1999)을 들 수 있음.

을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지칭한다.³³⁾ 원래 사회진화론은 서구의 산업사회에서 부르주아 시민계급과 노동자 계급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던 19세기 말경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서구 산업국가들에서 사회진화론은 강자 또는 힘있는 자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약자의 패배를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는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회진화론은 한, 중, 일 3국에서는 그들 국가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입장과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이면서 전래되었다.

먼저 일본에 진화론이 처음 소개된 것은 마츠모리 다네야스(松森胤保)가 생물진화에 관한 『구리사언(求理私言)』을 발간한 1875년경이다. 스펜서(Spencer), 기조(Guizot), 버클(Buckle)의 영향으로 1870년대 중반부터 일본 지식인사이에 진화론적 유물론이 널리 유포되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모두 기계적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근거위에서 도덕적 원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1877년 모스(Edward Sylvester Morse)가 행한 일련의 강연으로 진화론적 유물론이 크게 알려졌다. 당시의 대표적 자연과학자인 이시카와 치요마츠(石川千代松)가 모스의 강의를 정리하여 1883년 『동물진화론(動物進化論)』을 번역 및 발간하였다. 위 책의 목차 중에 “인위 도태, 자연 도태의 증설(人爲淘汰, 自然淘汰ノ証說)”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다윈의 진화론의 키워드인 ‘자연도태(自然淘汰)’는 ‘natural selection’의 번역어로서, 19세기 후반 일본 사상계에서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다. 이러한 유행은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가 『인권신설(人權新說)』(1882)에서 당시 사회나 역사를 분석하는 개념으로서 ‘자연도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위 책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원용하여 사회와 역사에서의 ‘우승열패’를 설명하였다. 그는 ‘상등평민(上等平民)’이라는 주장을 통해 사회의 ‘우자(優者)’가 ‘열자(劣者)’인 다수 인민을 지도하고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³⁴⁾

서구 학계의 진화론이 당시 일본에서는 생존경쟁(生存競爭)과 자연도태(自然淘汰)가 우승열패(優勝劣敗)와 적자생존(適者生存)으로 환치되어 최신의 과학적 진리

이자 비판의 여지가 없는 기본원리로 통용되었다. 이렇게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당시 일본의 정치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 입헌정치와 천부인권설을 주장해온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가 우승열패가 사회의 기본원리라고 간주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의 사회진화론은 국가유기체설과 결합되어 메이지헌법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천황의 권위와 그 관료지배를 강화해주는 이론으로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1890년대이후 일본에서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등장하게 된다.³⁵⁾

한편,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은 일반적으로 1890년대 중엽에 수용되었으며,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옌푸(嚴復)가 토머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의 저서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를 『천연론(天演論)』으로 번역하여 1898년 출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옌푸(嚴復)는 1895년 『직보(直報)』에 실린 “원강(原強)”이란 글에서 스펜서, 헉슬리 등의 사회진화론을 소개하면서, 청일전쟁에서의 패배가 힘의 부족에 기인하였으며, 그 힘의 원천이 서구의 부국강병정책에 있으며, 서구의 부국강병의 원천이 바로 사회진화론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옌푸는 헉슬리의 self-assertion을 ‘자영(自營)’으로, self-restraint를 ‘극기(克己)’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옌푸에 의해, struggle for existence가 ‘물경천택(物競天擇)’으로, survival of the fittest가 ‘우승열패(優勝劣敗)’로, evolution이 ‘천연(天演)’으로 번역되었다.³⁶⁾

량치차오(梁啟超)는 일본 망명시절 카토 히로유키의 사상, 즉 국가주의적 사회진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후 중국의 사회진화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량치차오는 『시무보(時務報)』의 창간호(1899.8.9)에 실린 “변법통의(變法通議)” 서문에서, 변화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후 량치차오는 『시무보(時務報)』를 통해 사회진화론을 전파해나갔다. 량치차오는 『시무보(時務報)』26호에서 위의 옌푸(嚴復)와 천연론(天演論)을 소개하면서, 군(君-집단)이 인간 존재의 필수조건임을 내세워, 인간생활에서 개인보

33) 사회진화론의 소개와 한중일 3국의 수용 경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전복희(1996), 최기영(2003), 김석근(2004), 우남숙(1999)를 참조하기 바람.

34) 이상의 내용은 야나부 아키라 저, 서혜영 역(2004), pp.135-140 참조.

35) 신연재(1991), pp.6-7, 54-59.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에게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신연재(1991), pp.69-112를 참조하기 바람.

36) 신연재(1991), pp.8-9, 59-61. 19세기말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정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조경란(2003)을 참조하기 바람.

다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량치차오는 집단이 진화적 생존경쟁의 기본 단위이며, 변화는 집단생존의 기본 수단이라는 이해하에, 중국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자기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전래 과정을 거치면서, 량치차오가 소개한 사회진화론은 다음과 같이 청말 사상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첫째, 중국 정치의 목표를 집단의 힘과 부강으로 변화시켜, 중국 특유의 천하(天下) 관념을 쇠퇴시키고 대신 국가(國家) 관념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교육의 제1보는 정당한 목표, 즉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 개혁과 경쟁의 가치를 부각시켜나갔다.³⁷⁾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이 전래되는 경로는 1880년대에는 일본, 그리고 1890년대이후로는 주로 중국을 통해서였다. 유학자들의 경우, 중국의 저작물을 통해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였다. 초기의 전래과정을 보면,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길준(兪吉濬)이 1880년대초 일본과 미국 유학시절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과 모스로부터 진화론에 관하여 영향을 받았다. 1895년에 발간된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는 경쟁의 내용이 소개되면서, 인류는 미개 → 반개화 → 개화(문명)의 방향으로 진보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을 통해 수용한 사례로서, 윤치호의 경우 미국 유학 중 영국과 인도간의 관계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적 현실로 개탄하였다. 그는 당시 국제정치 현실을 지배하는 원리는 정의가 아니라 힘이므로, 서양의 모델에 따른 문명화의 실현을 통해서 강자가 되는 것만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조선이 생존하는 길이라고 보았다.³⁸⁾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목격한 후, 한국내에서 사회진화론에 관한 내용이 좀더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독립신문의 경우, 제국주의를 생존경쟁의 표본으로 합리화하였으며, 역사를 생활유지와 종족보호의 과정으로서, 또한 경쟁을 종족보호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³⁹⁾

37) 신연재(1991), pp.61-64. 량치차오(梁啓超)에게서 나타나는 자강의 민권과 국권론, 유기체론적 국가관 등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신연재(1991), pp.113-153를 참조하기 바람.

38) 정낙근(1993).

39) 『독립신문』 1896년 7월 4일자, 신연재(1991), pp.64-66에서 재인용함.

20세기초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의 전래과정을 보면, 이를 수용하는 지식인의 교육 배경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일본, 미국 등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의 경우 사회진화론을 진보의 논리로 인식하여, 조선의 문명화를 위해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유교적 교양에 입각한 박은식, 장지연 등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유교개혁과 자강을 통해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⁴⁰⁾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사회진화론이 수용되는 경로로서 량치차오(梁啓超)의 영향이 매우 컸다. 자강(自強)을 위하여 전면적 변법을 주장한 량치차오의 『무술정변기(戊戌政變記)』가 1897년 『독립협회보(獨立協會報)』에 소개된 이후, 량치차오가 일본 망명시절 발간한 『청의보(淸議報)』, 『신민총보(新民叢報)』 및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등이 전래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이후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이 민족주의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제국주의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진화론이 원용되는 경우가 많았다.⁴¹⁾ 당시 진화론을 소개한 논설로서, 『태극학보(太極學報)』제4호(1906.11.24)에 편집인 장응진(張膺震)의 “進化學上 生存競爭의 法則”은 동물세계의 적자생존의 법칙이 인간세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동물이 이상추세로 증식하면 식물(食物)의 산출이 제한되므로 다수의 과잉이 생기게 된다. 이에 동물중 일부분이 사멸치 아니하면 전부가 생존하기 불가능함은 자연의 추세이다. 즉 각자의 생존을 위하여 경쟁이 일어나서 승자가 생존하고 그 자손을 후세에 유전시키며, 패자는 멸적하여 그 종적이 끊어지게 된다. 그런즉 우승열패하여 적자생존하고, 부적자 멸망하는 것은 자연도태, 생물진화의 일대 원리로 설명된다. 또한 인류 역시 단체생활을 영위하는 동물이며, 생존경쟁도 상호단체간에 행하여진다. 개인은 신체가 허약하고 정신이 우열하여 개체로 분리되면 결국에는 생존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자가 적지 않다.⁴²⁾

40) 정낙근(1993).

41) 신연재(1991), pp.66-68.

42) 이상의 설명은 『태극학보(太極學報)』제4호(1906.11.24), pp.7-9 참조. 당시 이러한 진화론에 입각하여 적자생존을 자연법칙으로 이해하여 소개하는 논설로서, 『대한흥학보』제1호(1909.3.20)에 실린 김영기(金永基), “적자생존(適者生存)”과 『대한흥학보』제13호(1910.5.20)에 실린 KM생, “생존경쟁담(生存競爭談)”을 들 수 있음.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진화론은 한중일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지식인들에게 위기의식의 촉진제이자 완화제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진화론은 동북아 3국이 부국강병을 통하여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는데 유효한 전략으로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약소국이 국민통합에 기초한 대외경쟁력으로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국가 생존의 확보와 함께 대외적 팽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³⁾

2) 장지연 등 계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수용 양상과 특징

계몽운동가들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당시 국제관계상 힘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를 사회진화론의 특징적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진화론이 국제정치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커다란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보면, 당시 지식인들이 한반도 주변정세를 비롯하여 변화된 국제정치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서,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19세기 후반이후 한국에서는 서구 근대국제질서체제에의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 당시 동북아 등 국제정치의 현실을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상에 비유하거나 ‘동-서 인종간의 전쟁’, ‘약육강식의 시대’ 등 구체적 표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국가간 ‘전쟁상태’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1880년대 개화파의 대표적 지도자중 한 사람인 박영효는「1888년 상소문」에서 서구 근대국제질서의 양상을 과거 중국의 전국(戰國)시대의 혼란상에 비유하였으며, 국제질서의 기본 성격을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자국의 식민지로 삼는 약육강식의 상황으로 파악하였다.⁴⁴⁾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당시 자결한 민영환(閔泳煥) 역시 유서에서 ‘생존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지기를 굳게 갖고 학문에 힘쓰기’를 권고하고 있다.⁴⁵⁾ 당시 주요 애

43) 신연재(1991), pp.2-3.

44) 그 예로서 1880년대초 「한성순보(漢城旬報)」1983년 12월 20일자(제6호)의 “소병의(銷兵議)”를 보면, 당시 각국이 전쟁의 이익만을 위해 군비증강하며 약육강식만을 일삼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음.

45) "아.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다다랐구나. 생존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警告韓國人民). “죽은 자는 그렇다 하거니와, 우리 이천만 인민은 앞으로 이 생존경쟁속에서 絶滅이 될 지경이다.”(各公館寄書)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1일자, 이광린·신용하 편저,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근대편』(서울: 일지사, 1989), pp.242-243.

국제몽운동단체들인 대한자강회, 신민회, 서우학회, 대한협회 등의 창립취지문에서도 약육강식의 국제질서관과 자강에의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그 예로서 박은식 등이 참여한 서우학회(西友學會)의 창간 취지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국제정치의 현실을 생존경쟁의 양상으로 파악하였다.

“모든 사물이 외로우면 위태롭고 군집(群集)하면 강하며, 합하면 이루어지고 떠나면 패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러한 이치이다. 하물며 자금 세계에 있어서 생존경쟁이 천연(天演)의 일이요, 뛰어나면 이기고 용렬하면 패하는 것(優勝劣敗)은 공례(公例)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회가 단체가 되고 안된 것으로서 문명과 야만이 구별되고, 존망(存亡)이 분별되는 것이다.”⁴⁶⁾

생존경쟁의 단위로서 ‘국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당시 국가(國家)는 각 개인이 서로 단결, 보조 및 구제하고 이익이 되는 도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의 한 몸 위에 크고 중대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⁷⁾ 20세기초 『태극학보(太極學報)』제4호(1906.11.24)에 실린 장응진(張膺震)의 “진화학상(進化學上) 생존경쟁(生存競爭)의 법칙(法則)”이란 글의 다음 설명을 보면, 이 시기 국가주의란 결국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호 보다는 국가전체적 발전과 독립성의 유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상정하는 국가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을 볼 여지가 많다.

“즉 인류가 출산한 인구수중 다수가 죽고 일부분만이 살아남는 것을 볼 때, 인류사회의 진화 상태도 우승열패의 대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진화의 정도가 심한 현재, 그 경쟁의 단위는 단체, 즉 국가(國家)이다. 이 단위, 즉 국가가 생존에 적합한 성질이 있으면 우승의 지위로 생존자보(生存自保)하게 되며, 만약 적합한 성질이 없으면 단체가 패망퇴적하는 것이 고금 역사상에 비추어 사실이다. 따라서 일국으로서 현재 세계상에 생존하기에 필요한 성질은 즉 국민이 사회도덕을 실행하고 현재 정도에 적당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즉

46) “西友學會 취지서,” 『大韓每日申報』, 347호, 1906.10.16. 이만열 편, 『朴殷植』(서울: 한길사, 1990). p.37.

47) 張志淵, “自強主義(續),” 『大韓自強會月報』4, 大韓自強會, 1906.10. 『張志淵全書』8, p.465.

정치, 법률, 도덕, 군사, 교육, 농공상 등 일체를 연구발달시켜 다른 국가와 상대하여 경쟁할 실력이 있는 연후에야 생존자보하게 된다.”⁴⁸⁾

특히 당시 계몽운동가들의 저술에서 ‘천연(天演)’이란 용어의 사용은 앞에서 살펴본 19세기 후반 청에서 옌푸(嚴復) 등이 ‘evolution’을 ‘천연(天演)’으로 번역하면서 사회진화론을 소개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장지연의 경우도 서구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이 당시 국가간 생존경쟁(生存競爭)을 ‘천연(天演)’으로, 약육강식(弱肉強食)을 ‘공례(公例)’로 명명하면서, 이러한 국가간의 경쟁 상태에 주목하였다.

“언어나 풍속에서부터 사상과 법제에 이르기까지 형질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므로, 부득불 그 나라를 나라로 여기는 이는 물건이 천연(天演)을 거루는 공례(公例)에 따르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국가의 이름이 성립하여 다른 무리에 대응하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사회진화론의 영향하에 당시 장지연 등이 러일전쟁이후 1905년 7월부터 일본을 시찰한 것이 당시 일본의 부각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로서 크게 작용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난 이후 시점에서 장지연은 당시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황백인종간의 대결이 끝나고 일본의 부각을 하나의 현실로서 인정하고 있다. 장지연은 1905년 일본 시찰 결과, 세계의 문명이 더욱 진보하고 인종간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⁵⁰⁾

이와 같이 장지연 등은 일본의 부각을 ‘적자생존’으로, 그리고 한국의 국권 상실을 ‘자연도태’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이 국가적 독립을 보전할 수 있는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일본 등 타국의 식민지를 면할 수 없음을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48) 『太極學報』 제4호 (1906.11.24), pp.8-10.

49) 張志淵, "自強主義(續)". 『大韓自強會月報』4, 大韓自強會, 1906.10. 『張志淵全書』 八, pp.465-466.

50) “東游聞見(一).” 『皇城新聞』, 1905/9/25. 『張志淵全書』 八, pp.439-440; “東游聞見(二).” 『皇城新聞』, 1905/9/26. 『張志淵全書』 八, pp.440-441.

로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민족의 무능부패와 분열된 열등한 속성 때문에 우세한 일본 민족에 병합당하고 망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계몽운동가들은 국권회복의 당위성과 희망을 주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계몽운동가들은 사회진화론의 시각하에서 조선의 국권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강의 필요성과 국민의 의무와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나갔다. 그리고 실력양성으로 힘을 기르는 등 점진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강을 통한 조선의 국권회복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을사조약의 체결이후 장지연은 망국 위기에 처하여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등 좌절에 빠지지 말고, 사람마다 각자 자강하는 길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노력들이 축적될 경우 언젠가는 반드시 조선의 독립이 달성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⁵¹⁾

이와 같이 서구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계몽운동가들은 생존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조선에서 자강(自強)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다. 그리하여 1906년 장지연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대한자강회에서 주창한 자강주의는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가를 단위로 하는 생존경쟁 내지 자연도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강하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⁵²⁾

그리고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제 병합전까지는 사회진화론이 당시 계몽운동가들에게 조선이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을 갖추 경우 조선의 국권회복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사회진화론에서 강조하는 적자생존을 위해서는 기존에 취해왔던 인간관과 국가관 및 정치지도자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력양성으로 점진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장지연의 경우에는 사회진화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새로운 생존경쟁의 단위로서 국가와 민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지식인 등 민을 새로운 근대적 학문을 수용하여 계몽하며 정치지도자의 각성을 촉구할 필요성을 크게 환기시켜나갔다.

51) 張志淵, "自強會 問答," 『大韓自強會月報』2, 大韓自強會, 1906. 『張志淵全書』 八, pp.455-459.

52) 이러한 입장은 장지연이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強會月報)』에 기고한 논설들, 즉 「자강회문답(自強會問答)」(제2호, 1906.8.25.), 「자강주의(自強主義)」(제3-4호, 1906.9.25.-10.25.), 「단체연후 민족가보(團體然後民族可保)」(제5호) 및 「국가빈약지고(國家貧弱之故)」(제6-7호, 1906.12.25.-1907.1.25.)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상의 논설들의 내용은 『張志淵全書』 八, pp.473-486, 455-466을 참조.

4.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는 구한말이후부터 20세기초 1910년의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이전까지 정치이념으로서 공화주의와 사회진화론의 전파와 수용과정을 주로 살펴보았다.

당시 조선 내 현실정치상 및 이념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화파는 '입헌군주제'를 조선이 지향해야할 새로운 정치체제의 모델로서 주목하고 수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 예로서 먼저 구한말 개화파로서 유길준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 및 미국 유학생의 경험을 통해 서구의 정치제도가 운영되는 양상을 직접 목격하고 당시 공화주의 등 서구 정치사상과 이론에 대해 나름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귀국한 후 유길준은 『서유견문』과 『정치학』 등의 저서에서 새로운 정치이념 및 제도로서 서구의 정치체제와 공화주의 및 입헌군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당시 유길준이 이해하였던 공화주의는 실제로는 서구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정에서 기존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개혁이념으로서 대두된 자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원리로서, 서구 각국의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 하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1880년대와 1890년대 당시 유길준 등 개화파들은 조선(한국)이 부강한 근대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정치체제로서 서구식 정치제도를 염두에 두었으며, 영국식 입헌군주제 또는 미국의 공화제의 형성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유길준은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높이 평가하면서, 공화주의 대신 서구식 입헌군주제의 제도적 수용에 중점을 둔 '군민공치(君民共治)'를 주장하였다.

19세기 한·중·일 3국이 국가 독립과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구에서 전래된 사회진화론이 처음에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인식시킬 수 해주는 이론으로서 소개되어졌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본과 중국을 경유하여 전래된 서구의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강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받아들인 한국에서는 왜 한국이 생존경쟁에서 약자가 되었는지의 이유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 수 있으며, 왜 근대화와 문명화가 필요한 지를 설명하고 이에 관해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이론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구한말이후 20세기초 서구의 근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담론으로서 사회진화론의 수용 과정을 보면, 원래 서구 제국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된 사회진화론이 동북아에서는 문명개화와 국민의 계몽을 촉진시키며 내셔널리즘을 형

성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보여주었다. 약육강식과 생존경쟁이라는 근대 국제질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한국에 전파된 사회진화론은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준거틀로서 원용되어졌다. 세계의 주요 열강들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식민지적 진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망국을 뒤집기는 힘들고 러일전쟁의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적 상태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적자생존(適者生存)'과 '약육강식(弱肉強食)'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한 국가가 군사력 등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타국의 식민지를 면하기 힘들었다.

특히 을사조약의 체결이후 장지연 등 일부 계몽운동가들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시각에서 군사력 등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타국의 식민지를 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계몽운동가들은 사회진화론의 시각하에서 조선의 국권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강의 필요성과 국민의 의무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리고 실력양성으로 힘을 기르는 등 점진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강을 통한 조선의 국권회복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이시기 사회진화론의 수용은 장지연 등의 경우처럼 새로운 국가 만들기과 개인의 계몽이라는 과제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진화론의 분석틀을 빌린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장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계몽운동가들은 서구 사회진화론의 수용을 통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국제현실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면서 근대적 국가사상과 민권사상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계몽운동가들의 현실인식과 노력들은 비록 행적과 활동에서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후 3.1운동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의 이론적 토대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朴泳孝, 『朝鮮國內政ニ關スル朴泳孝建白書』, 日本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 第21卷 (明治 21年 1月-12月間), 문서번호 106.
- 俞吉濬全書編纂委員會, 俞吉濬, 『俞吉濬全書』 총 5권 (서울: 일조각, 1971).
- 유길준 지음,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 조선 지식인 유길준, 서양을 번역하다』 (서울: 서해문집, 2005).
- 유길준 원저, 장인성 저, 『서유견문: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에 관한 성찰』 (파주시: 아카넷, 2017).
- 유길준 지음, 조윤정 편역, 『노동야학독본』 (광명: 경진, 2012).
- 유길준 저, 한석태 역주, 『政治學』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 博文局, 『漢城旬報·漢城週報』, 원문과 번역문 3권 (서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3).
-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張志淵全書』 八~十 (서울: 단대출판부, 1987).
- 이만열 편, 『朴殷植』 (서울: 한길사, 1990).
- 『大韓自強會月報』, 『西北學會月報』, 『太極學報』
- 장인성·김현철·김종학 엮음,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1권 개항·대한제국기』 (서울: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2).
- 이광린·신용하 편저, 『자료로 본 한국문화사: 근대편』 (서울: 일지사, 1989).
-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 2009).
- 김도형, “한말 계몽운동의 정치론 연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54집 (1986.9).
- 김도형, 『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 - 유교 비판과 변통』 (서울: 지식산업사, 2014).
- 김동훈,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서울: 경인문화사, 2011).
- 김석근, “구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서구문화의 수용과 근대개혁』 (서울: 태학사, 2004).
- 김영작·윤순갑, “개화파의 근대국가 건설 구상,”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편, 『한국 정치사상사-단군에서 해방까지』 (서울: 백산서당, 2005).
- 김학준, 『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 연구: 유길준·안국선·이승만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김현철, “갑오개혁의 정치사적 의의와 현재적 시사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제4권 2호 (통권 8호), (2015.2.28).
- 김현철, “유길준의 공화주의와 리더십- 근대 서구공화주의의 인식과 개혁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주최, 『2015년 동계 공동학술대회 -한국 근대공화주의와 리더십 -자료집』,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회의실, 2015.12.5.
- 김현철, “애국계몽기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자강사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년도 연례학술회의 논문집』, 2005.3.
- 박성진,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3).
-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 박충석·유근호, 『조선조의 정치사상』 (서울: 평화출판사, 1995).
- 세실 라보르드, 존 메이너 지음, 광준혁, 조계원, 홍승현 옮김,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까치, 2009).
-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 加藤弘之, 梁啓超, 申采浩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안병진,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주의 강의. 2, 사상』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 야나부 아키라 저, 서혜영 역, 『번역어 성립사정』 (서울: 도서출판 일빛, 2004).
- 왕현중,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서울: 역사비평사, 2003).
- 우남숙, “한국 근대사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 양식-장지연·박은식·신채호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1집 1호 (1999).
- 유영익, 『갑오경장연구』 (서울: 일조각, 1996).
- 윤대원,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 한국에서의 ‘민주’·‘공화’의 수용과 결합,” 동북아역사재단·폴란드 중동부유럽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주제-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임시정부, 공화주의, 역사화해: 한국과 폴란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8.5.24.
- 이동수 편, 『공화와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찾아서』 (인간사랑, 2013).
-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 『한국정치학 회보』, 27집 1호 (1993).

-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구한말을 중심으로』(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6).
- 정낙근, “개화지식인의 대외관의 이론적 기초,” 『한국정치학회보』, 27집 1호 (1993).
-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 한국』(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 조정란, “중국에서 사회 진화론의 수용 양상.” 조정란, 『중국 근대현대 사상의 탐색』(서울: 도서출판 삼인, 2003).
- 조승래, “공화국과 공화주의”, 역사학회, 『역사학보』 198집 (2008.6).
- 천관우·최준·구자혁 외 11인 저, 『장지연 연구논총: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서울: 민음사, 1993).
- 최기영,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 최기영, 『한국 근대 계몽사상 연구』(서울: 일조각, 2003).
- 한철호, 『한국 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선인 2009).
- 澤大洋, “織田豊臣・徳川時代から明治維新文明開化期における西洋近代政治思想の導入”, 幕末・明治初期における西洋文明の導入に関する研究会 編(1993), 『洋學事始—幕末・明治期西洋文明の導入』(東京: 文化書房博文社, 1993).

1. 공화주의

- * 구한말 우리에게 수입된 개념으로 ‘민주.공화’에 관한 논의는 많으나 저자가 지적한대로 당시 ‘민주.공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실제로 개화파나 애국 계몽운동가들이 무엇을 이해했는지 혹은 더 나아가 이를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는 많지 않다고 보임
- * 서구의 공화.민주 개념이 우리에게 수입되었을 때 어떻게 취사, 선택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즉 이들이 서구의 공화개념을 어떻게 접했고, 이를 어떻게 소화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서구에서 공화정은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필자가 지적한대로 무왕지정(無王之政), 즉 군주가 없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이는 귀족정, 민주정 혹은 군주와 귀족 혹은 인민이 공동으로 다스리는 혼합정(mixed regime) 등을 의미해 왔음 -> 최소한의 정의요건은 군주 단독의 권력행사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임
- * 그리고 민주란 이러한 공화정의 작동방식이 인민주권이나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될 때 그렇게 불리었음 -> 따라서 토론자의 사적 견해로는 공화정이 반드시 민주정일 필요는 없음

* 그리고 이러한 공화정은 필자가 지적한대로 공동체 정신, 시민의 덕성, 소규모 정치체,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정치참여 등의 개념을 수반하면서 성장했음

*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나타난 다양한 정치체제를 소개한 후 필자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유길준은 ‘국민들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체제’(국민〈國人〉이 공화〈共和〉하는 정체〈政體〉, 공화제)가 세습하는 임금만 없을 뿐이고, 대강은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군민의 공치하는 정체, 입헌군주제)와 같다고 보았다. 유길준은 각국의 정치체제를 비교해보면,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입헌군주제)가 가장 훌륭한 규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그렇다면 유길준의 경우 실제로 공화제와 입헌군주제의 차이가 없다고 실제 본 것인지 궁금함

- 이렇게 같다고 본 것은 유길준의 진심인가? 아니면 공화제의 주장이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하여 주장한 것인가?

- 이와 관련하여 유길준은 보수주의자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면 이러한 의견은 옳은 것인가?

-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면 이는 공화제의 과격한 주장을 거부한 것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민도나 사회발전의 수준을 정치체제 선택의 주요한 요건으로 본 것에 기인하는가?(국체의 선택은 각국의 자연적, 사회적, 교화적 요소 및 역사적 발달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정치학’에서의 주장) 아니면 둘 다인가?

* 또 다른 질문은 문명개화의 과정에서 있어서 왜 정치체제가 중요한가라는 점이다. 왜 문명개화에 입헌군주정이 바람직한가? 왜 선한 폭군의 지배(benevolent despotism)는 문명개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는가? 이러한 점에 대한 유길준의 이론적 논의는 있는가? 아니면 당대 왕권의 전제적 경향이나 민씨척족의 발호를 보면서 입헌군주제 등을 논의한 것인가? 사회진화론에 비하면 공화주의와 문명개화의 상관성이 다소 약해 보이는데, 유길준의 이 둘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전체적으로 볼 때 유길준은 주로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짧은 일본 및 미국에서 유학을 통해서 공화.민주에 관한 저술을 접하고 이의 소개에 그친 구한말 개화파 지식인의 한계를 보인다고 판단됨. 그리고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이러한 개념의 본원에 천착할 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 결과 유길준의 공화의 개념은 무왕지정과 대의민주주의의 혼용되어 여전히 개념적으로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임 -> 이 글이 이러한 애매모호한 점이 어떻게 애매모호하게 유길준의 논의에서 나타나 있는지 좀 더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 유길준의 논의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은 다 아는 바일 수 있으나, 이 글이 좀 더 이러한 애매한 성격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2. 사회진화론

* 필자가 논의하듯이 중국의 경우 엄복, 양계초 등이 주장하고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의 사상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진화론은 약소국의 경우 국경 내 인민이 개인으로 머물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단합하여 약소국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필자가 잘 지적하듯이 20세기 초반 한일합방 이전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사회진화론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파악하면서 아이러니칼하게도 약육강식의 국제정치를 인정하되 토대 위에서 자강론을 주장함 <- “한민족의 무능부패와 분열된 열등한 속성 때문에 우세한 일본 민족에 병합당하고 망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다”는 필자의 지적

*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자강론은 전반적으로 필자가 지적한대로 생존경쟁의 단위는 국가이며 따라서 개인보다는 국가라는 집단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주의적 속성을 띠기도 함

* 이러한 애국계몽운동가들의 자강논리는 실력국가가 되지 못한 경우 후일 일제

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논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자강에 실패할 경우 자강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인 '종속적 자치'가 필요하고, 자강을 지속하자고 할 경우 항일 무력투쟁이나 국제적 힘의 역학에 주목하는 외교적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자강의 논리는 사회통합의 논리로 엘리트 중심에서 인민에게 명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

3. 전체적 총괄의견

* 유길준의 경우 공화와 민주가 정확히 개념이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왔다고 보임 -> 공화라는 국체와 이의 작동원리로서 민주가 구별되지 않은 채 군주가 없는 국체와 민주적 운영이 혼용되어 공화정, 임헌군주정, 대의공화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임

* 이는 유길준이 접한 공화, 민주 등의 개념이 짧은 일본 및 미국유학을 통해서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보이며 본격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연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러하다 하더라도, 필자가 이러한 혼용의 가닥, 혼용의 현황을 좀 더 명쾌하게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미국의 경우 매디슨 등 건국의 아버지들도 공화정부를 대의민주주의와 동일시했으며, 오히려 주정부 수준에서 나타나는 '순수민주주의'(국민의 의사가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직접민주주의 혹은 단기의회의 민주주의로 다수의 폭정에 노출되기 쉬움 -> 급진적 공화주의)를 경원시 함 ->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의미전용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있음)

* 한편 유길준의 공화주의와 장지연의 사회진화론을 묶어서 논의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하나는 국체와 정체에 관한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의

발전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둘을 함께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 구한말 이후 이러한 개화파, 애국계몽운동가 등 선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유주의의 토대가 쉽게 발달하지 못한 요인 가운데 하나를 필자의 논의를 통해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유길준의 공화정 논의는 사회의 상태, 습속에 따라서 국체 혹은 정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혼란에 의한 민주적 습관을 양육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고, 사회진화론은 국가중심의 통합을 강조하여 자유주의 형성의 토대를 놓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한 결과 일제 식민지 지배 당시 윤치호 등으로 대변되는 종속적 자치의 논리가 합리화되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게 됨. 민주주의에는 혼란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여 일제 당시 자유주의가 매우 왜곡된 형태로 진행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임

2_{세션}

20세기초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비판과 공화주의 인식의 양상

사회: 김형목(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발표4〉

20세기초 독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극복과 평화사상의 형성
-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의 경우 -

발표 | 김기승(순천향대)

〈발표5〉

1910년대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공화주의·공화제 수용 양상

발표 |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발표6〉

1910년대 해외독립운동가의
국제정세 인식과 ‘공화제’임시정부 구상

발표 | 윤대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토론 | 이동연(선인역사문화연구소)

황민호(숭실대)

신호승(동북아역사재단)

2 세션

〈발표4〉

20세기초 독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극복과 평화사상의 형성
-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의 경우 -

김기승(순천향대)

토론문 :

이동연(선인역사문화연구소)

20세기 초 독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극복과 평화사상의 형성

-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의 경우 -

김기승(순천향대)

1. 서론

구한말 한국인들은 국권이 실추된 상황에서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독립된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이론 형성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청말 변법 사상가인 강유위와 양계초의 번안을 통해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자강주의적 국권회복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 국가의 성공과 약소민족의 실패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자강을 통한 자주독립 국가 건설 방법을 제시해주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은 근대 한국의 지식인들에 의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수용되었다. 특히 사회진화론은 전통적인 유교의 도덕주의적 세계관과는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요소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진화론이 유교 지식인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유교의 부정이나 유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했다. 사회진화론에서 강조되는 ‘생존경쟁’, ‘우승열패’, ‘자연도태’의 개념은 유교의 ‘인의도덕’ 개념이나 ‘평천하’의 이상과는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약소민족의 지식인으로서 제국주의 침략자에 저항하는 독립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제국주의의 약소민족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사회진화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20세기 초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진화론이 국권회복운동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수용되었다가 1910년 국망을 전후한 시기부터

극복 또는 부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강자의 논리와 관점에서 벗어나 약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성과 정의감에 토대를 둔 평화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독립운동은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공화주의 국가와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본고에서는 국내외에서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1910년 국망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 4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추었지만, 사회진화론을 접하는 경로와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다. 따라서 사회진화론을 극복하고 새로운 독립운동론을 정립하거나 선택하는 방식도 달랐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고 극복하면서 자신의 독립운동론을 정립해 가는 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기들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를 합리화하는 사회진화론을 극복하고, 보편적 도덕에 의거한 평등주의적 평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박은식의 대동사상과 세계평화론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저자인 박은식은 근대 민족사학의 수립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은식에게서는 국혼론이라는 민족적 고유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유학자로서 유교의 개혁과 진흥을 중시하고 유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향이 강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박은식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특수성과 유교적 보편성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회진화론의 극복 문제를 주로 유교사상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¹⁾

보수적인 정통 주자학자였던 박은식은 1898년 이후 서구의 신사상을 수용하는 사

1) 필자는 「박은식의 민족과 세계 인식- 경쟁과 공생의 이중주」, 『한국사학보』 39(2010. 5) 에서 박은식의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문제를 사회진화론적 경쟁과 유교적 공생의 원리와의 길항 관계로 설명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 성과에 토대를 두고 유교를 통한 사회진화론의 극복 과정을 정리하였다.

상적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신사상 수용 초기에는 유교를 국교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양사상의 수용도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었다. 1905년 이후에는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면서 교육과 실업의 진흥, 구습 개혁 등을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한 자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자강을 위해서는 유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유학을 비판하였다. 그는 주자학은 ‘지리한만’하기 때문에 ‘간이직절’한 양명학을 진흥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종래의 유교는 군주 중심이었음을 비판하면서 ‘인민사회’ 중심의 유교로 혁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유교는 인류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공자의 ‘구세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²⁾

박은식은 ‘우승열패’와 ‘자연도태’는 유교적 인의도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현실 세계는 강자만이 도덕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사회진화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과 실업의 진흥을 통해 자강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자강론적 구국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말하자면 한국이 자주독립하는 길은 경제적 문화적 실력 양성을 통해 자강력을 양성함으로써 생존경쟁에서 승리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민족과 국가 사이의 경쟁은 필연적인 자연 현상이므로 이 경쟁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경쟁에서의 승리자가 되어 자주독립을 성취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박은식은 1909년에 유교 혁신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대동교를 제창하였다. 그는 유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유교의 진흥을 위해 장자연 등과 함께 대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대동교의 종지는 『예기』 「예운」의 대동설과 『춘추』의 대동삼세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예기』 「예운」에는 천하가 공공의 소유가 되어 사유제에 의한 차별과 대립이 없이 만인이 대동 화합한 대동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춘추』에는 거탄세소강세태평세에 대해 기술한 부분이 있다.

청말의 변법사상이 강유위와 양계초는 이 두 가지 학설과 서양의 진화설을 조합하여 전제군주제를 비판하고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었다. 역사는 여럿이 군주 자리를 다투는 거탄세에서 군주가 1인인 소강세를 거쳐 만인이 군주가 되는 태평세로 진화하는데, 태평세에는 천하가 공공의 소유가 된 대동사회가 실현될

2) 박은식, 「유교구신론」, 『서북학회월보』 1-10, 1909. 3,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백암 박은식전집』 5, 동방미디어, 2002, 432~438쪽.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입헌군주제로의 변법론적 개혁이 유교의 본지이며 공자의 대동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맹자의 민본주의가 공자의 본의를 계승한 것이며, 유교의 군주 중심주의는 순자의 학설로 잘못 계승된 것이라고 하였다.³⁾

박은식도 청말 변법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맹자의 민본주의 회복을 통해 인민사회 중심의 유교개혁을 역설하였다. 또한 유교의 궁극적 지향이 대동사회 건설에 있으며, 이것은 형체와 물욕의 사사로움을 배격하고 만물일체의 인을 회복하는 데서 실현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인(仁)을 회복하여 태평의 복락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대동교의 종지라고 하였다. 그는 대동교 제창을 통해 사사로운 이해 관념을 부정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는 한국의 유교를 중국과 일본을 물론 서양에도 보급하여 대동교의 광명이 세계에서 빛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⁴⁾

박은식은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적 경쟁을 말하면서도, 사사로운 이해 관념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인류의 화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선한 본성은 만물을 일체로 여기는 사랑이며, 이 인류의 보편적인 인의도덕의 부활을 통해 생명과 인류를 해치는 ‘경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의 경우, 사회진화론 수용은 국권 실추 원인 분석과 국권 회복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자신의 유교적 가치관인 도덕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논리는 아니었다. 따라서 사회진화론이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경쟁의 논리는 도덕과 정의 관념에 기초한 세계 평화의 논리에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

박은식은 1911년 중국 망명 이후 민족종교인 대종교에 입교한 후 대동민족사를 고대사 중심으로 천착하면서 세계인권의 평등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도달하였다.

1911년 이후 그는 대동민족사에 나타난 역사적 영웅과의 상상적 대화를 통해 민족을 넘어선 보편적 존재로서의 상제의 의미, 즉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그의 대동민족 개념에 의하면, 금국의 태조 아골타는 단군의 후예이며,

3) 이상룡, 「광의」,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472~480쪽 ; 「공교미지」, 『국역 석주유고』 하, 542~581쪽. 「광의」와 「공교미지」는 이상룡이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에서 대동사상에 관한 글과 중국 학술사에 관한 글을 보고 요약 정리한 글이다.

4) 박은식, 「공부자탄신기념회강연」, 『서북학회월보』 1-17, 1909. 11, 『백암박은식전집』 5, 458~462쪽.

여진족도 조선족과 함께 대동민족으로 동족이 된다. 이에 그는 『몽배금태조』에서 금태조를 꿈 속에서 알현하여 국망 해결책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하늘의 뜻이 사해일가로 인종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는 것인데, 경쟁이 치열하여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박은식은 물었다. 이에 대해 금태조는 하늘의 도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낳고 기르는 것이고, 도덕가는 이를 본받아 만물일체의 인을 실현하여 천하의 경쟁을 그치게 하는 구세주의를 목표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동민족이 사회진화론적 경쟁론으로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강권론’과 ‘제국주의’를 정복하고 ‘세계 인권의 평등주의’를 실행하여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선봉에 설 것을 당부하였다.⁵⁾

박은식이 말하는 세계 인권의 평등주의에서는 한민족의 자주 독립은 민족과 국가 사이의 경쟁에서의 승리, 즉 강자가 되어 경쟁자를 약자로 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를 획득하여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었다. 그의 경우, 세계 인권의 평등주의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타고난 도덕성인 만물일체의 인에 토대를 두고 있다. 또한 인종, 민족, 국가 사이의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여 지배와 종속 관계가 없는 ‘천하위공’의 평등사회란 점에서 유교적 대동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박은식의 도덕주의적 세계평화론은 구체화되고 실천적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1919년 3월 러시아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가 발표한 독립선선언서를 기초하였다. 여기서 그는 천하에는 ‘강권’만 있지 않고 ‘공리’가 있다고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이 소멸하고 정의와 인도의 자유주의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한국의 독립은 천하의 공리이며 세계 평화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⁶⁾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노인동맹단에서 일본 정부에 보내는 독립요구서를 기초하였다. 여기서 그는 한국의 독립 요구가 정의와 인도에 의거한 것임을 밝히면서, 제국주의적 침략자 일본에 대해서는 ‘혈전’을 할 것이지만, 한국의 독립을 용인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친선 우호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점에서 독립운동은 배일

5) 박은식, 『몽배금태조』, 『백암박은식전집』 4, 167~214쪽.

6) 박은식, 「선언서」, 1919, 『백암박은식전집』 5, 85~86쪽.

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친일’, ‘영원한 친일’이라고까지 하였다.⁷⁾ 이처럼 그는 인류의 보편적 도덕에 근거하여 한국의 독립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1919년의 3.1운동을 세계사의 신기원을 이룩한 평화주의적 맨손 혁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의 움직임은 경쟁과 전쟁의 군국주의를 청산하고 협력과 공생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 결성 움직임은 세계평화 실현의 구체적 사례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은 그가 유교 혁신을 위해 제창했던 천하위공의 대동사회가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인식되었다.

1920년대 초반 그는 중국 공교회 인사와 한국의 유학자들이 함께 간행하는 『사민보』 논설 기자로 활동하였다. 여기서 그는 사회진화론적 경쟁론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천부인권과 같이 모든 민족이 생존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인 카와타 시로(河田嗣郎)의 「민족생존권」이라는 논설을 번역 소개하였다. 그는 이 논설이 강권주의와 제국주의의 폐해를 적절히 지적한 공평정대한 글이기 때문에 소개한다고 하였다. 이 논설에서 각 민족은 공존공영하면서 인류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존재로 인식되었다.⁸⁾

박은식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노동자 혁명을 주장한 러시아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러시아혁명이 약소민족의 자유 독립을 돕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권주의적 세계를 인도주의적 세계로 개조하는 선구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사조의 발흥은 세계인들이 유교에서 말하는 대동사회의 구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았다.⁹⁾

박은식의 경우, 유교의 도덕적보편주의는 서구의 인도주의적 평화주의와 결합하면서 사회진화론적 경쟁 논리를 극복하고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세계 평화 실현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3. 이상룡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대동사상

7) 박은식, 「대한국민인운동맹단치일본정부서」, 1919. 6. 14, 『백암박은식전집』 5, 477~479쪽.

8) 박은식, 「민족생존권」, 『사민보』, 1921. 12. 17~22. 『백암박은식전집』 5, 487쪽.

9) 박은식, 「국제노동회의」, 『사민보』, 1922. 8. 15., 『백암박은식전집』 5, 534쪽.

이상룡은 퇴계학통을 계승한 척사위정론자로서 동학농민항쟁을 배격하고 을미의 병을 지원하였다. 이어서 1906년에는 직접 자금을 대어 가야산에서 의병항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병의 군사를 모집하고 무장을 도모하면서 일제의 근대적 군사력을 실감하면서 국권회복운동의 방법을 전환하였다. 그는 서양의 신사상을 수용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교육과 실업의 진흥을 통해 자주독립의 능력을 양성하는 구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안동에 협동학교를 만들어 근대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09년에는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치훈련을 통한 국회와 국민군대의 건설을 지향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국망 이후 1911년 신민회 국외 망명 계획의 일환으로 가산을 정리하고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해 서간도로 망명하였다.¹⁰⁾

이상룡은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으로 「진화집설」을 남겼다. 이 글은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에 수록된 진화에 관한 논설을 수집하여 요약한 글이다. 에 따르면 공자가 『춘추』에서 제시한 거란세-승평세-태평세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진화설이 최초의 진화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자의 진보적 역사관은 후대에 단절되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다윈의 생물진화론의 ‘생존경쟁’ ‘우승열패’, ‘자연도태’, ‘인사도태’, ‘적자생존’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벤자민 키드가 사회진화론을 주장했다고 하면서, ‘자연도태의 목적은 동족 중에서 최대 다수로 하여금 최적의 생존을 얻게 하는데 있다’는 그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러면서 ‘진화의 운동은 개인을 희생하여 다수를 이롭게 하고, 현재를 희생하여 장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¹¹⁾

양계초는 사회진화론을 약자인 중국이 미래를 위한 진보적 혁신을 이루어 적자로 생존해야 한다는 변법유신운동을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서양의 사회진화론은 공자의 『춘추』 삼세설에 나타난 진화론과도 상통한다고 보았다. 양계초는 다윈의 동물진화론, 벤자민 키드의 사회진화론을 공자의 춘추삼세설과 통합하면서 사회진화론을 중국을 독립적인 근대 국가로 발전시키는 이론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10) 이상룡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김기승, 「한말 유교지식인의 사상전환과 그 논리」, 『민족문화』 4, 1989 ; 김기승, 「해제」,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1~4쪽 ; 김정미,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과 사상」,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2 등 참조.

11) 이상룡, 「진화집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604~611쪽.

이상룡의 사회진화론 수용은 양계초의 번역을 통해 유교적으로 해석된 사회진화론이었다. 따라서 사회진화론은 유교와 모순되기는커녕 공자의 『춘추』 삼세설에 나타난 진화론을 발전시킨 것이 된다. 이상룡은 박은식처럼 사회진화론과 유교적 도덕과의 모순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양계초처럼 미래의 진보를 위해 서구의 문명 국가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사회진화론을 사용하였다.

그는 1909년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하여 안동 지역에서 사회단체 결성을 통한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대한협회 안동지회의 강령인 「서계대한협회회관」을 저술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당시 한국이 생존경쟁의 시대에 국세가 위축되고 민심이 흐트러진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혁신 그 자체가 아니라 좋은 변혁이어야 한다면서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을 참고하여 대한협회 안동지회의 강령을 마련했음을 밝혔다.¹²⁾

이상룡은 생존경쟁의 현실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1909년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한 것은 새로운 국가, 즉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적 토대를 닦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대한협회를 ‘대한 국민의 정당이 되는 모임’으로 규정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군주의 사유물이 아니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였다. 생존경쟁의 시대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발흥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단체를 결성해서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¹³⁾

그는 대한협회 안동지회가 장래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시기가 되면 국회와 국민군대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⁴⁾ 그러나 이 시기 그가 구상하는 국민국가는 전제군주권은 부정하지만, 주권을 국민 전체가 갖는 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국이었다. 그는 「합군집설」에서 루소의 계약설에 의거한 국민주권론과 혁명론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블룬츨리의 국가유기체설을 지지하면서 주권을 국민의 수장에게 맡기고 헌법에 의해 실행하게 하는 입헌군주제가 적합하다고 하였다.¹⁵⁾

1911년 서간도로 망명한 이상룡은 경학사를 만들어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경학사는 한인 교포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되었는

데, 그는 경학사 취지서를 작성하였다.¹⁶⁾ 이어서 동지들과 스스로 혁신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신계를 조직하였다. 그는 「자신계 취지서」에서 당시를 변화의 시기라고 하면서 먼저 새로워지면 우등이 되고 승리자가 되지만, 뒤늦게 새로워지면 열등이 되고 패배를 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였다.¹⁷⁾ 망명 이후에도 그는 사회진화론을 혁신을 통한 자강의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1913년경에는 서간도 교포사회의 자치 조직으로 부민단이 결성되었다. 이상룡도 부민단에 참여하였는데, 1916년에는 단장이 되었다. 부민단은 십가장, 백가장, 천가장을 둔 마을 단위의 통합적 자치조직이었는데, 삼권분립제를 채택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그는 1917년 국민주권주의에 의거한 신국가 건설을 선언한 「대동단결의 선언」에 서명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부민단은 한족회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그 산하에 군정부를 두었다. 이상룡은 한족회의 지도자로서 독립전쟁 수행을 위한 자치적 군정부를 이끌었던 것이다. 그런데 1919년 4월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에서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서간도 독립군의 무장 조직과의 연대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상룡은 군정부를 임정 산하의 군사단체로 편제하는 것을 수락하고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편하면서 독립이 되었다. 이로써 이상룡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하면서 입헌군주론자에서 공화주의자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한 뒤, 헌법을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고쳤다. 뒤이어 이상룡은 초대 국무령이 되어 민주공화제의 정부를 이끌면서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0년대에 이르면 이상룡은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사상적 변화를 보였다. 그는 「광의」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대두를 유교의 대동사상과 진화사관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광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⁸⁾

공자의 대동사상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서양 철학과 맥락을 함께 한다. 또한 인류 역사가 첫째 다군주 시대, 둘째단일군주 시대, 셋째 민주 시대로 발전하는데,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12) 이상룡, 「서계대한협회회관」, 1909, 『국역 석주유고』 상, 612~622쪽.

13) 이상룡, 「대한협회안동지회취지서」, 1909, 『국역 석주유고』 상, 622~624쪽.

14) 이상룡, 「서계대한협회회관」, 『국역 석주유고』 상, 620~621쪽.

15) 이상룡, 「합군집설」, 『국역 석주유고』 상, 579~587쪽.

16) 이상룡, 「경학사취지서」, 1911, 『국역 석주유고』 상, 624~627쪽.

17) 이상룡, 「자신계취지서」, 『국역 석주유고』 상, 628쪽.

18) 이상룡, 「광의」, 『국역 석주유고』 하, 472~480쪽.

행복해지는 진보의 과정이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공자가 『춘추』에서 말한 거란 세-승평세-대동세로의 변화, 『예기』 「예운」편에 기술된 소강세와 대동세의 모습과 서로 부합한다고 하였다.

다군주 시대는 추장 시대와 봉건과 세경 시대의 둘로 나뉜다. 천자에 의해 책봉된 봉건 제후와 세경 즉 귀족들이 군주를 자처하면서 전횡을 하므로 봉건과 세경 시대는 다군주 시대의 2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가 바로 『춘추』에서 말하는 거란세의 시대로 가혹한 부세와 혹형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이다.

다군주 시대 다음으로는 단일 군주시대로 진화하는데, 단일 군주 시대의 1기는 전제군주제가 시행되고, 제2기에는 입헌군주제가 시행된다. 봉건 귀족의 폐단이 제거되자 동양에서는 군권이 강화되어 전제군주제가 되고, 서양에서는 민권이 발흥하여 군주와 시민이 함께 정치를 하는 입헌군주제가 시행되었다. 바로 단일군주제의 2기인 입헌군주제가 시행되는 시기가 『춘추』의 승평세이며, 『예기』 「예운」의 소강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군주 권한이 무한하고 민권이 약하며,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방장한 즉 경쟁과 대립이 치열한 시대이므로 태평과 대동의 복지를 도모할 수는 없다.

민주시대는 총통이 있는 시대와 총통이 없는 시대 두 시기로 나뉜다. 민주시대의 1기에는 루소의 민약론과 국민주권주의에 의거하여 평등, 자유, 민족해방의 이론이 확산하면서 민주공화제가 성립한다. 미국과 프랑스가 으뜸이며 최근에는 중국도 민정체제가 되었다. 민주시대의 2기는 총통이 없는 시대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자 마르크스가 현 사회를 소수가 다수 인민의 토지를 약탈한다고 비판하였다. 노동자와 농민을 불평등과 부자유에서 해방하기 위한 노동운동이 발달하고 만국사회당이 결성되었다. 사회당이야말로 곧 『예기』 「예운」에서 말하는 대동세의 새 소식이다.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 재산을 공유화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를 세웠으니 이것이 민주 시대의 제 2기이다. 이것이 이른바 『춘추』에서 말하는 태평세이다. 수천 년 전에 공자는 미래에 대동세가 실현될 것을 알았으니 진실로 성인이다.

천하는 공공의 소유이다. 천하는 인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이다. 사유재산제로 인한 빈부격차의 폐단이 없어지지 않으면 인류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성인이 널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정전제를 제시하였다. 이제 ‘대동의 도’를 논할 때, ‘천하위공’을 앞세우고 강조하는 것은 토지와 자본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인민은

항산(恒産)이 없게 되고 나라의 살림살이는 풍족하지 못하고 계급이 불평등해지고 호구(戶口)가 불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천하위공’ 네 글자는 치국평천하의 요령이라고 하겠다.

진리는 동서의 차이가 없다. 플라톤의 공산설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은 모두 토지와 자본의 공유가 핵심적 주장이다. 이것은 공자의 ‘천하위공’을 핵심으로 하는 대동사상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사회당은 대동을 앞장서서 부르짖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주역』 혁(革)괘의 ‘피가 흘러 절구 공이가 떠다닌다(流血漂杵)’는 구절을 근거로 소강세에서 대동세로 이행할 때에 유혈 혁명이 불가피함을 공자가 은미하게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강유위가 미처 말하지 않은 바라고 하였다.¹⁹⁾ 그는 사회주의 혁명이 공자가 말한 천하위공의 대동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이상룡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입헌군주제보다 민주공화제가, 그리고 민주공화제보다 사회주의가 다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바람직한 역사적 진화와 진보의 방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공자가 말한 대동세로의 진화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그의 독립운동론이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경우 사회진화론은 유교의 대동사상과 결합되면서 경쟁론의 측면보다는 진화론의 측면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그의 경우, 역사의 발전과 진보의 기준은 자유와 평등의 확대였으며, 이는 유교의 보편적 인의도덕이라는 척도에 의해 선택된 것이었다.

이상룡의 사상적 변화의 기본적 바탕은 유교였다. 그의 의병항쟁론, 구국계몽운동론, 독립전쟁 준비론 등은 모두 유교적 가치의 실천 과정이었다. 사회진화론이나 공화주의나 사회주의 등은 유교적 가치관의 틀 내에서 해석되고 선별적으로 수용되었다. 퇴계학의 의리정신은 독립운동의 바탕이 되었고, 유교의 인의도덕이 세계적으로 실현된 대동사회는 독립된 한민족이 만들어 가야하는 인류 평등과 세계 평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9) 이상룡, 「공교미지」, 『국역 석주유고』 하, 579~580쪽.

4. 신채호의 진화사관에서 혁명사관으로의 전회

신채호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역사관이 사회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양계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사회진화론적 역사관이 무정부주의 사상 수용 이후 혁명적 역사관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그가 사회진화론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⁰⁾

성균관 박사 출신인 신채호는 1910년 이전 구국계몽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생존경쟁, 우승열패, 자연도태, 적자생존 이론이 적용되는 사회진화론적 현실로 진단하였다. 따라서 그도 당시의 개화자강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실업의 진흥을 통한 자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의 경우 제국주의 열강들은 한국이 본받아야 할 선진문명 국가였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자유, 평등, 민족주의의 가치는 20세기 신국민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덕목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자강력을 양성하여 선진 문명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 자주독립의 길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기에, 한국인을 20세기 신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신국민이 되기 위한 국민적 각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역사관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1908년 「독사신문」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하여 전통적 유교사관을 중화주의적 역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자주적이며 독립지향적인 민족주의 사학의 수립을 주장했다.²¹⁾ 그리고 계속하여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과 같은 민족사적 영웅에 대한 전기들을 저술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인물이며, 최영은 고려 말기 요동 정벌을 주장했던 인물이며, 이순신은 임진왜란 시기 왜군을 해상에서 물리친 인물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민족이 외국 세력과 대립하거나 전쟁을 벌일 때 민족자주의 역량을 발휘하거나 승리를 거둔 민족사적 영웅들이다. 말하자면 생존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헌신하거나 승리를 획득한 우자이며 승자로서 한민족을 적자로 생존하게 만든 인물들이다. 그

20) 필자는 신채호의 역사관이 사회진화론적 역사관에서 혁명적 역사관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신채호의 진화사관과 혁명사관의 대치」, 한형구 외, 『단재 신채호의 현대적 조명』, 다운샘, 2003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여기서는 이 연구 성과를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21) 신채호, 「독사신문」, 『대한매일신보』 1908. 8. 27. ~ 12. 23.

의 역사적 영웅의 선택은 사회진화론적 경쟁론에서의 승리자인지의 여부였다. 이 점에서 그의 민족주의 사학은 사회진화론에 의거한 구국계몽운동론의 관점이 반영된 진화론적 역사인식을 반영한다.

20세기 신국민은 이러한 민족사적 영웅을 본받아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문명부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약자, 약소민족, 약소국가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승리하는 것이 곧 자주 독립이라고 보았다. 그의 경우, 민족주의는 곧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었다. 왜냐하면 약소국 한국이 본 받아야 할 문명부강한 국가는 먼저 문명 진보를 이룩하여 약자를 멸망시키고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였다. 이 점에서 그의 사회진화론적 역사관에서는 논리적으로만 보면, 한국의 자주 독립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우승열패가 자연 법칙이듯이 약소민족이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멸망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신채호는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그가 기대했던 대로 한국인이 대오각성하여 20세기 신국민이 되어 자주독립을 성취하지 못했다.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망 이후 한국인들, 특히 국외로 망명한 경우에는 자강력을 양성할 물질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나라가 없는 약한 사람이지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사회진화론이 아니 새로운 대안적 이론이 필요했다.

국망 이후 신채호는 ‘무국민의 특별도덕’을 말한다. 나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국민의 도덕이 같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나라가 없는 국민은 나라가 있고 강대한 나라의 국민의 도덕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전의 사회진화론적 역사관에서는 문명의 보편적 발전을 믿었고, 그러기에 20세기 신국민은 바로 선진문명국가의 국민을 배우고 닮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망국민은 유국민과는 다른 특별한 도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²²⁾

그는 기존의 도덕과 윤리가 나라가 없는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과거의 성현, 종교가, 윤리가는 지배계급의 주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²³⁾ 유교, 기독교, 불교 등 일체의 종교와 도덕은 지배자와 강자를 지배와 통제를 위한 도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기성 중

22) 신채호, 「도덕」, 『단재신채호전집』 하, 형설출판사, 1977, 140~142쪽.

23) 신채호, 「선언문」, 『단재신채호전집』 하, 48~49쪽.

교와 도덕은 부정과 파괴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1923년 「조선혁명선언」에서 과거의 모든 도덕은 지배계급이 다수의 민중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노예 도덕이라고 부정하였다.

1923년 1월 신채호는 무정부주의 사상을 토대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여 의열단의 행동강령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신채호는 기존의 독립운동 노선인 외교론, 실력양성론, 독립전쟁 준비론 등을 모두 비판하였다. 그가 기존의 독립운동론을 대신하여 내세운 것이 민중직접혁명론이었다. 외교론, 실력양성론, 독립전쟁 준비론 등은 기본적으로 사회진화론의 논리에 의거한 독립론이었다. 말하자면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외교 혹은 전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힘의 우위를 다투는 생존경쟁의 국제적 현실 속에서 민족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실력을 축적해가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신채호는 민중 자신에 의한 즉각적인 투쟁만이 진정한 독립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중직접혁명론을 내세웠다.²⁴⁾ 이후 그의 역사인식은 사회진화론적 진화사관에서 투쟁사관 혹은 혁명사관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그가 집필한『조선상고사』 ‘총론’과 「용과 용의 대격전」은 민중직접혁명론에 의거한 혁명사관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역사를 문명진보의 과정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아와 비아와의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적 과정’으로 본다. 진화와 진보의 목적이나 방향을 거부한다. 투쟁 그 자체가 자아, 민족적 자아 혹은 민중적 자아의 끊임없는 자기 확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사회진화론적 진화사관에서 약자 혹은 민중은 실력 양성을 통해 강자 혹은 영웅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무정부주의적 투쟁 사관에서는 약자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약자 자체로서 강자와 지배자와 권력에 저항하는 행위 자체를 중시한다. 말하자면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강자와 지배자에 대한 부정을 통해 강약, 승패, 지배와 피지배의 구별과 차별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의 결과 그는 ‘약자의 힘’ 또는 ‘무력(無力)의 힘’이라는 모순적 진리를 말한다. 그는 과거의 약자들 혹은 반역자들의 투쟁에 주목한다. 힘과 권력이 없는 존재들이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냈다. 그는 민중들이 억

24)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1923. 1, 『전집』 항, 44~45쪽.

압받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켜왔던 ‘저주’의 전통에 주목했다.²⁵⁾ 그는 힘없는 민중의 저항 의지 즉 혁명성이야말로 민족 독립과 세계 평화의 원동력임을 주장했던 것이다.²⁶⁾

그의 혁명사관에 따라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외경쟁에서 승리한 민족사적 영웅 대신에 역사 속에서의 약자였기 때문에 패배한 반역자를 새롭게 평가한다.

역사 속의 승리자는 지배세력에게 아첨한 ‘약아빠진 쥐새끼’로 폄하되며, 실패하여 반역자가 된 사람들이 인의와 용기를 겸비한 인물로 새롭게 평가된다. 그는 약자를 위해 지배 권력에 저항하면서 자신을 희생한 반역아를 진정한 인의와 용기를 겸비한 혁명적 인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사에서는 정여립, 연개소문, 궁예가 그들이었다. 그의 혁명사관에서는 생존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인의도덕의 진정성과 자기희생적이고 투쟁적인 혁명성이 새로운 인물 평가 기준으로 중시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신채호의 혁명적 투쟁사관을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투쟁사관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진화론에서의 경쟁과 투쟁은 살아남기 위한 승리를 위한 약자를 파괴하고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는 경쟁과 투쟁이었다. 그러나 혁명사관에서의 투쟁은 지배자와 권력자에 대한 약자인 민중의 직접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이다. 물질적 부와 권력을 획득하여 타자를 패배시키고 굴복시키는 승리를 위한 투쟁이 아니다. 오히려 성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희생적인 투쟁이 진정한 인의와 용기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점에서 혁명사관에서는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인의와 용기라는 도덕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다.

신채호는 민중직접혁명이 실현된 이상적 조선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권력과 지배와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위한 혁명적 투쟁만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그가 한국 역사 속에서 찾은 것은 궁예가 만들고자 한 세상이었다. 그는 「일목대왕이 철퇴」에서 궁예가 『궁예 대왕경』을 한글로 써서 민중의 도덕 표준을 만든다는 구상을 하였다. 그런데, 궁예가 만드는 경전의 핵심 교리는 궁예의 부인이 제

25) 신채호, 「금전, 첩포, 저주」, 『전집』 하, 127~128쪽.

26) 김기승, 「신채호의 진화사관과 혁명사관의 대치」, 한형구 외, 『단재 신채호의 현대적 조명』, 다운샘, 2003, 참조.

시한 ‘사랑’이었다. 신채호는 공예와 그의 부인 강씨를 통해 ‘사랑’을 핵심 교리로 삼는 새로운 경전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강씨는 평민 출신으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사랑’은 평민의 도덕이다.²⁷⁾

민중 직접혁명은 민중의 자기희생적 사랑의 표현이었다. 무정부주의에서는 자유 연합 혹은 자유 연대를 추구한다. 약자인 민중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자유연대가 제국주의에 대한 약소민족의 연대적 투쟁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는 1928년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의 경우, 제국주의에 대한 약소민족의 연대 투쟁이 침략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었다.

5. 조소앙의 종교통합론과 공화주의

조소앙은 어려서 전통적 유학 교육을 받고, 성균관에 입학하여 2년간 본격적인 유학을 공부하였다.²⁸⁾ 그 후에는 1904년부터 1912년까지 일본의 중학교와 대학에서 근대적 학문을 수학하였다. 그는 일본 유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유학생 단체의 기관지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계몽적 글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기반으로 그는 1910년에는 일본유학생 단체의 대표가 되어 일본 유학생의 합방 반대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조소앙은 일본 유학 시기 바바 타츠이(馬場辰猪)의 「천부인권론」을 통해 사회진화론을 접하였다. 그는 「천부인권론」을 번역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자유인권론을 옹호하기 위해 제국주의적 국권론의 토대가 된 사회진화론을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사회진화론을 민권 신장에 저해된다고 비판적으로 보았다.²⁹⁾ 또한 그는 국내에서 사회진화론적 자강론에 의거한 구국계몽운동이 전개될 때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국내의 신문이나 잡지에서 언급되었던 ‘생존경쟁’, ‘우승열패’, ‘자연도태’, ‘적자생존’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했던 자강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27) 신채호, 「일목대왕의 철퇴」, 『전집』 하, 299~322쪽.

28) 조소앙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는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지영사, 2003 과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에 의거함.

29)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지영사, 2003, 77~78쪽.

오히려 그는 생존경쟁과 우승열패로 표현되는 사회진화론적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대 중국에서 독립당 즉 산야에서 도적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녹림시대’ 즉 야만의 시대라고 비판하였다.³⁰⁾ 생존경쟁과 우승열패를 다투는 사회진화론적 현실을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문명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파괴하는 야만적 상황이기 때문에 극복되거나 부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조소앙은 메이지대학 법학과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근대적 법학을 공부한 뒤 귀국하여 한국의 근대화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자, 법학이 아닌 종교와 철학의 탐색을 통해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기독교에 입교하고, 유교, 불교, 도교, 서양 철학 등을 두루 섭렵하였다. 당시 일본 철학계에서는 동서양 철학의 통합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었고, 조소앙도 이러한 일본 철학계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세계의 종교와 철학의 통일을 통해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평화와 한국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그의 소명의식에 기초한 구세주의적 실천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고 조국을 독립시키며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다.³¹⁾

1912년 일본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으로 망명했던 그는 1915년 일신교라는 세계 통합적인 종교를 구상하였다. 공자, 노자, 단군,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예수 등 6명의 성현을 일신의 자제로 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요일마다 실천하는 대동종교를 구상했다. 일신교와 대동종교에서는 사해동포주의를 내세우면서 평등과 평화를 강조하였다.³²⁾ 1916년 그는 상해에서 한국, 중국, 인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7개국이 연합한 아세아민족반일대동당 결성 작업을 추진하였다.

1917년에는 러시아혁명이 일어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가까워지면서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던 1917년 7월 그는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과 함께 「대동단결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가 기초한 이 선언문은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약소민족의 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고조되는 때에 한국인의 통일적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30) 조소앙, 「녹림시대를 탄함」, 『공수학보』 1, 1907. 3 ; 『만세보』 1907. 6. 2 ~ 5.

31)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102~108쪽.

32)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108~127쪽.

임시정부 수립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황제가 일본에 주권을 양도한 것을 이민족에게 주권을 양여한 적이 없다는 민족사적 불문율에 근거하여 불법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경술국치일을 황제가 주권 포기를 선언한 날로 해석했다. 그리고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즉시 국민이 주권을 인수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 동포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이 동포의 위임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일적 지도기관, 즉 임시정부를 조직하자고 제안하였다.³³⁾ 이 문건은 대한제국 황제의 주권이 일본 제국에게 넘어가지 않고 국내 동포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국민의 위임에 따른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단합하여 임시정부를 구성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즉 국민주권주의에 의거하여 새로운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1917년 8월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국제사회당 대회가 개최되자 조선사회당 대표 명의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영문서한을 보냈다. 이는 조소앙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찍부터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위해 1919년에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미국의 윌슨대통령은 전후 처리 원칙으로 민족자결주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국내외에서 파리강화회의를 활용한 독립운동이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조소앙은 1919년 2월에는 길림에서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고, 박은식, 신채호, 이상룡 등 39인의 해외독립운동가 명의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그가 기초한 「대한독립선언서」는 단군 숭배의 대중교적 사고와 일신교의 사해동포주의에 바탕을 두면서 ‘민족평등’, ‘평균천하’, ‘남녀평등’, ‘빈부평등’, ‘지우(지식)평등’, ‘노유(세대)평등’ 등 평등주의가 한국의 독립과 세계평화를 이룩할 핵심 가치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내의 3.1독립선언서의 비폭력 평화 노선과는 달리 ‘육탄혈전’의 각오를 밝히는 등 의열투쟁 노선을 천명하였다.³⁴⁾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뒤, 독립운동 지사들은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임시

33)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194~202쪽.

34)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141~191쪽, 203~206쪽.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였다. 조소앙은 1919년 4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상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는 당시 회의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할 것과 의장 선출을 제안하였다. 이동녕 의장이 진행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조소앙은 신익희, 이광수와 함께 「대한민국임시헌장」과 「임시의정원법」 기초위원으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는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여 민주공화제 채택을 규정했고, 제 3조에서는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이라 하여 평등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제 4조에서는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하여 자유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 7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함”이라고 하여 인류의 보편성에 토대를 둔 세계 평화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할 뜻을 밝혔다.³⁵⁾ 이로써 민주공화주의와 세계 인류의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대동단결의 선언」에는 이상룡을 제외하고,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이 서명했다. 「대한독립선언서」에는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 모두 서명자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대한민국임시헌장」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인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들 문건은 유교적 전통에 기반을 둔 한국 근대 독립운동가들이 공화주의자로 변모되어 발전되는 과정을 잘 나타내는 자료라고 하겠다.

조소앙의 공화주의와 평화주의는 1920년대에는 서양의 사회주의 및 무정부주의의 수용과 함께 세계 인류의 보편적 도덕관에 토대를 둔 세계일가를 실천하기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가 구상한 ‘한살림당’은 공화주의와 평화주의를 평등주의로 발전시키는 독립운동 정당이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모색은 1930년대 중국 관내 독립운동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삼균주의로 체계화되었다. 그 결과 삼균주의는 1940년대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기본적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5)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63~67쪽.

6. 결론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유교적 소양을 받고 성장하였으며, 자신의 사상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유교적 사유와 가치관을 지속적인 참조 항으로 삼았다.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의 경우, 사회진화론은 중국의 변법사상이 양계초의 번안을 통해 큰 마찰 없이 수용되었다. 박은식과이상룡은 양계초의 영향을 받아 천하위공의 대동사회를 유교적 유토피아로 받아들였다. 박은식은 사회진화론과 대동사상과는 대립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는데 비해, 이상룡은 대동사상과 사회진화론은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 신채호의 경우에는 양계초의 신민론과 역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강유위와 양계초는 군주권을 제한하고 민권을 강화하여 입헌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공자의 대동사상과 맹자의 민본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거란세-승평세(소강세)-태평세(대동세)로의 진화가 역사의 발전 방향이라고 함으로써 근대 민주국가의 건설이 미래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와 같은 유교 지식인들이 민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서양의 민주주의를 수용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신채호의 경우에는 사회진화론적 역사관의 형성에서는 양계초의 영향이 나타나지만, 1920년대에는 무정부주의 수용을 통해 양계초식 사회진화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혁명사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화주의와 평화주의에 잠시 공감을 했지만, 곧바로 국가 권력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를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경쟁, 승패, 우열, 지배와 피지배 자체를 거부하는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상호부조'를 오히려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경쟁이 아니라 약자 혹은 피지배층의 '자유 연합' 혹은 '연대'를 중시하였다.

조소앙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천부인권론이나 종교적이며 도덕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사회진화론적 경쟁론은 부정되었다. 세계주의적 보편적 종교의 수립을 통해 세계평화와 한국의 독립을 추진하려던 시도는 제1차 세계대전과 3.1운동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하여 독립국가 건설 원칙으로 민주공화주의, 세계평화주의, 평등주의를 내세웠다.

「대한민국임시헌장」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평화사상에 대해 박은식, 이상룡, 신채

호, 조소앙 등은 모두 공감하였다. 박은식은 임정 수립 초기부터 참여하였고, 1925년에는 임정 대통령이 되었다. 이상룡은 서간도의 군정부를 이끌다가 서로군정서로 개편한 후 임정 산하의 무장독립군 지도자가 되었고, 1926년에는 초대 국무령을 역임하였다. 신채호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당시에는 임정에 참여했지만,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문제로 반임정운동의 선봉에 서서 임정을 부인하였다. 그는 약자와 민중의 입장에서 권력과 지배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적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소앙은 「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이후 유럽에 가서 유럽의 사회주의 세력을 대상으로 독립외교를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1920년대에는 무정부주의도 받아들여 만민이 평등한 세계를 한 살림으로 만드는 독립운동론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의 사상적 모색은 1930년대 좌익과 우익을 통합하기 위한 민족유일당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등주의를 핵심으로 한 삼균주의로 체계화되었다. 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삼균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기초함으로써 좌우연합 정부 구성의 이론적 토대를 다졌다. 조소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초기부터 1940년대까지 독립운동 상에 나타난 다양한 이념을 통합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전개했다.

유교 교육을 받았던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은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망 이후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진화론적 힘의 논리를 배격하고 도덕주의적 평화를 지향하였다. 그들은 힘에 의한 부도불법한 지배에 대한 무장 저항이 정의이며, 독립된 후의 국제질서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토론문

이동언(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소장)

오늘 「20세기 초 독립운동가들의 사회진화론 극복과 평화사상의 형성-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의 경우」에 관해 발표를 해주신 김기승선생님께서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으로 많은 연구업적을 내셨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한국의 독립운동가들 65, 독립기념관, 2015)와 『유림 독립운동의 상징 심산 김창숙』(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인물총서 14, 2017)을 내신바 있습니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독립운동 방략을 살펴보면 독립운동 세력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립전쟁론과 실력양성론으로 양립되어 있었습니다. 구한말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이 독립전쟁론과 실력양성론이 대립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의병전쟁은 위정척사사상과 민중항쟁 의식을 기반으로 한 독립전쟁론이었고, 계몽운동은 사회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실력양성론입니다. 물론 독립운동지도자들은 독립운동 이념을 체계화하고 독립운동 방략을 정비하고 조정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김기승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은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내외에서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경술국치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 4인을 선정하여 이들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고 극복하면서 독립운동론을 정립해 가는 과정을 비교·분석하고 더 나아가 사회진화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

습니다. 관련인물들의 전집과 유고, 저서 등이 공간되어 있습니다만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느라 애쓰신 선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몇가지 토론자로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은식, 이상룡, 신채호, 조소앙 4인 비교·분석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독립운동지도자 4인의 인적사항, 저술, 활동,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표로 정리하면 그들이 사회진화론을 극복해 가는 과정과 사상적인 변화를 비교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박은식, 신채호와 관련하여

박은식, 신채호 등 신민회 인사들이 보황주의적 성격의 신한혁명당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신한혁명당은 이상설이 1915년 3월 북경에서 망명정부 수립을 위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입니다. 박은식과 신채호는 신민회에 참가할 당시에는 공화주의자였으나 신한혁명당에 참가당시에는 보황주의자로 태도변화를 보였는지? 신민회 당시에도 보황주의자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 「대동단결의 선언」과 관련하여

「대동단결의 선언」에 조소앙, 박은식, 신채호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5. 조소앙의 종교통합론과 공화주의에는 「대동단결의 선언」이 언급되어 있지만 박은식과 신채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동단결의 선언」은 1917년 7월 상해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독립운동 방략을 개척하기 위해 민족대회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선언입니다. 발기인은 신정(申攄;신규식)·조용은(趙鏞殷;조소앙)·신현민[申獻民;신석우(申錫雨)]·박용만·한진[(韓震;한교(韓鎮教)]·홍위[洪煒;홍명희(洪命熹)]·박은식(朴殷植)·신채호(申采浩)·윤세복(尹世復)·조욱[曹煜;조성환(曹成煥)]·박기준(朴基駿)·신빈(申斌)·김성[金成;김규식(金奎植)]·이일[李逸;이용혁(李龍赫)] 등 14명입니다.

2 세션

「대동단결의 선언」은 재미인사외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그들은 대중교·동제사·신한혁명당과 관련있는 인사들입니다. 「대동단결의 선언」이 발표된 배경은 안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만주·노령지방에서 독립운동이 양국정부의 강압으로 봉쇄당하여 권업회·대한광복군정부·간민회·부민단 등이 해체되고, 독립운동가들이 감금되거나 추방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그의 압제하에 있던 핀란드와 폴란드가 독립선언을 하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독립의 기운을 보이는 등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표방하였습니다. 대동단결선언의 요지는 첫째 국민주권설, 둘째 주권의 행사 즉 국가적 행동의 가능성, 셋째 국가적 행동을 성취하기 위해 통일기관·통일국가·원만한 국가의 달성이라는 3단계의 독립론 제창입니다.

넷째, 자료표기와 용어서술과 관련하여

기존의 서술에서 「대동단결선언」으로 대부분 표기하고 있고, 오늘 발표논문에서는 「대동단결의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본자료를 보면 표지와 선언서 내용 3장,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단결의 선언」은 총 148행으로 된 선언서로 그 중 18행은 대동단결의 필요성, 12행은 국내참상, 50행은 해외동지들의 역할, 18행은 국제정세, 마지막 12행은 대동단결의 호소, 본문은 모두 118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의(提議)의 강령(綱領) 11행과 제의에 대한 답상(答狀) 관계가 19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질은 갱지(표지는 모조지), 가로 20cm, 세로 29cm의 12면에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장표지는 세로 박스안에 세로로 宣言 한자로 되어있고, 선언서 제목은

「大同團結의宣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표기 시에는 「大同團結의宣言」이 정확한 표기입니다. 물론 일반서술에서는 한글로 「대동단결의 선언」으로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발표5〉

1910년대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공화주의·공화제 수용 양상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토론문 :

황민호(송실대)

1910년대 만주 독립운동 세력의 공화주의 · 공화제 수용 양상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1910년대~1920년대 초 중국 동북지역(만주)에 산재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의 조직이념과 규정(규칙), 선언문 · 선언서, 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진화론이 영향을 미친 독립전쟁론과 공화주의 · 공화제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을 개략적으로 분석, 정리코자 한한다.

주요 대상 단체는 다음과 같다.

- ① 西間島 지역 : 耕學社新興武官學校扶民團韓民會西路軍政署光韓團大韓獨立團大韓青年聯合會光復軍司令部天摩山隊普合團義成團大韓獨立軍備團韓僑公會
- ② 北間島 지역 : 重光團正義團北路軍政署間島國民會大韓正義軍政司大韓獨立軍 · 軍務都督府(간도)義軍府野團血誠團大韓新民會新民團義軍團

2.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과 안동 유림의 남만주 이주

신민회는 1907년 4월 경 안창호의 주창으로 梁起鐸 · 全德基 · 이동휘 · 이동녕 · 李甲 · 유동열(柳東說) · 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盧伯麟 · 李昇薰 · 安泰國 · 이시영(李始榮) · 이회영 · 이상재 · 尹致昊 · 李剛 · 曹成煥 · 김구 · 신채호 · 李

鍾浩·朱鎭洙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신민회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공화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비밀조직이었는데,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위기상황에서 교육구국운동, 애국계몽 강연·학회활동, 출판운동, 민족산업 진흥운동, 청년운동 등을 전개하여 기울어가는 국권을 회복하려 하였다.¹⁾

특히 신민회는 일본 침략세력이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을 강행한 직후인 1907년 8월 해외 독립군 기지 개척과 독립군 창건 문제를 최초로 검토하였다. 이후 신민회가 이러한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시기는 의병전쟁이 쇠퇴기에 접어든 1909년 봄이었다. 이때 신민회는 서울의 梁起鐸 집에서 전국 간부회의를 열고 만주·연해주 등 해외에 적당한 후보지를 골라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여 강력한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실천되기 전에 일본 침략의 전초 한국통감부는 1909년 10월 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처단 직후에 안창호·이동휘·유동열·이종호·김희선(金羲善) 등 다수의 신민회 간부들을 구속하였다가 이듬해 2월에 석방하였다. 이에 신민회는 1910년 3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독립전쟁 전략’을 채택하고, 해외에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²⁾ 주목되는 사실은 일제 당국은 1911년 7월 이후부터 신민회를 ‘무장암살단체’로 규정하여 매우 위협시하게 되었다.³⁾

‘독립전쟁론’은 1900년대 초의 구국계몽운동 및 항일 의병전쟁의 이념과 논리가 합치하여 발전한 새로운 독립운동 방략과 논리였다. 즉 일본 침략세력으로부터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적당한 시기에 일본 침략세력과 독립전쟁을 결행하는 것이라는 독립운동의 이론체계였다. 독립전쟁론의 첫 실천방안이 바로 국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주요 명망가들을 중

1) 신용하, 1985,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한국민족 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7-24쪽. 다만 윤경로는 신민회 창건 시기를 1907년 10월부터 1908년 1월 경으로 파악하고 있다(윤경로, 2012,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개정증보판), 한성대학교 출판부, 307쪽). 윤경로는 공화주의를 표방한 신민회에 이동휘 등 현직 관료가 참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2) 최근 윤경로는 국내학계의 기존 신민회 연구성과가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개진하는 저서를 간행하여 주목된다. 그는 신민회 창건 시기를 1907년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전체 회원도 300명을 넘지 않았으며, 신민회의 조직체계와 규모, 활동 내용도 일제 당국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가 과장왜곡한 ‘만들어진 신민회’와 ‘실제 신민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윤경로, 2012, 위의 책, 473~481쪽 참조).

3) 윤경로, 위의 책, ,

심으로 집단적 이주가 구상되어 실천되었다.⁴⁾

1910~1911년의 ‘안악사건(일명 安明根 사건)’과 ‘데라우치(寺內正毅) 조선총독 암살음모사건(일명 105인사건)’ 등 조선총독부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민회 계열 주요 인사들은 1911년 봄 남만주 柳河縣 三源堡에 자치조직인 耕學社와 新韓民村을 건설하고 6월에 鄒家街에서 ‘新興講習所’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곳에서 이시영·이석영·이회영 일가와 이동녕·양기탁, 이상룡·허위·김대락 일가 등이 가산을 정리하고 집단으로 이주하여 韓人 마을과 독립군 기지를 개척, 건설하였다. 신흥강습소는 뒤에 ‘신흥무관학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학교는 많은 독립운동 인재를 배출하여 1920~1930년대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졌다.⁵⁾ 이처럼 1910년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1920년대 봉오동·청산리전투 등의 독립전쟁, 나아가 1920~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안동 유림의 남만주(서간도) 이주 역시 이같은 신민회 등의 일련의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金大洛과 李相龍 등 안동지역 유지들은 金東三(본명 金肯植)과 金萬植 등을 사전에 현지에 파견하여 답사케 한 뒤, 이주가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 안동 지역사회의 리더 이상룡은 朱鎭洙·柳寅植 등을 통해 신민회의 위와 같은 계획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10년 12월 경 協東學校 임원들은 만주로 망명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김동삼과 金衡植(김대락의 아들), 李源一을 선발대로 파견하였다.⁷⁾ 이상룡·김대락 등 안동유림 문중의 만주 이주과정에서 김동삼이 큰 역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동삼은 이상룡과 김대락의 지도와 후원을 바탕으로 줄곧 만주지역 민족운동의 선두에 서서 독립운동과 이주민들의 자치, 행정, 교육운동 등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안동의 혁신유림 계열 인사와 그 관련 인물들이 남만주, 특히 서간도 지역을 이주·망명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만주’에 대한 특유의 역사·민족의식이 있었고, 전국적 조직인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과 독립전쟁 방략에 적절히 부응한 요인,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⁸⁾

4) 신용하, 1985, 앞의 논문, 100-106쪽 및 윤병석, 1990, 『독립군사』, 지식산업사 참조.

5) 신용하, 위의 논문, 100-119쪽.

6) 김희곤, 2007,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512쪽.

7) 김희곤, 2007, 위의 책, 513쪽.

8) 강윤정, 2012,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44쪽.

3. 한 독립군 지도자(홍범도)의 군자금모집 사례와 독립전쟁 인식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소에는 1910년 전후 중국동북(연변)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沿海州)에서 활동중이던 홍범도장군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부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 즉 ①홍범도가 사무담당 최원세(崔元世)에게 보낸 편지(1910. 8.24), ②홍범도의 편지3통(1910.3.28, 1910.2.11, 1909.11.13) 등 홍범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편지 4통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필체나 내용상으로 보아 홍범도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는 3통이며, 1통은 다른 문사(文士)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군자금 모집과 무기 구입, 그리고 독립운동가 사이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주요 편지 3통의 내용을보면 다음과 같다.

1) 홍범도의 편지(1909년 11월 13일)

볶은지 오래되어 아쉽습니다. 삼가 살피지 못하여 이처럼 추운 날씨에 여러분 기체만강하옵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과 다름없으니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전에 오셨을 때에도 말씀하셨거니와 이곳에 당하여 우리 겨레도 시급하옵고, 군대의 물건을 사는 것도 매우 시급합니다. 겸하여 타처(他處) 각사(各社)에서는 조속히 필납(畢納)하였는데 귀처(貴處)에서는 어찌하여 여름부터 다른 곳보다 먼저된다고 하였으면서도 차일피일(此日彼日)하니 어찌된 일이 온지 알 수 없습니다. 귀처로 말미암아 나란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내왕인의 신발값도 되지 못할 모양이니 이번에 강 00원으로 의연금(義捐金)을 조속히 송부(送付)하여 주시며, 만약 금번에 보내주지 못할 양이면 귀처 공원(公員-공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을 허커로 오게 하옵소서. 오직 급하와 불비례(不備禮 - 예를 갖추지 못함 : 발표자), 1909년 11월 13일홍범도(인)⁹⁾

2) 홍범도의 편지(1910년 2월 11일)(대리로 쓴 것으로 추정)

전후 한달이 지났으나 우울함이 날로 심합니다.

9) 박환, 『사진으로 보는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 민속원, 2013, 313쪽. 원본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삼가 살피옵건데 요즈음 몸이 평안하신지 우러러 마음속 깊이 빕니다. 저는 아직은 옛날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므로 우러러 아뢰오니 얼마가 되었는지 영수증에 기록된 원조금(援助金)을 내려보내 주시길 천만 바라옵니다. 경술(庚戌, 1910년) 2월 11일 홍범도(인)¹⁰⁾

홍범도가 1910년 3월 군자금과 무기를 모집하기 위해 분투한 사실은 그가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으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3) 홍범도의 편지(1910.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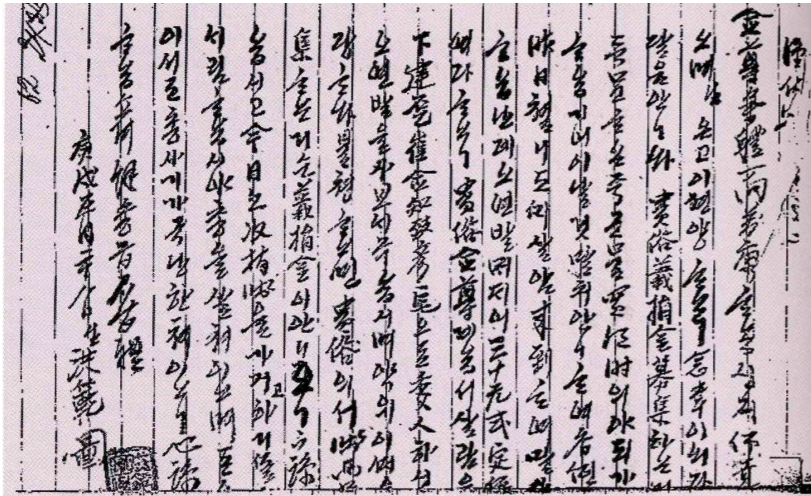
맹춘(孟春)에 아뢰옵니다.

여러분 기체 만강하옵신지 우러러 문안 드립니다. 저는 예전과 다름없사오니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처 의연금(義捐金) 모집하는 것을 얻어들은즉, 군대 물건을 구입할 때에 되겠다 하옵기에 이날 것 말하지 아니하였더니, 어제 천리도(千里道)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오연발 한정에 삼십원식(三十元式) 정가(定價)한다고 하니, 귀처의 여러분께서 사람을 하건돌(下建鬲) 최첨지(崔僉知) 치언택(致彦宅)으로 보내시어, 오연발(五連發) 총을 사서 보내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때를 당하여 허락하지 않으면 귀처에서 얼마간 모집하는 것은 의연금이 아니오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금일(今日)로 거둔 돈을 가지고 하건돌로 왕립하여 러시아 총을 살 것이오며, 돈이 있어도 총을 사기가 극히 어려운 처지이오니 헤아려 주십시오. 저는 바빠 불비례(不備禮 - 예를 갖추지 못함) - 경술(庚戌, 1910년-발표자) 3월 28일 홍범도(인)¹¹⁾

위의 편지를 보면, 한인 동포들로부터 의연금을 모집하여 러시아제 최신식 5연발 소총을 구입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0) 박환, 위의 책, 314쪽. 원본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11) 위와 같음.



1910년 연해주에서 모집한 의연금(군자금)으로 무기 구입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의 흥범도 서신

4) 동포들의 성원과 독립군 지도자 흥범도의 각오

일찍이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의 주역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흥범도장군은 동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항상 부하 독립군들에게 강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일제 정보자료에 비교적 상세히 파악되고 있는 내용의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국권의 회복을 뜻한 이래로 이미 10년의 성상(星霜)을 지냈으며 공공연하게 독립의 의군(義軍)을 일으켜 한족(韓族)의 독립을 힘써 외친 이래 1년 반을 지냈다. 그 사이에 고국산천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영토에 유리 전전하여 비참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로부터 돈과 곡식의 의연(義捐)을 받은 것이 참으로 많은 바 있다. (중략) 우리들 독립의 군의 일단(一團)은 일의 성(成), 불성을 논하지 않고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소지(素志; 독립에 대한 평소의 뜻) 관철에 분투함으로써 한족 독립을 최후까지 힘을 다하여 외쳐, 죽은 후에야 그 처야 한다는 것을 항상 부하에게 훈시하고 있다……(밑줄은 필자)”¹²⁾

12) 姜德相 · 梶村秀樹 編, 『現代史資料』 27(東京:みすず書房, 1976), 360쪽.

1920년대 독립전쟁의 금자탑 봉오동·청산리전투는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한 투철한 독립정신의 귀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남만주 신흥강습소의 건립과 안동 유림

1) 안창호의 독립운동 방략과 이상룡·김동삼 등의 실현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불멸의 자취를 남긴 신흥무관학교는 대외적으로(공식적으로는) ‘신흥무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사실상 군사학교적 성격을 띠는 무관학교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¹³⁾ 학계에서는 1911년 여름 남만주(서간도) 유하현 趙家街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고, 1913년 통화현 哈泥河로 이전하여 ‘신흥중학’으로 개칭했으며, 1919년 5월 3일(음력, 양력 5월 31일) 유하현 孤山子 大肚子로 이전하여 다시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물론 이 밖에도 신흥학교, 新興塾, 大東中學校, 養成中學校, 신흥군관학교 등의 이칭이 알려져 있다.¹⁵⁾ 이같은 다양한 명칭의 혼재는 외국 땅, 그것도 일본과 중국 당국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 輿地라는 매우 험난한 지역여건에서 비밀리에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했던 이 학교의 비극적 운명을 시사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관련 자료의 인멸과 관계 인물들의 기록 미흡 등으로 진상이 아직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여간 초창기, 즉 1911년 남만주 신흥강습소의 설립과 운영과정을 검토해볼 때 신민회 창건의 주역이었던 安昌浩가 후일 중국 上海에서 열린 安泰國서거 1주기 추

13) 이회영은 통화현 합니하에 세운 학교를 ‘신흥무관학교’라고 했으며, 부인 이은숙 역시 ‘무관학교’로 회고하였다(박성순, 2017, 앞의 논문, 157쪽).

14) 박영석, 1989,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0·31·63쪽 및 채근식, 1948, 『무장독립운동 秘史』, 대한민국 공보처, 52쪽. 학계에서는 채근식의 저술을 근거로 1919년 5월 3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했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논거, 즉 신뢰할 만한 1차 사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5) 대동중학교와 양성중학교에 대해서는 박환, 2014,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 참조. 李觀植은 ‘신흥군관학교’라고 불렀다(이관직, 1985, 『우당 이회영 實記』, 『우당 이회영 전』, 을유문화사, 175쪽; 박성순, 2017, 앞의 논문, 157쪽에서 재인용).

도식에서 신민회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매우 주목된다.

즉 안창호는 1921년 4월 11일 개최된 안태국 1주기 추도식에서 장문의 추도사를 했는데, 이 때 신민회의 宗旨을 첫째 단결력, 둘째 人才力, 셋째 金錢力 등 세가지로 밝혔고, 신민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서도 역시 위의 세가지 사항을 중시했다고 밝혔던 것이다.¹⁶⁾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결력은 조직과 조직운영의 필수요소이며, 인재력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그를 통한 실천 주체의 결집, 금전력은 자금확보와 그것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창호는 금전력은 재산가들의 협박이나 유인 수단이 아닌 실업 양성, 財源의 토대를 굳건히 하여 大事를 성취할 만한 자본력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¹⁷⁾

특히 안창호의 술회에 따르면 신민회의 인재양성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인재는 어떻게 양성하려 하였는고. 곧 단결한 동지가 국내 각 구역을 분담하여 일반 국민에게 교육의 정신을 고취하여 학교의 설립을 장려케 하며, 특별히 각 要地에 중학교를 설립하고 보통의 學科를 教授하는 이외에 軍人의 정신으로 훈련하여 有事之時에는 곧 戰線에 나아가 民軍을 지휘할 만한 자격자를 양성하려 하였으니, 곧 중학교로서 정신상 軍營을 作하려 하였소. 그 외에는 有志한 청년을 망라하여 務實力行의 정신으로 修養을 同盟하여 건전한 인격을 작성케 하려고 국내에 有志한 인사들과 合同하여 기관을 설립하고 진행하여 왔소.”¹⁸⁾

안창호의 이같은 구상은 신흥강습소의 설립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신민회의 주역들은 이미 국내에서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신식학교를 세우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안창호의 역할만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창호와 신민회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신

16) 「故東吾安泰國先生追悼式(안창호선생이 추도사를 述하여)」, 『獨立新聞』1921.4.21자(3쪽) 및 윤경로, 2012, 앞의 책, 295~297쪽.

17) 위의「故東吾安泰國先生追悼式(안창호선생이 추도사를 述하여)」및 윤경로, 위의 책, 298쪽.

18) 「故東吾安泰國先生追悼式(안창호선생이 추도사를 述하여)」, 『獨立新聞』1921.4.21자(3쪽) (문장은 현대어법에 맞게 필자가 수정함)

신흥강습소가 설립 초기부터 小學과 중학교 과정으로 운영되면서 군사교육을 매우 중시하였고, 그 결과 많은 독립군 장교 등 인재를 양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신민회와 안창호의 이러한 방략은 김대락과 이상룡, 김동삼, 허혁 등 경북(안동) 출신 인사들의 이주와 실천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일부 혁신유림적 성격을 띠는 이들은 이미 안동지역에서 協東學校 등을 운영한 경험과 실천력, 그리고 중장기적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⁹⁾ 특히 이상룡은 大韓協會 安東지회장을 지내면서 교육구국 방략과 함께 무력투쟁 방략을 강구하고 있었다. 대한협회 안동지회는 계몽운동 단체로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군사력 양성을 지향했으며, 지회 자체가 군사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상룡의 대한협회 안동지회 결성은 두 차례의 의병항쟁 이후 결성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국권회복운동 방법론이었던 것이다.²⁰⁾ 또 협동학교는 3년제 중등학교 과정으로 알려졌다. 김대락과 이상룡, 김동삼, 金衡植 등 협동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계했던 이들이 서간도로 이주하여 신흥강습소와 신흥중학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했던 것이다.

안동 유림의 거두로 많은 문중인사를 거느리고 西間島 지역으로의 이주를 주도하였던 김대락은 막상 현지에 도착하여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면서 크게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당초의 굳은 구국의지와 결심을 실천할 것인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1911년 4월 유하현 삼원보로 이주 후 오랫동안 고국을 그리워하며 많은 번민의 과정을 겪고 있었지만, 이 신흥학교의 건립과정에 참여하고 그 터를 직접 가서 보며 큰 위안을 얻었다.

5. 대표적 선언서류의 검토

1) ‘대동단결선언’의 발표와 그 의미

19) 조동걸은 柳寅植·김동삼·이상룡·김대락 등을 革新儒林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 한계를 절감하고, 교육과 산업진흥, 실력양성 등을 통한 준비론과 구국(애국) 계몽운동을 지향하는 혁신적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한다(상세한 내용은 조동걸, 1990,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참조).

20) 강윤정, 2012,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42~43쪽.

○ 내용 및 특징 : 1917년 7월 해외에서 활약하던 신규식(申圭植)·박용만(朴容萬)·조소앙(趙素昂) 등 1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上海)에서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제안한 선언서이다. 1985~86년 경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의 딸인 안수산 여사가 독립기념관에 일괄 기증한 유물중의 하나이다. 1917년 해외(上海)에서 인쇄되었다.

신규식·조소앙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외 각지에 산재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한 최고기구의 조직과 국민주권설에 입각한 통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민족대회의 소집을 제안하는 ‘대동단결 선언’과 그러한 대회 소집의 찬동여부를 묻는 ‘찬동통지서’를 국내외 각지에 발송하였다. 독립운동의 최고 통합조직으로 ‘임시정부’를 설립코자 한 것인데, 이 선언은 그러한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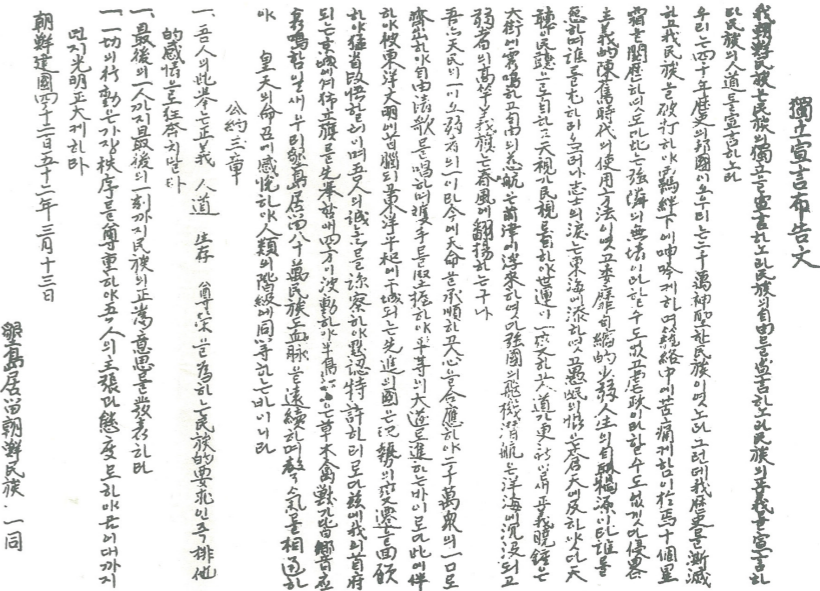
이 ‘선언’의 요지는 주권불멸론에 의한 국민주권설의 제창, 주권을 상속받아 국가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인물·신용 분야 방안 제시, 국가적 행동을 성취하기 위한 통일기관·통일국가·원만한 국가의 달성이라는 3단계 독립론을 제창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선언의 계획이 당장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신한민보(新韓民報)』등을 통해 해외동포 사회에 전파되면서 임시정부 수립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의 결과, 같은 해 4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 선언문은 3·1운동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나 러시아 10월혁명의 영향을 받기에 앞서 우리민족 스스로 대동단결과 최고 통치기구의 설립을 제의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²¹⁾

본 선언문은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소장 유물의 일부로서 미국에 거주하던 안수산 여사(안창호 딸)

가 독립기념관에 일괄 기증한 유품의 하나이다. 1917년 7월전후시기에 발표된 선언서 유형의 문서로서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단결과 임시정부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21)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논총』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참조.



3월 13일 응정 서전대야에 배포된 「독립선언포고문」

2)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 - 무오독립선언서) 검토

① 선언서 전문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黎民: 백성)에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韓)이요, 이민족의 한(韓)이 아니라, 반만년사의 내치외교(內治外交)는 한왕한제(韓王韓帝)의 고유 권한이요, 백만방리의 고산(高山) 려수(麗水)는 한남한녀(韓男韓女)의 공유 재산이요, 기골문언(氣骨文言)이 유럽과 아시아에 뛰어난 우리 민족은 능히 자국을 옹호하며 만방을 화합하여 세계에 공진할 천민(天民)이라, 우리 나라의 털끝만한 권한이라도 이민족에게 양보할 의무가 없고, 우리 강토의 촌토라도 이민족이 점유할 권한이 없으며, 우리 나라 한 사람의 한인이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韓)은 완전한 한인(韓人)의 한(韓)이라.
 슬프도다 일본의 무력과 재앙이여. 임진 이래로 반도에 쌓아 놓은 악은 만

세에 엄폐치 못할 지며, 갑오 이후 대륙에서 지은 죄는 만국에 용납지 못할 지라. 그들이 전쟁을 즐기는 악습은 자보(自保)니 자위(自衛)니 구실을 만 들더니, 마침내 하늘에 반하고 인도에 거스르는 보호 합병을 강제하고, 그들이 맹세를 어기는 패습은 영토니 문호니 기회니 구실을 거짓 삼다가 필경 불의로운 불법의 밀관협약(密款舊約)을 강제로 맺고, 그들의 요망한 정책은 감히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였고, 교육을 제한하여 과학의 유통을 막았고, 인권을 박탈하며 경제를 농락하며 군경(軍警)의 무단과 이민이 암계(暗計)로 한족을 멸하고 일인을 증식[滅韓殖日]하려는 간흉을 실행한지라.

적극적, 소극적으로 우리의 한(韓)족을 마멸시킴이 얼마인가.

십년 무력과 재앙의 작란(作亂)이 여기서 극에 이르므로 하늘이 그들의 더러운 덕을 꺼리시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새, 우리들은 하늘에 순종하고 인도에 응하여 대한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들의 합병하던 죄악을 선포하고 징계하니,

1. 일본의 합방 동기는 그들의 소위 범일본주의를 아시아에서 실행함이니, 이는 동아시아의 적이요,
2. 일본의 합방 수단은 사기강박과 불법무도와 무력폭행을 구비하였으니, 이는 국제법규의 악 마이며,
3. 일본의 합병 결과는 군경의 야만적 힘과 경제의 압박으로 종족을 마멸하며, 종교를 억압하고 핍박하며, 교육을 제한하여 세계 문화를 저지하고 장애하였으니 이는 인류의 적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뜻과 사람의 도리[天意人道]와 정의법리(正義法理)에 비추어 만국의 입증으로 합방 무효를 선포하며, 그들의 죄악을 응징하며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노라.

슬프도다, 일본의 무력과 재앙이여! 작게 징계하고 크게 타이름이 너희의 복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륙으로 회복할지이다. 각기 원상(原狀)을 회복함은 아시아의 바램인 동시에 너희도 바램이러니와, 만일 미련하게도 깨닫지 못하면 화근이 모두 너희에게 있으니, 복구자신(復舊自新)의 이익을 반복하여 알아듣게 타이를 것이다.

보라! 인민의 마적이었던 전제와 강권은 잔재가 이미 다하였고, 인류에 부여된 평등과 평화는 명명백백하여, 공의(公義)의 심판과 자유의 보편성은 실로 광겁(曠劫)의 액(厄)을 크게 씻어내고자 하는 천의(天意)의 실현함이요, 약국잔족(弱國殘族)을 구제하는 대지의 복음이라.

장하도다! 시대의 정의여. 이때를 만난 우리는 함께 나아가 무도한 강권속박(強權束縛)을 해탈하고 광명한 평화독립을 회복함은, 하늘의 뜻을 높이 날리며 인심을 순응시키고자 함이며, 지구에 발을 붙인 권리로써 세계를 개조하여 대동건설을 협찬하는 소이로서 우리 여기 2천만 대중의 충성을 대표하여, 감히 황황일신(皇皇一神)께 분명히 알리고[昭告] 세계 만방에 고하오니, 우리 독립은 하늘과 사람이 모두 향응[天人合應]하는 순수한 동기로 민족자보(民族自保)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이요, 결코 목전의 이해[眼前利害]에 우연한 충동이 아니며, 은혜와 원한(恩怨)에 관한 감정으로 비문명한 보복수단에 자족한 바가 아니라, 실로 항구일관(恒久一貫)한 국민의 지성이 격발하여 저 이민족으로 하여금 깨닫고 새롭게 함[感悟自新]이며, 우리의 결실은 야비한 정궤(政軌)를 초월하여 진정한 도의를 실현함이라.

아 우리 대중이여, 공의로 독립한 자는 공의로써 진행할지라, 일체의 방편[一切方便]으로 군국전제를 삭제하여 민족 평등을 세계에 널리 베풀[普施]지니 이는 우리 독립의 제일의 뜻[第逸意]이요, 무력 겸병(武力兼併)을 근절하여 평등한 천하[平均天下]의 공도(公道)로 진행할지니 이는 우리 독립의 본령이요, 밀약사전(密約私戰)을 엄금하고 대동평화를 선전(宣傳)할지니 이는 우리 복국의 사명이요, 동등한 권리와 부[同權同富]를 모든 동포[一切同胞]에게 베풀며 남녀빈부를 고르게 다스리며, 등현등수(等賢等壽)로 지우노유(知愚老幼)에게 균등[均]하게 하여 사해인류(四海人類)를 포용[度]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 건국[立國]의 기치(旗幟)요, 나아가 국제불의(國際不義)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를 체현(體現)할 것이니 이는 우리 대한민족의 시세에 응하고 부활[應時復活]하는 궁극의 의의[究竟義]니라.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同心同德] 2천만 형제자매여! 우리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上帝)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機運)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적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이로써 5천년 조정의 광휘(光輝)를 현양(顯揚)할 것이며, 이로써 2천만 백성[赤子]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니, 꺾기[起]하라 독립군! 제[齊]하라 독립군!

천지로 망(網)한 한번 죽음은 사람의 면할 수 없는 바인즉, 개 돼지와도 같은 일생을 누가 원하는 바이리오.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와 동체(同體)로 부활할 것이니 일신을 어찌 아낄 것이며, 집안이 기울어도 나라를 회복되면 3천리 옥토가 자가의 소유이니 일가(一家)를 희생하라!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자매여! 국민본령(國民本領)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며, 황천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祇奉) 일절(一切) 사망(邪網)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혈전(肉彈血戰)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이다.

건국기원 4252년 2월 일

金敎獻 · 金奎植 · 金東三 · 金躍淵 · 金佐鎭 · 金學滿 · 呂準 · 柳東說 · 李光 · 李大爲 · 李東寧 · 李東輝 · 李範允 · 李奉雨 · 李相龍 · 李世永 · 李承晚 · 李始榮 · 李鍾倬 · 李拓 · 文昌範 · 朴性泰 · 朴容萬 · 朴殷植 · 朴贊翼 · 孫一民 · 申櫟 · 申采浩 · 安定根 · 安昌浩 · 任邦 · 尹世復 · 趙鏞殷 · 曹煜 · 鄭在寬 · 崔炳學 · 韓興 · 許懋 · 黃尙奎

②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 검토

○ 내용 및 특징 : 1919년 2월(혹은 3월) 주로 만주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교헌(金敎獻) 등 39명의 독립운동 지도자 명의로 중국 길림(吉林)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이다.

모필(毛筆; 붓)로 쓴 것을 석판으로 약 4,000부 인쇄했는데, 미주지역의 하와이에서 활동하던 박용만(朴容萬) 등 주로 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배포되었다. 이 문서는 미주지역에서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원본문서는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 외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 작성의 주체는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로 파악되는데,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항일무장투쟁 단체이다. 다만 조소양(趙素昂, 본명 趙鏞殷)은 회고록에서 1919년 2월 자신이 이 선언서를 기초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서는 제목, 본문, 발표날짜, 서명자 등 내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35행으로, 모두 1,273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내외에 독립 선언, ②일본의 죄악 규탄, ③독립의 역사적 의의를 규정, ④독립운동의 방침 또는 방법 천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소위 ‘한일합병’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을 응징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군의 총궐기와 한민족 전체의 육탄혈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본문의 끝 문단 첫부분에서 ‘단군대황조(檀君大皇祖)’라고 밝히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이 선언서 작성의 주체들은 대종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선언서는 1919년 초 국외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사고와 정서가 잘 반영된 중요 문서라 할 수 있다. 또 3·1운동 시기에 발표된 여러 독립선언서 가운데 해외 무장 독립운동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²²⁾ 특히 본 선언서는 1919년 3·1운동 전후시기에 발표된 독립선언서 유형의 문서로서 만주(중국동북지역) 무장독립운동 세력의 ‘독립전쟁론’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③ 이 선언서의 의미

* 항일무장투쟁의 정신적 배경 - 대종교와 그 계열인사들

* ‘혈전주의’로서의 ‘무오독립선언’

동경 28독립선언, 국내 31독립선언 등 관련

3) 용정 3·13운동 ‘독립선언포고문’

3.1운동은 국내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한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던

22)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제 : 발표시기의 규명과 내용 분석」, 『역사비평』 창간호, 1988 ; 김기승, 「대한독립선언서의 사상적 구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1999 참조.

만주지역까지 확산되었다. 특히 1919년 3월 13일 북간도(현재의 중국 연변지역) 용정(龍井)에서 벌어진 만세 시위운동에는 2만여 명의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여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사주를 받은 중국 지방관헌들이 발포로 13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하는 큰 희생을 치렀다. 현재 연변 학계에서는 이를 "3·13반일시위운동" 또는 '3·13반일군중운동'이라 부르고 있다.

연변 3·13 운동 당시 김약연 등 17명의 '재남북만주(在南北滿洲) 조선민족 대표' 명의로 발표된 「조선독립선언서 포고문」의 의미와 그 시사점을 좀더 확실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병석 교수는 이 문서가 연해주를 연계하며 3·13운동을 주도한 김약연 등이 북간도(연변)를 중심으로 '남북만주 조선민족 대표'를 자임함으로써 이제 운동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²³⁾ 그리고 '3·13독립축하회' 개최 이후 열강의 지원을 받기 위해 파리강화회의 대표 파견과 지원, 또한 결사대를 조직하여 국내로 진입한 다음 독립을 요구하는 두가지 독립운동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특히 3·13운동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축하회'를 개최했으므로, 이제는 독립정부를 세워야 하겠다, 그런데 그 정부의 형태는 전제군주제나 입헌군주제가 아닌 공화제 정부여야 한다. 따라서 임시정부와 같은 공화주의 정부여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이 이를 계기로 널리 전파,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용정(龍井)의 3·13항일시위운동에 동참했던 2만여 명의 군중들을 탄압한 중국 당국의보고문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국 당국은 "3월 13일 6道溝 2만여 군중 해산 이후 각현(縣) 각부(埠)에 엄히 사찰, 금지하라는 급령을 내려 다시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간민(墾民)들의 조수(潮水)와 같은 광열(狂熱)은 막을 수 없는 형세이다"²⁴⁾라고 한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상부에 보고했던 것이다. 3월 13일 정오 독립선언서 낭독 이후 독립축하의 취지 설명이 끝나자, '조선독립'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고, "군중은 기뻐서 흐느끼고(喜而

23) 윤병석, 「북간도 용정 3·13운동과 '조선독립선언서 포고문」, 『史學志』31집(1998.12), 단국사학회, 467~469쪽.

24) 「中華民國 外交檔案」1919년 5월 16일 吉林省長 密咨 제39호; 윤병석, 위의 논문, 463쪽에서 재인용.

泣), 흐느끼면서 뛰며(泣而蹈) 태극기를 흔들었다"고도²⁵⁾ 한다. 이처럼 대단한 한인들의 지성(至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들이 독립 후의 정부형태로 이미 망해버린 고국의 구 황제가 통치하는 형태의 정부를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3·13시위운동에 참가하였던 아들로부터 운동의 진상을 전해들은 연변의 재야 사학자 김정규(金鼎奎)는 그의 일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이 날은 간도의 한민족이 용정(龍井)에 모여 독립을 부르는 날이라. (쌍포동)마을에서도 가는 사람이 10여 명이 되었다. 나는 부친상 중이므로 감히 갈 수 없어 아들 기봉(奇鳳)에게 태극기 하나를 주어 보냈다. 이 날, 이 날, 이 날, 과연 옛 것이 광복되는 날이냐? 사람마다 이렇게도 화색(和色)이 짙은가? 저녁때 들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고 한다. 정오 종소리에 맞추어 용정 부근에 조선독립기를 세우고 사람마다 태극기를 들고, 먼저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고 이어 독립을 선언하였다. 깃발은 해를 가리고 함성이 진뢰(震雷)와 같았다. 이를 본 왜인(倭人)의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했다는 것이다.”²⁶⁾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이 자료는 1980년대 중반 독립기념관의 일본지역 자료수집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강덕상(姜德相) 선생이 일본에서 수집한 것이다. 3·13 시위운동 때 발표한 선언서는 서울에서 발표되었던 독립선언서와 유사한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나치게 낙관적 정세인식을 보여주는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독립선언서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다만 원문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자가 알기 쉽게 약간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25) 윤병석, 위의 논문, 464쪽.

26) 金鼎奎, 『野史』(『龍淵 金鼎奎日記』)

「독립선언포고문」

우리 조선민족은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민족의 자유를 선언하노라. 민족의 정의(正義)를 선언하노라. 민족의 인도(人道)를 선언하노라. 우리는 사천년 역사의 방국(邦國)이오, 우리는 이천만 신성한 민족이었노라. 그런데 (일본이) 우리 역사를 모두 없애고 우리 민족을 파타(破打)하여 기반(羈絆 : 온갖 굴레)하에 신음케 하며 농락(籠絡:남을 꾀로 속여 제마음대로 놀림)중에 고통케함이 어언 십개 성상(星霜)을 지났도다. 이는 강린(強隣 : 강한 이웃)의 무정이라 할 수도 없고, 학정(虐政)이라 할 수도 없겠다. (이는 일제의)침략주의적 구시대의 사용방법이었고 스스로 놀라 위축된 약소 민족인 우리민족이 스스로 취한 화(禍)의 원천이다.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시오. 그러나 지사의 눈물은 동해에 흘렀고, 어리석은 백성의 한(恨)은 푸른 하늘에 미쳤다. 임금이 듣는 것이 백성이 듣는 것으로 변하고 임금이 보는 것이 백성이 듣는 것으로 변하여 세계의 기운이 크게 변하고, 인도(人道)가 다시 새로워 질 때 정의의 새벽종은 큰거리에 진명(震鳴;크게 울림)하고 자유의 순조로운 향해는 바로 앞의 나루에 다가왔다. 강국(強國)의 비행기와 잠수함은 양해(洋海)에 침몰하고 약자의 높이 든 의기(義旗)는 춘풍에 휘날리는구나. 우리는 천민(天民 : 선택된 백성)의 일인(一人)이요, 약자의 일인이라. 이제 천명을 승순(承順)하고 인심을 합응(合應)하여 이천만 민중의 한 입으로 일제히 외쳐 자유를 청하는 노래를 부르며, 두 손을 굳게 잡아 평등의 대도(大道)로 나아가는 바이로다. 이에 따라 동양문명의 수뇌되고 동양평화의 간성(干城)이 되는 선진국은 현세(現勢)의 변천을 회고하여 맹성(猛省)·개오(改悟)할 터이며, 우리의 성의를 잘 헤아려 묵인·특허(特許)하리로다. 이에 우리의 수부(首府)되는 경성(京城)에서 독립기를 먼저 들에 사방이 크게 움직여 반동강산은 초목금수(草木禽獸)가 모두 향응공명(響應共鳴)할 때 우리 간도거류 팔십만 민족도 혈맥(血脈)을 원속(遠續 : 멀리 이음)하며 성기(聲氣 : 목소리와 기운)를 상통하여 황천(皇天 : 하늘)의 명소(命召:부름심)에 감열(感悅 : 감격하여 기뻐함)하여 인류의 계급에 동등(同等)하는 바이니라.

공약(公約) 삼장(三章)

- 一. 오인(吾人)의 차거(此舉)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인즉 배타적 감정으로 광분(狂奔)치 말라.
- 一.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의사를 발표하라.
- 一.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吾人)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케 하라.

조선건국 사천이백오십이년 삼월 십삼일
간도(墾島)거류 조선민족 일동

4) 대한독립군의 유고문(諭告文)

이 자료는 북간도 지역 동포들에게 선포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유고문이다. 이 자료는 현재 일본 시가 현립(縣立)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강덕상(姜德相) 교수가 독립기념관의 전신‘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자료수집위원으로 위촉되었던 1986년 10월 일본에서 일괄수집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크기는 35.3cm에 세로 22.4cm이고 한 장으로 된 전단이다.

독립운동 단체에서 발행했거나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작성한 격문 및 선언서, 전단, 팜플렛 등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이중 상당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종류의 것들이 일제 관헌들의 비밀보고 및 첩보기록이나 재판 판결문, 신문류 따위에 수록되어 간접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반면, 그 원본류는 희소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1920년대의 대표적 항일무장투쟁가라 할 수 있는 홍범도 장군과 그의 참모들이 1919년 12월 직접 작성하여 고시·배포한 유고문이 원본의 형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펍 다행한 경우라고 하겠다.

홍범도 장군은 1900년대 초반 주로 함경도 지방에서 포수들이 주축이 된 의병부대를 이끌고 일제와 치열한 의병항쟁을 벌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탄약의 고갈 등 어려움이 가중되자 1908년 말에는 중국을 거쳐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1910년대에는 연해주 지방과 동·북만 지방을 왕래하며 재기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국내에서 3·1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이에 고무되어 1919년 8월경 100여명의 부대원을 이끌고 북간도로 이동하였다. 이때 그의 휘하 부대는 잠

시 '대한독립군'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대한독립군은 연해주의 대한민국의회(大韓國民議會)와 이 조직의 간도지부, 이동휘(李東輝) 등과 연계하여 비로소 북간도 동포들의 보호 및 마적소탕, 일제와의 결전 등에 매진할 수 있었다.

홍범도는 이동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독립운동의 방법론 가운데서도 이동휘와 함께 무장투쟁론을 대변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유고문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즉 그는 이 글을 통해 온건한 형태의 독립운동 방법론과 외교론 등을 비판하고 독립 전쟁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일제와 결전을 벌여 독립전쟁을 수행하고 싶었지만, 임시정부의 선전포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출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임시정부를 봉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이동휘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재직하고 임시정부가 좌·우 연대의 통합 조직적 성격을 띠고 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유고문의 내용은 상해(上海) 임시정부의 기관지라 할 수 있는 『독립신문(獨立新聞)』1920년 1월 13일자에도 실려 있다. 이 신문에는 '노령주군' 문구가 빠지고 홍범도가 '대한독립군 의용대장(義勇隊長)'의 직책으로, 나머지 두 사람이 참모가 아닌 '동원(同員)'으로 수정 되어 있다. 이 유고문에 참모로 나오는 이병채는 전남 고흥의 백일도(白日島) 출신으로 허위(許爲) 및 민용호(閔龍鎬) 의병장과 함께 의병항쟁을 주도한 인물이며, 고흥 일대의 3·1운동에도 참가한 인물이다.

이하에서 이 글의 전문을 소개한다. 원문을 가능하면 그대로 살리는 범위 안에서 현대어법에 맞게 약간 수정했음을 밝힌다.

“천도(天道)가 순환하고 민심이 응합하여 우리 대한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후 위로 임시정부가 있어 군국대사(軍國大事)를 주도하며, 아래로 민중이 단결하여 만세를 제창할 새 이제야 우리의 공전절후(空前絶後 : 유일)한 독립군이 출동되었도다. 슬프다!(일제의) 강권지하(强權之下)에 오직 정의·인도만 주창함도 불가능한 일이요, 무권지민(無權之民)으로 한갓 평화회(平和會)와 연맹회(聯盟會)만 의뢰함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니뇨? 그러므로 혹은 가산(家産)을 처분하여 혹은 고금(雇金 : 품삷)을 얻어 무기를 준비함은 (적과의) 배성일전(背城一戰 : 최후의 결전)에 (적의) 성하지맹(城下之盟 : 굴욕적 강화)을 기약코자 함이

나, 오히려 함부로 움직이지 못함은 오직 (임시)정부가 광명정대히 선전(宣戰)함을 기다림이라. 이제 전설을 들은즉 간도방면에서 무뢰배가 기회를 타서 혹은 인장을 자의로 조각하여 독립군을 빙자하고 민간에 강제 모연(募捐 : 모금)도 하며, 혹은 군복을 가장하며 무기를 휴대하고 각 동리에서 (일으키는) 시위적 작란(作亂)이 비일비재(非一非再)라 하니 민심이 소요(騷擾) 할 것은 물론이요, 장차 외侮(外侮 : 외부에서 받는 모욕)가 멀지 않을지라. 당당한 독립군으로 몸을 (적의) 탄연포우(彈烟砲雨) 중에 던져 써 반만년 역사를 광영(光榮)케하며, 국토를 회복하여 써 자손만대에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의(本義)라. 어찌 한 지방의 소단체에 치우쳐 군중의 풍기를 문란케 하리오. 본 참모부는 이를 통탄·근신하고 조사하여 이에 유고(諭告)하오니, 지금 이후로는 이와같은 이매망량지도(도깨비같은 못된 무리)가 촌려(村閭 : 시골에 있는 마을)에 출몰하거든 해당 동리가 엄히 징계하여 다스리되, 만약 세력이 부족할 때는 즉시 본부(本部)에 보고하여 군율로 처치하기를 (바라니) 일반 국민은 근신 심득할 지어다.(밑줄은 필자)

대한민국 원년 12월 일
노령(露嶺) 주둔 대한독립군

대장(大將) 홍범도(洪範圖) 인 (印)
참모 박경철(朴景喆) 인
이병채(李秉埰) 인“

6. 만주 주요 독립운동 단체의 공화주의·공화제 수용 양상

1)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

중국 연변(북간도)지역에서 편성된 여러 독립군 부대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단체

는 大韓軍政署(일명 북로군정서)이다. 대한군정서는 1910년 직후 조직된 대종교의 重光團이 발전한 것이다. 연변 일대에서 활동하던 徐一 등의 대종교 계통 인사들은 1910년 전후 시기에 ‘북천지계(北遷之計)’에 따라 두만강을 건너 항일의병들을 규합하여 1911년 3월에 汪清縣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중광단을 조직하였다.

중광단은 1919년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전쟁’을 표방하며 중국 동북 일대의 대종교 신도와 북상한 의병 및 공교회원(孔教會員) 등을 규합하여 正義團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독립군적 조직을 갖춘 정의단은 1919년 8월 軍政會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고 왕청현 春明鄉 西大坡에 본영을 두었다. 이어 군정회는 같은 해 10월 軍政府로, 그리고 12월에는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임시정부「국무원령」205호에 의해 大韓軍政署로 다시 명칭을 바꾸어 임시정부를 봉대하는 모양세를 갖추었다. 대한군정서는 남만주(서간도) 지역에서 李相龍池靑天 등의 주도로 편성된 ‘서로군정서’와 구분하기 위하여 ‘북로군정서’로 불리웠다.

대한군정서에서는 金佐鎭과 같은 유능한 지휘관을 군사령관으로 맞이하고, 士官練成所까지 설치하여 독립군 장교 양성에 전력하였다. 일본측 정보기관은 대한군정서가 청산리전투 직전인 1920년 8월 중순 현재 독립군 약 1,200명에 소총 1,200정, 탄약 24만 발, 권총 150정, 수류탄 780발, 기관총 7정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⁷⁾

대한군정서는 중광단 시절부터 근거지로 삼아온 왕청현 춘명향 榆樹川(德源里)에 다 총본부격인 총재부를 두었으며, 춘명향 서대파(十里坪)에는 군사령부를 두었다. 청산리전투 직전의 핵심 간부진을 보면 서일이 총재, 玄天默이 부총재를 맡았으며, 그 휘하에 서무부장 任度準, 재무부장 桂和, 참모부장 李章寧 등이 있었다.²⁸⁾

2) 남만주지역독립군의 형성

① 서로군정서 - 신민회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 및 독립군 조직

남만주지역에서도 중국 연변지역과 마찬가지로 3·1운동 직후부터 여러 독립군

27) 국가보훈처, 『獨立軍團名簿』, 1997, 20쪽.

28)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신편 한국사』 48(임시정부의 편성과 독립전쟁), 국사편찬위원회, 2002, 201~202쪽.

부대가 조직되어 독립전쟁을 표방하고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 독립군 조직으로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들 수 있다. 서로군정서는 1910년 대한제국 멸망 직후 남만주(서간도)지역에서 결성된 주요 韓人 결사였던 부민단(扶民團)이 3·1운동 직후 확대 개편된 한족회(韓族會)를 모체로 한 것이다.

1910년 8월 이후 남만주 유하현(柳河縣)과 통화현(通化縣)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자치를 신장하는 한편, 신흥학교를 설립하는 등 무장투쟁을 준비하던 부민단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국내외적 상황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들은 1919년 3월 13일 한족회를 결성하였다. 한족회의 중앙총장은 이탁(李洌)이 맡았으며, 기관지로 《한족신보(韓族新報)》를 발간하였다.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모든 독립운동을 지도 통제할 중앙정부의 건립에 최고목표를 두었던 한족회는 우선 일본과 독립전쟁을 수행할 주체로서 군정부 건립에 착수하였다.²⁹⁾

그러나 1919년 4월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 중국 상해(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한족회는 그 산하에서 군정부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서로군정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³⁰⁾ 서로군정서의 최고 책임자인 독판에는 李相龍이 선임되었으며, 그 아래에 부독판 呂準, 정무청장 李洌, 참모부장 金東三, 사령관 池靑天등이 간부진을 구성하였다.

서로군정서는 1919년 5월 ‘신흥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바꾸고 독립군 간부 양성에 주력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통화현 哈泥河에 본교를, 그리고 통화현 快大帽子和 유하현 孤山子 등지에 분교를 두었다. 초대 교장은 李世榮이었으며 연성대장은 지청천이 맡았고, 교관으로는 吳光鮮·申八均·李範奭·金擎天등이 있었다. 교육반 편성은 하사반과 장교 및 특별훈련반으로 나누어 하사관 3개월, 장교 6개월, 일반 사병 1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919년 11월까지 3천 5백여 명(일설에는 2천여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예 독립군부대를 편성한 서로군정서는 압록강 대안의 강계·삭주 등지에서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다.³¹⁾

29)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신편 한국사』 48, 207쪽.

30) 『獨立新聞』, 1920년 4월 22일, 「大韓軍政署略史」참조.

31) 윤병석 외, 「북간도 독립군의 편성」,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242·276쪽.

② 대한독립단

대한독립단은 평안도 지방에서 활동하다 부상한 의병 계열인 朴長浩·趙孟善·白三奎·全德元 등이 1919년 4월 조직한 독립군 부대이다. 본부는 남만주 유하현 삼원포 西溝 大花斜에 두었으며, 1910년 국망 직후 의병 계열의 망명지사들이 조직하였던 保約社·鄉約契·農務契 등을 통합 확대한 것이다. 대한독립단의 대표인 도총재에는 박장호, 부총재에는 백삼규가 선임되었으며, 그 아래에 咨議部長 朴治翼, 총참모 趙秉準, 총단장 조맹선 등이 핵심간부로 활동하였다.

대한독립단은 중앙본부 외에도 남만주 지역과 국내 각지에도 많은 지단과 지부를 두고, 군인정보와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여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시로 압록강 대안의 국내로 잠입하여 조선총독부 군경과 교전을 벌였다.³²⁾

대한독립단은 1919년 5월까지 세력 확장을 위해 군자금 모집과 군인정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 시기 동안 6~7백명의 장정과 3만원의 군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다. 수집된 군자금은 무기 구입에 사용되었으며, 모여든 장정들은 북만으로 보내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다소 과장된 기록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도 장정들이 계속 모여들어 1919년 8월까지 그 수가 1,500명에 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³⁾

그러나 대한독립단은 1919년 말 연호 사용문제를 계기로 이념과 노선에 따라 조직이 양분되기에 이르렀다. ‘檀紀’ 또는 ‘隆熙’ 사용을 주장하는 복벽주의(復辟主義) 세력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호인 ‘民國’ 사용을 주장하는 공화주의 세력간의 대립이 격화된 것이다. 그 결과 복벽주의 계열은 ‘기원독립단’을, 공화주의 계열은 ‘민국독립단’을 각각 조직함으로써 이 조직은 양분되었다. 복벽주의 계열은 도총재 박장호를 비롯해 백삼규·전덕원 등 유인석 계열의 노년층 인맥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공화주의 계열은 趙秉準·金承學 등 비교적 소장파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 가운데 민국독립단 계열의 인사들이 대한청년단연합회·평북독관부 등의 독립군 조직과 함께 ‘광복군총영’을 결성하였고, 복벽주의 계열의 인사들은 계속 대한독립단을 유지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지속하였다.³⁴⁾

32) 애국동지원호회 편, 앞의 책, 251~254쪽.

33)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653~662쪽 ; 박민영, 앞의 책, 208쪽에서 재인용.

34) 金承學,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5, 370~371쪽.

③ 대한독립군비단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

1919년 5월 경 중국 길림성 장백현 팔도구(八道溝)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이다. 약칭으로 군비단, 또는 대한군비단이라고도 한다. 1920년대 초반 압록강 상류를 넘나들며 주로 항일무장투쟁을 수행하여 일본의 한국 통치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다. 중국 길림성 장백현 일대 거주 한인 교민들을 바탕으로 항일무장투쟁 등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 일제 식민지 통치를 타도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한독립군비단은 31운동 직후인 1919년 5월 경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이희삼(李熙三)·이영식(李永植)·이병호(李炳浩) 등이 조직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동휘(李東輝) 등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군비단은 약장(約章) 제1장宗旨(宗旨)에서 “본단은 우리 임시정부 국무총리 각하의 명령으로 조직한다”라고 명시하여 처음부터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기관임을 자임하였다. 그리하여 본부(총단)는 팔도구 독암리(獨岩里)에 두고, 통신사무국은 16도구 신창동(新昌洞)에 두었다. 1921년 6월 조직상황을 보면 제1~3구지단(支團)과 그 산하 지단 지부(支部)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제1구 지단 지부의 단원은 180여명이나 되었다. 장백현은 백두산 서남부의 산기슭에 위치하고 압록강 상류를 끼고 있어 지형이 험준하고 교통이 불편하지만, 남으로는 함경남도의 혜산진과 마주하고 있어 국내와 교섭이 잦았다. 이곳은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어 1910년 ‘경술국치’ 이후 한인 이주자가 급증하면서 독립군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20년 후반기에 국내의 북청과 단천 등에 국내지단이 결성되어 본부와 밀접히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대한독립군비단 활동의 특징은 항일무장투쟁에 있었다. 창립 당시 산하 무장부대(독립군)의 직제를 보면 총단장 이희삼, 중대장 이영식, 참모장 이병호, 제1소대장 고인식(高仁植), 제2소대장 김낙결(金洛杰), 제3소대장 안용도(安瑢道)였다. 1개 소대가 28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대한독립군비단 산하의 무장대원은 약 100여명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1년 7월 중대원 28명이 국내의 평안북도 후창·강계 일대와 함경남도 장진·홍원·북청군 일대로 진입하여 매우 주목되는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군비단은 소규모 부대로 국내로 진격하여 일제 군경의 초소나 파출소를 습격하거나 독립운동 선전과 군자금 모집, 친일파 응징활동을 전개한 뒤 다시 압록강을 건너 본대로 돌아오는 게릴라식 전법, 즉 유격전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20년 전후 시기 남만주(南滿洲)지역의 여러 한인 독립운동단체들이 표방한 독립운동방략은 거의 대부분 무장투쟁이었다. 대한독립군비단 역시 설립 초기부터 강력한 무장투쟁을 통한 일제 군경 수비대나 파출소·주재소의 습격, 군자금 모금 활동에 전념하였다. 특히 1919년 9월 12일 책임자대회를 통해 군자금 모금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1921년 3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무려 10여 차례나 수행하였다.

대한독립군비단은 장백현 및 한국 북부 국경지대를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모금과 항일무장투쟁, 그리고 독립운동에 활약할 인력 충원에 중점을 두었는데, 군비단의 활동은 1922년 경에 이르러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중국 남부의 상해(上海)에서 활동하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동북(만주)에서 활동하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추진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군비단은 부근의 다른 독립운동 조직과 통합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1921년 6월 1일 군비단 통신사무국이 있는 장백현 16도구 신창동에서 군비단, 광정단(光正團), 흥업단(興業團)의 주요 임원 20여 명이 모여서 통합을 위한 독립군 연합회를 개최하였는데, 흥업단 지단장 김창일(金昌一)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이후 군비단은 대한국민단을 거쳐 광정단으로 자연스럽게 해소 발전하였다.

만주(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바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시로 1922년 2월 흥업단과 합쳐져 대한국민단(大韓國民團)으로 발전하였다(1921년 10월이라는 설도 있음). 대한독립군비단은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국민단을 거쳐 광정단으로 거듭났으며, 지역적 한계를 인식하고 일부 대원들을 북상시켜 러시아 연해주지역까지 활동범위를 넓히기도 하였다.

대한독립군비단 산하 무장대는 1921년 7월 6일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 후창군 읍내를 통과하면서 각지에서 일본 경찰과 충돌하였다. 같은 달 8일에는 후창군 신백리(神白里)에서, 15일에는 함경남도 장진군 수하면 양생리(陽生里)에서, 18일에는 장진군 본면 입암리(立岩里)에서 일경과 교전했는데, 이후 대규모 전투가 불리함을 알고 3개 소대로 편성하여 새로운 작전을 전개하였다. 즉 같은 달 21일에 박영식(朴永植) 소대는 장진군 동면 대통구(大通口)에서, 22일에 안용도 소대는 함남 흥원군 희현면 숲속에서 경찰과 교전하였는데, 안용도 소대는 25일에 희현면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여 일경 3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또 같은 25일 고인식 소대는 평북 강계군 아득애령(我得愛嶺)에서 일본 경찰대와 큰 접전을 벌였고, 8월 1일 함남 남부의 북청군까지 진출한 안용도 소대는 하차면(下車面)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크게 명성을 떨쳤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록에 따르면 1921년 9월 16일에 제1중대 3소대 1분대장 김병묵(金秉默) 등 10명은 장백현의 본영을 떠나 23일 밤 11시 경에 함남 갑산군 동인면 함정포(含井浦)의 일경 주재소를 습격하여 폭파하고 경찰을 사살한 다음, 다수의 무기와 탄약, 현금 등을 빼앗고 무사히 귀대하여 매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함정포주재소 전투에서 참교(參校) 김형길(金亨吉)과 김병수(金炳洙)는 순사부장 고바야시(小林清治)를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군비단 독립군 부대는 주재소를 불태운 뒤 부근의 영림창도 공격하여 전소시키는 등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파괴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어 국내외를 놀라게 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 6일 소대장 김성연(金成淵) 이하 26명은 함남 삼수군 호인면 운전리(雲田里) 주재소를 습격하고 교전 1시간여 만에 순사 3명을 사살하고 주재소를 폭파한 다음 무사히 본영에 돌아오기도 하였다.

한편 군비단의 제2지단장이었던 송병걸은 장백현 17도구에서 북쪽으로 5km가량 떨어진 삼포동(三浦洞)에 거주하였는데, 그곳에서 수류탄까지 제조하여 항일투쟁의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1921년 봄에는 군사부장 김찬과 부원 박춘근(朴春根) 등의 지휘 하에 일부 무장대원들이 북만주의 둔화(敦化)와 밀산(密山) 등을 거쳐 러시아 연해주의 이만으로 북상, '고려혁명의용군'에 편성되었다. 이들은 1923년 봄까지 소련 홍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러시아혁명에 반대하는 백과군을 격퇴하기도 하였다. 1920~22년 동안 연해주는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는 적군(赤軍)과 이에 반대하는 백군(白軍)파의 내전이 한창이었는데, 한인들은 러시아 혁명의 기세에 편승하여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적군측에 가담하여 항일투쟁과 백위파와의 항전에 가담하였다.

대한독립군비단은 장백현 일대 한인 교민들을 기반으로 1920년대 초반 주로 항일무장투쟁 수행을 통해 한국 북부 국경지대의 치안을 교란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군비단은 대한국민단과 광정단으로 통합되었는데, 남만주지역 통합 독립군단 및 교민 자치조직으로 1924년 건립되는 참의부(參議府)의 모체가 된 독립운동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³⁵⁾

35) 이상은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 공보처, 1949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5, 1973 ;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5 ;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4, 청계연구소, 1986 ; 허영길, 『장백의 '대한군비단'』, 『불씨』(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2), 북경 : 민족출판사, 1995 ; 채영국, 『한민족의 만주 독립운동과 정의부』, 국학자료원, 2000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김주용, 『중국 장백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과 성격』, 『사학연구』92호(2008), 한국사학회 등을 참고로 작성.

④ 대한민국민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도로 대한독립군비단 등 독립운동 단체를 개편하여 1921년 10월(1922년 2월 설도 있음)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이다. 중국 길림성 장백현 등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군소 단체들을 통합하여 성립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대 초 남만주지역 각지에 산재한 여러 독립운동 조직을 통합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21년 10월 남만주 서간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한독립군비단, 흥업단, 대진단, 광복단, 태극단 등 여러 단체를 병합하여 임시정부의 지휘 명령을 따르는 단체로 개편하고 명칭을 '대한국민단'이라고 칭하였다.

이 단체의 본부는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 두었는데, 당시 간부 진용은 회장 김호(金虎), 부회장 이은경(李殷卿), 총무 윤병용(尹秉庸), 비서 김용대(金容大), 의사부장 윤세복(尹世復), 재무부장 강련상(姜鍊翔), 서무부장 석주(石柱), 군사부장 김찬(金燦), 경호부장 한창언(韓昌彦) 등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지였던 만주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상해(上海)에 위치하고 있었고, 대내외적으로 그 위상이 저하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국민단의 성립은 다분히 명의상으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체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장백현 일대의 한인 교민을 기반으로 함경남도, 평안북도 일대를 넘나들며 국내의 일제 통치기관 등을 습격하는 등 항일무장투쟁을 수행하는 한편, 친일파 처단과 군자금 모집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대한국민단이 편성된 후 대한독립군비단의 이영식 중대장과 이병호 참모장, 고인식·김낙걸·안용도 소대장은 대한국민단 혼성대로 편성되어 무장투쟁을 계속하였다.

1922년 4월 대진단, 태극단과 합쳐져 광정단으로 개편되었다가 다시 남만주지역 통합 독립운동 및 교민자치 조직인 참의부로 통합되었다.

1920년대 초반 중국동북지역(만주) 독립운동 단체의 과도기적 통합 조직으로 결성되어 남만주 지역의 통합 독립운동 조직인 광정단 및 참의부 결성과 이 지역 민족

운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³⁶⁾

⑤ 남만주에서 대한통군부 결성³⁷⁾

1920년 말과 1921년 초 일본군의 탄압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한인 교민들과 이후 재기한 독립군에게 시급한 과제는 일본군 '출병'과 독립운동 세력 탄압 이후 강화된 친일세력과 그 관련 단체 등을 타파하고 이전의 독립운동기지를 재건하는 일이었다. 이후 대한독립단·서로군정서 등은 우선 남만주의 실지회복을 위해 관할구역을 분담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19년 3월 19일(음력 2월 18일) 이전에 조직된 대한독립단은 남만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保約社農務契향약계포수단 등의 대표와 의병계열 인사들이 조직한 북벽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조직이었다. 이 조직의 도총재는 의병계열의 朴長浩였고, 총단장 역시 의병계열의 趙孟善이었다. 그러나 대한독립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직후 '대한민국'을 연호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후일 주도세력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념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대한독립단은 全德元·吳錫英의 지휘 하에 통화(通化)와 흥경(興京) 이남의 환인(桓仁)·집안현(輯安縣) 등을, 서로군정서는 이상용·李洌·김동삼 등의 주도 하에 유하현(柳河縣)등과 길림 일대를 담당하여 일제 관련 기관과 주구배 척결 활동을 전개하였다.³⁸⁾ 통군부는 1922년 1월에 조직되었다. 이때 韓僑民團·청년단연합회·광한단 등도 통군부 조직에 참가하였다.³⁹⁾

통군부는 1922년 1월 당시 남만주(서간도) 지역의 대규모 민족운동 조직인 한족회·서로군정서·대한독립단이 연합하여 성립하였다.⁴⁰⁾ 통군부 간부들은 대체로

36) 이상은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4, 청계연구소, 1986 ; 허영길, 『장백의 '대한군비단'』, 『불씨』(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2), 북경 : 민족출판사, 1995 ; 채영국, 『한민족의 만주 독립운동과 정의부』, 국학자료원, 2000 ; 김주용, 『중국 장백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과 성격』, 『사학연구』92호(2008), 한국사학회 등을 참고로 작성함.

37) 이하 통군부와 통의부 관련 내용은 박결순의 『대한통의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집(1990)을 주로 참고하였다.

38) 金學奎, 『三十年來韓國革命運動在中國東北(續)』, 『光復』제1권 3기(19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년 영인본, 23쪽.

39) 丁原鈺, 『在滿 대한통의부의 항일독립운동』, 『한국학보』36집(1984), 134~173쪽.

40)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1946, 126쪽. 출범 당시 간부진은 다음과 같았다. 총장 蔡相惠 교무부장 김동삼 비서장 高豁信 실업부장 邊昌根 민사부장 李雄海警務官 全德元 군사부장 李天民 사령관 金

서로군정서와 대한독립단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군부 직제가 군사분야는 물론, 한인들의 자치행정까지 담당하는 분야까지 망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종의 군사정부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22년 6월 20일 열린 제1회 總管會議에서 호적·교통·학교·실업·義務兵·재정·구휼 등 8개항을 결의함으로써 통군부가 독립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한인사회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면서 인적 자원의 결집과 財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⁴¹⁾

⑥ 대한통의부 결성과 활동

압록강 중하류 유역 등 남만주 지방에서 활동하던 광복군총영은 1922년 8월 7일 총회를 열고 남만통일회에 대표 4인을 선정하여 참석케 하는 동시에 불참단체에 대하여는 순회, 권유하는 등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23일 군정서·대한독립단·(寬甸東路 韓僑民團·대한광복군영·대한정의군영·대한광복군총영·평안북도 督辦府 등 소위 8團 9會 대표 71명이 환인현 馬圈子에 모여 統義府 결성 등 6개항을 결의하고 8월 30일 南滿韓族統一會長 金承萬 명의로 통의부의 성립을 선언하였다.⁴²⁾

출범시 간부는 73명이었는데, 김동삼이 총장으로 추대되었다.⁴³⁾ 그만큼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이 통군부와 유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통군부에서 통의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인적구성과 조직체계가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편제상으로는 민정, 즉 한인 교민들의 자치를 더욱 강화하고 군사부문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각 부서의 직원은 부장회의를 통해 보선하여 총장명의로 공포하였는데,⁴⁴⁾ 수차례의 간부진 개편이 있었으며, 1924년 1월 8일 열린 중앙

의회 의결로 총장제를 폐지하고 위원장제로 바꾸었다.⁴⁵⁾

통의부는 전덕원 등 일부 의병 및 북벽계열 인사들이 참가한 ‘大韓統軍府’를 기초로 발전한 단체였다. 그러나 박장호 등 북벽계 인사들은 나중에 통의부에서 이탈하여 ‘大韓義軍府’를 조직하였다. 1924년 3월 10일자로 발표된 통의부 포고문을 통해 이 조직이 표방한 이념과 주요 활동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대한통의부 행정위원 현정경김이대이용해金東三오동진이중건강제하 등의 명의로 발표되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후일 남만주 지역의 대표적 민족운동 단체인 참의부정의부국민부 등의 간부로 활약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 포고문을 발표하여 통의부의 주요 節目(방침, 강령)과 운동방침을 밝히고 내외의 협조를 요청하였다.⁴⁶⁾

이러한 통의부의 포고는 다소 추상적이며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이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1920년대 초 만주지역 독립운동 조직들이 표방한 다양한 이념 가운데 ‘평등’과 ‘합의(민주)’를 표방한 통의부는 상대적으로 의병 북벽계열의 통군부 등에 비해 진보적 독립운동 조직으로 판단된다.

3) 연해주 지방의 사례 : 연해주 독립군(한인 의용군)의 형성과 발전

① 권업회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이다. 이종호(李鍾浩)김익용(金翼溶)강택희(姜宅熙)엄인섭(嚴仁燮) 등 재연해주(在沿海州)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1911년 5월에 결성하였다.

초대 회장에 최재형(崔才亨), 부회장에 홍범도(洪範圖)가 선임되었으며, 러시아 당국의 공인을 얻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12월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여 회의조직을 의사부(議事部)와 집행부(執行部)로 나누었다. 의사부는 총회에서 선출한 39명의 의사원으로 구성하며 의사부의 의장과 부의장이 회를 대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의장에 이상설(李相高), 부의장에 이종호가 선임되어 회무를 총괄하였다. 집행부는 신문부(新聞部) 등 13개부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게 하였다.

45) 『독립신문』1924년 3월 1일자. 그 동안간의 경과는「不逞鮮人團 大韓統義府ニ關スル件」, 1923년 12월 24일附 在通化阿部分館主任發信 伊集院外務大臣宛 報告要旨 참조.

46) 「통의부 佈告 概略」, 『독립신문』1924년 4월 26일자. 대한통의부 행정위원 玄正卿 金履大 李雄海 金東三 吳東振 李鍾乾 康濟河 등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昌煥. 위의 직제중 교무부장을 교육부장으로, 경무관을 警務監으로, 사령관을 司令長으로 기록한 자료도 있다(김승학, 『한국독립사』, 364쪽).

41) 박걸순, 「대한통의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집(1990), 225쪽.

42) 「南滿韓族統一會 결의사항 및 직원 각 布告文 入手에 대한 件」, 1922년 9월 22일, 通化本田分館主任發信 『독립운동사자료집』10, 492~496쪽). 6개항은 ①公決복종의 조건을 서명날인, ②기관명칭(統義府), ③군대명칭(義勇軍), ④제도(總長制), ⑤憲章통과(9장 63조), ⑥직원선거 등이다(박걸순, 앞의 논문, 226쪽에서 재인용).

43) 『독립신문』1922년 9월 30일자. 간부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 김동삼 부총장 蔡相惠 비서관장 高豁信 민사부장 李雄海 재무부장 李炳基 교섭부장 金承萬 법무부장 玄正卿 학무부장 申彦甲 교통부장 吳東振 실업부장 邊昌根 군사부장 梁奎烈 참모부장 李天民 司令長 金昌煥

44) 『독립신문』1922년 12월 13일자 및 『조선일보』1922년 12월 22일자.

창립 이후 세력을 확대한 결과 1913년 10월 회원이 2,600여명에 달하였으며, 1914년에는 8,579명으로 증가하였다. 1910년대 초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 기관으로 민족의식의 고취, 항일 독립운동의 전개, 연해주 일대 한인 교민(僑民)의 단결과 지위 향상 등에 노력하였다. 또 각종 기념일에 행사나 강연회를 개최하여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1914년 6월 러시아의 대일 외교관계가 악화하여 일본의 요구를 받아 들인 러시아 당국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하지만 권업회의 전통은 1917년 결성된 전로한족중앙회(全露韓族中央會)로 이어졌다.

일본과 러시아 당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한인들에게 ‘실업을 장려한다’는 뜻으로 권업회로 명칭을 정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강력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었다. 당시 임원은 각 지방의 한민회(韓民會) 등 한인 비밀결사 단체의 임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는 상호 밀접한 유대를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권업회의 활동 목표는 곧 각 단체의 활동 목표가 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관지로서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는데, 재연해주 한인의 대변지로서 항일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중앙 본부는 신한촌에 두었으며, 하바로프스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지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었고, 회원은 남녀신앙교육의 구별 없이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신중하게 엄선하여 가입시켰다. 즉,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연서한 입회 원서를 의사부에 제출해야 하며, 입회 원서 제출자가 50인에 달하면 의사부는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입회 원서를 심사하였다. 그리고 입회 허가를 얻은 사람은 의사부 의장이 주재하는 엄숙한 입회 의식을 치러야 했다.⁴⁷⁾

② 이만군대

1917년 전개된 러시아 혁명 이후 혁명주도 세력이었던 볼셰비키 세력에 가담하여 연해주 일대에서 반혁명세력 및 일본군과 투쟁하던 한인 의용군 부대이다. 1920년 초 연해주 이만에서 창립되었다. 일명 ‘이만대’라고도 한다. 러시아 혁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연해주 일대에 출동한 일본군이 1920년 4월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침공하여 한인들을 대거 학살한 ‘4월참변’이 일어났다.

47) 네이버 지식백과 ‘권업회(勸業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검색일 2015년 5월 31일. 이밖에 『국외 韓人社會와 민족운동』(윤병석, 일조각, 199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 『한국독립운동사』3(국사편찬위원회, 1967) ; 김승학, 『한국독립사』(독립문화사, 1965) 등 참조.

이에 이만군대는 볼셰비키 조직과 군대를 따라 북쪽의 하바로프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사령관은 김표도르, 부사령관은 박공단(朴公端)·김덕보(金德甫)였다. 병력규모는 200명 미만이었다. 주로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와 하바로프스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만 일대에서 러시아 적군(赤軍) 측에 가담하여 반혁명 세력(백위파)과 싸웠다. 김표도르는 이동휘(李東輝) 등의 한인사회당(상해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20년 2월 러시아의 흑룡주(黑龍州, 아무르주) 일대가 볼셰비키 수중에 들어간 뒤,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에서 중국 동북지방(만주) 및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각종 한인 부대의 집결을 제의하였다. 이에 그 해 말까지 알렉스프스크(스보보드니,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1921년 1월 말 이만군대는 니콜라예프스크(尼港) 군대와 따반군대, 독립단군대 등과 합류했는데, 모두 6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같은 해 6월에 만주 및 연해주, 시베리아지역 한인 무장부대의 집결이 완료됨에 따라 전한군사위원회(원래 명칭은 대한의용군사위원회) 관할의 대한의용군(大韓義勇軍, 일명 사할린 군대)에 편성되었다.

사할린군대는 러시아 원동공화국 제2군에 소속되었다. 이만군대는 니콜라예프스크군대 및 총군부(독군부·최진동·허근부대) 군대, 독립단군대·따반군대와 함께 마사노프에 주둔하였다. 김표도르는 상해파의 영수인 이동휘 계열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르쿠츠크파 계열인 고려혁명군의 해산과 원동(연해주)으로의 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후 양 계열의 군사통수권 문제를 둘러싸고 6월 28일 소위 ‘자유시 사변(일명 흑하사변)’이 일어났다. 고려혁명군 측의 대한의용군에 대한 강제 무장해제 사건인 이 사건으로 이만군대는 큰 피해를 입고 해체되었다. 이후 잔여 대원들은 1921년 8월 이르쿠츠크에서 1개 여단 규모(2,100여 명)의 고려혁명군이 편성될 때 거기에 편제되었다. 특히 사령관 김표도르는 친상해파 장교로 지목되어 이르쿠츠크파에 의해 ‘군대 반란죄’로 투옥되고 말았다.⁴⁸⁾

48) 이상은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1, 청계연구소, 1986 ; 임경석, 『고려공산당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3 ;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역사비평사, 2003 ; 반병을,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등을 참고로 작성.

③ 대한신민단

大韓新民團(통칭 신민단)은 1919년 3·1운동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부근에서 金奎冕이 조직한 독립군 부대로, 왕청현 春華鄉 石峴에 지단 본부를 두고 있었다. 나중에는 연길현 崇禮鄉 廟溝방면으로 근거지를 이동하였다. 봉오동전투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으며, 1920년 8월 현재 병력 200명, 소총 160정, 탄환 9,600발, 권총 30정, 수류탄 48개 등의 무장을 보유하고 있었다.⁴⁹⁾

7. 1910년대 만주 독립운동계의 일면 - 서신을 통해 본 당시의 분위기

1) 양기탁 편지를 통해 본 독립군 기지와 한인 사회의 한 단면

1916년 남만주 柳河縣 孤山子和 通化縣 哈泥河 일대 독립군 기지 개척운동과 독립운동 현장을 두루 둘러본 梁起鐸(1871~1938)은 안창호(1878~1938)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곳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는 남만주 서간도 일대를 독립운동기지의 모범적 사례로 간주하며, 이 지역을 기반으로 더욱 활기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구상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안창호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편지는 1916년에 남만주 유하현 고산자(후기 신흥무관학교 소재지)에 머물고 있던 우탁(禹卓, 본명 양기탁)이 장차 남만주 유하·통화 일대 韓人들의 거주지에 독립군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한인 교민들의 산업진흥을 통해서 일련의 구국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현지의 사정을 미주지역의 대한인국민회 회장 안창호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문 내용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어투와 문장을 수정하고 용어 해설을 괄호속에 넣었다.

“去年(작년) 11월(至月)에 北京에서 數字로 修侯(편지를 써서 안부를 물음-필자)하얏고 이곳으로 온 후……(중략) 此處 情形은 歷訪周察(두루 살

49) 국가보훈처, 『독립군단명부』, 280쪽 ;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신편 한국사』48(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2002, 206쪽에서 재인용.

펴봄) 하온 즉 특지 모험자와 정신 純一者와 보통유지자를 收撥하오면 가위 이백사오십인 가량이오 義兵團 백여인 가량이오 북간도에 의병단이 사오백인 가량이오 此地 人民은 순순하야 圭角(말이나 행동이 남과 맞지 않음) 별로 없어 扶民團이 작년 겨울에 성립하야 목적은 자치통일하려 하나 원수의 외세가 날로 팽박하야 進軌의 道가 부족하얏고 정신단결은 渡此(이곳으로 건너옴) 후 각기 勢氣相應하야 혹 이십여인 혹 기십명 혹 오륙명이 되난대 두령자난 불과 십여인만 단합이 되온 즉 가위 綱舉目張(사물의 핵심을 파악하면 그밖의 것은 이에 따라 해결됨)이라 점점 단결되야 前頭의 희망이 多大하오. 아드려나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재정이 좀 있어야 하겠고, 此地는 본래 개간농작 뿐이오 勞動業 할 것도 없고 다만 山峽에 화치(火田) 力農하야 年豐하면 가족생활이 되나 흥림에는 遊離死亡이 比比有之(흔히 있는 일)하더니 다행히 수년전부터 水田種稻가 시작되야 土人是 생소하야 경영치 않고 吾民族이 특별업으로 점점 平地로 와서 이익을 봅니다. 저 정신단이나 有志者는 그 정신·사상·經略이 선진자나 저명한 애국지사네들만 못한 배 없으나, 現今에 착수할 사업이 無하여 방황주저자 태반인데, 혹은 총이나 혹은 폭탄 생각이 간절하여 견딜 수 없어 흔히 정신병이 발생하압나이다.

학교난 李洙·呂準 두 형님이 주장하야 오늘까지 支保하압난대 재정정갈의 곤란은 말삼할 것 없삽고 일변으로난 (일본) 領事分館이라 巡査 파출소라 巡行偵探라 처처 봉기하야 안심하고 있기도 難하외다. 비밀단결의 일부분으로 深峽중에 範模농장(명칭 백서농장)이 수년전부터 설립되어 수십인이 모여 실지 정신상의 사업준비를 하압나이다.⁵⁰⁾

주목되는 사실은 양기탁이 1916년 경 서간도 일대에서 굳은 의지를 갖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인물들을 약 25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병단’, 즉 무장한 독립군세력을 100여명, 그리고 북간도 지역(현재 중국 연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의 규모를 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총이나 폭탄 생각’이 간절

50) 이 편지는 洋紙에 양면으로 묵서 되어있다. 安昌浩선생 미망인 수잔 안여사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島山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독립군기지 설립에 관한 편지(자료소개)』, 『월간 독립기념관』 1990년 1월호, 16쪽 참조. 이 편지는 현재 독립기념관 제5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다(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2017년 8월 15일 검색).

하여 정신병이 날 지경이라는 현지 분위기 보고는 신흥강습소 등 서간도 일대 독립운동 세력의 강한 항일무장투쟁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이 편지는 유하·통화현 일대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세력이 북간도(연변)나 ‘俄領(러시아 연해주지역)’처럼 당쟁(분파싸움)도 없고 단합이 잘되며 장교(사관) 출신과 의병계열 무장투쟁 세력이 많아 독립운동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무렵 이 지역에서 耕學社와 扶民團, 신흥강습소 등을 주도하였던 이상룡은 초대 부민단장을 지낸 동지 性山 許懋(본명 許兼, 1851~1940)에게 1914년에 보낸 편지에서 “〈黨派〉라는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오직 입에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곧 모름지기 마음에 두지도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며 화합과 ‘대동단합’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⁵¹⁾

또 중국인이 하지 못하는 벼농사가 잘되어 농장경영과 농업관련 실업 진흥에 유리하니 미주동포들을 이주시키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실업경영 혹은 농장경영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1910년대 후반 서간도 지역(특히 압록강의 중국쪽 지류인 渾江과 松花江 상류, 遼河 상류 일대) 독립군기지 개척, 건설운동과 무장독립운동, 실업경영 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현장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지 농업경영의 실상이나 중국 官憲, 현지 중국인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세밀하게 고찰하지 않고,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제시해 본다.

“一. 此地 형편은 일하기 어렵기도 하고, 하기 쉽기도 하고 또 북간도나 俄領처럼 당쟁도 업삽고 단합도 잘될 모양이오, 인물도 구비하여 士官출신도 만코 義兵패도 만코 비밀종교도 만어서 잘 될 희망은 만사오나 金錢이 제일 걱정되난 문제올시다.(밑줄은 필자)

二. 벼농사난 淸人은 도저히 못하고 我人만 잘 하니 농장경영도 좋고 기타 실업은 開浦採木, 매곡, 삼포, 소주와(燒酒窩)등 업이 최대한 이익인데 우리 민족은 착수가 鮮少하압고,

三. 교회형편은 처처 잘 되나 교인의 성질을 융화하여 軍國民이 될 가망은 꽤히 업사오나 이왕부터 苦誠으로 일 보시든 安長老 동식씨가 정신을 발

5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08, 「허성산 혁에게 답하다(答許性山懋)」, 『국역 석주유고』 상, 320쪽.

휘하온 즉 차차 잘 되겠삽고,

四. 吾濟(우리네) 경력상으로 추측컨대 사만리 해외에서 군사나 군기나 있다가로 소니 전투선에 능히 도달하여 한 가지 臨陣충돌할 수 업사오니 美洲에 잇난 동포의 몸이 되어 생각컨댄 此地로 이주하거나 혹 不來 하드래도 實業 혹은 農場을 此地에 설립함이 可하외다. 아모던지 此處에 몇 곳 농토를 永買혹 權買하게되면 자득이익의 반분 혹은 삼분 일을 의무로 공익에 보조하얏스면 조갯삽나이다.

거기서 이왕에 俄領 蜂密山의 농작을 경영한 것 실패되고, 그 후에도 勸業同盟團이 內地의 경영도 잘못될줄 已知하오나 이곳은 田土一耕에 稻作하면 보통 15석(내지 일인 斗의 배됨)이나 되오니 농장경기가 萬無 실패하겠삽나이다.

(하략)음력 丙辰 시월 십칠일 禹弟 지금 사용하는 이름 禹卓 배상 中華 奉天省 柳河縣 孤山子街 廣增德寶號內 鄭武處⁵²⁾

당시 중국 등 국내외에서 활약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많이 사용했다. 자기 신분이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흔했다. 이 편지의 발신인 성명은 禹卓으로 되어있으나, 본명은 梁起鐸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편지가 발송된 유하현 孤山子에는 1919년에 신흥학교(신흥무관학교)가 세워져 많은 독립군을 양성, 배출하였다.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2) 1920년 전후독립전쟁의 주창자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의 편지

① 서신 1

각하(閣下; 여기서는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을 가리킴)여, 나는 각하와 상별(相別)하온지 일월(日月; 세월)이 많이 지났나이다. 경앙(敬仰)하는

52) 「독립군기지 설립에 관한 편지(자료소개)」, 『월간 독립기념관』1990년 1월호, 17쪽.

마음이야 어느 날인들 그칠 수 있으리요마는 태평양이 우리 사이를 간(間)하여 동시에 10년을 해외에 있어 편지로나 대면으로나 모두 막혔었더이다. 상천(上天)이 우리 민족을 도우사 3월 1일이 우리 민족계에 빛나게 된 은 그 감격과 기쁜 생각 어찌다 형언하며 그 흥분하는 직성 어찌 다 춤추며 뛰리이까. 2천만이 모의한 바 없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동일한 독립심은 나는 그 민의(民意) 뿐아니라 그 반드시 천의(天意)인가 하나이다.

이때를 맞이하여 2천만이 가장 바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라 하리이까. 첫 손가락에 각하를 꼽는 동시에, 재주도 없고 덕도 부족하나 아마 나에게 책임을 지우는 듯 합니다. 나는 스스로 겸양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께서 잘 아시는 바 무슨 수양이나 무슨 경험으로 2천만의 소망을 만에 하나라도 답하리까. 나는 참으로 각하에게 신임(信任)하는 마음 이로부터 더욱 두텁지 아니치 못합니다. 다만 나의 두통(頭痛)을 실수 없게하는 어려운 문제는, 원래 우리 민족은 일에 임하여 공사(公私)의 구분이 없이 사사로운 감정을 공(公)에 옮기는 오해가 많습니다. 지난 날은 어떠하였던지 3월 1일 이후에는 일체로 생각이 단순하여, "보추(步趨)가 동일하여야", 일이 성공되련마는 오호라 형제끼리 싸움이 설날이 없고 형제끼리 서로 해침이 간극(間隙)이 없으니 이러하고야 어찌 원수를 대적할 힘이나며, 어찌 2천만의 두터운 바람에 답할 우리가 되리이까. 나는 이에 생각이 미치는 때마다 큰 탄식과 눈물을 흘림을 금할수 없나이다. 나는 본래 해외에 나온동안 생명을 구차히 보전하기에 일상 국축하여 혹 시베리아 혹 남만주들에 방황하여 오직 단순한 결심은 금수강산 옛 형적을 밟으리라 하다가 재주없는 이몸이[不才無似漢]어지러이 허명(虛名)이 세상에 가득하여, 어디서 조직한 정부에는 무슨별명, 또 어디서 된 기관에는 무슨 명의(名義)라는 밑에, 부재(不才)와 부적(不適)을 자각하고 굳이 사양하다가 천재일회(千載一會)의 이날에 제(弟; 이동휘)의 힘이라도 내지 않는 것 보다는 내어서 희생함이 가하다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금일 이 자리에 나와서 시동처럼 자리를 지킵니다.

각하여 나의 시국관은 다 말하려면 가슴이 막히는 점이 한 둘에 그치지 않지만 그 중에 가장 괴롭고 근심스러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소위 한성 정부(漢城政府)를 승인하느니 또한 개조하느니 이 한 문제 올시다. 승인이

라 함은 한성 국민대회에서 조직된 집행관(執政官) 이하 각원(閣員)그대로 우리 인민은 봉대(奉戴)하자 함이요, 개조라 함은 그동안 상해에 이미 세웠던 정부에서 내외지 인심 통일을 뜻하여 한성정부 그대로 봉대는 할지라도 형식에는 이미 정부에서 그 각원(閣員)대로 개조하는 모양과 격식을 취함이라 합니다.⁵³⁾

② 서신2

나는 이 양론에 대하여 집행관 이하 각원이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인 바에는 격식이 다르다. 이론할 마음은 조금도 없지마는 세상은 요란하고 인문(人文)이 이상하게 진보된 셈인지 이한 문제에 여간한 논변이 아니 올시다. 나는 이에 다소 고려하다가 만일 나의 취임이 이 문제로 길게 끌면 필경은 결렬되고말 비관(悲觀)이 있겠기에 나는 그만 용감히 결단하고 나왔나이다.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책임 소재에 현 정부 면목대로 아름답게 진취하였으면 가장 바라는 바이언마는 아직도 일찍이 승인을 주장하던 일부분은 그냥 불평한다 합니다. 여하간 일이 이미 이에 이른 바에는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행 헌법 하에서 나아갈 뿐이오니, 각하여 혹칭 집행관 혹칭 집행관 혹칭 대통령이라는 한결같지 않은 명의(名義)를 다시는 대통령으로 확정하시고 헌법을 존중히 알으시고 공식상 문서 편지에도 정확한 명의를 표현하시어야 큰 기강이 서명 시정(施政)이 순조로이 행해지리라 사유하나이다. 인민이야 혹 일부분에서 여하한 원망하는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정부는 체면과 체통을 엄수하여야 명령이 시행되리니, 각하여 이점에 대하여 하루 바빠 확답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를 말씀은 우리 정부는 확립한 대정방침(大政方針)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요사이 대정 방침 안으로 내각 회의를 비롯하여 토의 중인 바 물론 결재되는 대로 각하에게 고하려니와 각하여 각하는 우리 독립이 국제연맹에 대한 요구에 있다 하시나니까, 아니면 최후의 철혈주의(鐵血主義)로 해결되리라 하시나니까. 현명하신 각하여 우리 만대 자손 계획을 위하시어 물론 고견이 계시겠지요마는 나는 아직도 세상이 야심관이

53) 원본은 독립기념관 소장(안창호 자료).

요, 더군다나 왜노(倭奴;일본)의 독종이 그리 고맙게 양심대로 우리 독립을 순하게 승인하리라 믿지 아니하므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최후의

일인(一人)이 죽기까지 견고하고 확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독립할 날이 있을까 하나이다. 만일 제 의견이 가하시다 하오면 이에 대한 시기위치준비는 어떠한가 되리이까. 또한 분명한 교시를 필요로 하나이다. 최종에 가장 우리 일에 요소되는 문제 즉 재정(財政) 한건입니다. 우리 대국을 운전할 재정방침에 대하여 의견이 한결 같지 않아서 혹은 애국금(愛國金) 혹은 공채(公債)모집이라 하는 중에 제 의견은 애국금 수합은 우리 형제들의 애국하는 굳은 정성으로 절대 독립을 원하는 날이오니 물론 되리라 사유하오나, 공채증권 시행은 아직 명의를 독립은 이미 완성이나, 실질상 독립은 아직 세상이 신임할 만큼 되었다 단언할 수 없으니 실효 유무는 아직 단언 못합니다. 그러나 현하(現下)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일간 재무부에서 공채통용규칙을 발표하라는 요구하에 이미 법률을 발표하였나이다. 각하여 이에 대하여 더욱 고견을 듣기 원하나이다. 남은 사정은 계속하여 보고 하려 합니 다. 다시 각하의 건강을 앙축하나이다.

대한민국 원년 11월 29일
제(弟) 이 동 휘 배계54)

8. 맺음말

1910~30년대 중국 동북지역(일부 연해주지역 1920년 전후시기 포함) 독립군의 형성과 유형은 비교적 다양한 경로와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지역적으로 보면 남만주(서간도 혹은 東邊道지역), 연변(북간도) 지역, 북만

54) 원본은 독립기념관 소장(안창호 자료). 이 편지는 중국 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취임한 李東輝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피선되고도 미국에서 활약 중이던 李承晩에게 보낸 것이다. 國漢文을 혼용하여 임시정부 공문 용지에 붓으로 쓴 이 편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품과 함께 李仁秀 교수(전 명지대)가 소장하고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고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필자가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다.

주 지역, 그리고 중국동북의 중·소 국경지대와 인접한 연해주 동남부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남만주 지역의 경우 동변도 지역과 길림·반석 일대 등 중만주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독립군의 유형은 한반도에서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용지를 품고 중국동북이나 연해주로 이주·망명한 뒤, '독립전쟁론'에 입각하여 '독립군기지'를 개척하고, 지속적 독립운동이나 '독립전쟁'을 전개한 경우가 먼저 눈에 띈다. 남만주(서간도)의 경학사·부민단·신흥학교·서로군정서 계열이 바로 그들이다. 한편 의병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른 바 '북천지계(北遷之計)'에 따라 국내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무대에서 독립전쟁을 전개하고자 한 일군의 보수적 엘리트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대한독립단과 대한통군부, 일부 대한통의부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또 흥범도 의병부대와 독립군의 경우는 국내에서 의병전쟁에 참가하였다가, 중국동북을 거쳐 연해주로 망명한 뒤, 그곳에서 병사와 무기, 군자금 등을 모집하는 등 역량을 비축하여 다시 연변지역으로 진입한 매우 독특한 형성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한편 최진동이 이끈 군무두독부(軍務都督府)나 안무(安武)의 간도(대한)국민회군의 경우처럼 중국동북 현지의 한인 교민사회 스스로가 무장을 갖추고 자위조직에서 나아가 근대적 편제와 무장, 이념으로 무장하여 '독립군'을 형성한 경우도 있었다.

만주(노령[露嶺])지역 독립운동의 특징을 일찍이 박영석 교수(전 건국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①이 지역의 독립운동은 재만(노령) 동포들의 광범한 지지하에 대중적 기반을 갖고 이루어졌다. ②흥범도·김좌진·오동진·전덕원·이범석·김규식·오광선·이청천·이상룡·김동삼 등 많은 뛰어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의해 효과적 대일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③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한 공화주의이념이 1910~20년대부터 이미 정의부 등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에 의해 이미 시행되었다. ④투쟁노선에서 교육·산업우선주의와 함께 무장투쟁노선을 전개하였다. ⑤일본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당·연합회·정부 등 다양한 조직을 구상하였다. ⑥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본토로 이동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의 근간이 되었다. ⑦독립운동 단체들은 학연·지연·혈연·종교 등을 중심으로 모치는 경향이 있었다. ⑧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자들은 이념적인 측면이 약했기 때문에 험난한 독립운동의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친일파로 전향한 자가 적지 않았다. ⑨독립운동

가들은 독립전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정책이 장차 중일전쟁, 미일전쟁 까지 몰고 올 것이라고 하는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대일저항력(對日抵抗力)의 강도(強度)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나타냈다고 한다.⁵⁵⁾

조동걸 교수(전 국민대)는 재만독립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독립전쟁의 역사. ②재만 독립군은 먼저 망명촌과 민족사회라는 경제적·문화적 독립운동기지 또는 근거지를 기반으로 구축. ③독립군은 망명촌을 기반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망명촌 주민과 함께 독립전쟁을 수행했는데, 이같은 지도층과 민중의 연대가 청산리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본 이유가 되었다. ④독립군 단체는 동포사회를 관할하는 민정(民政)과 독립전쟁을 관할하는 군정(軍政)의 이원조직(二元組織)을 갖고 있었다. 다만 만주 동포사회에 사회주의 사조가 확산되면서 민정의 기반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⑤재만동포 사회에 소작농민이 많았고, 이회영·이상룡·김동삼 등 양반 지주 출신자도 망명 후에 소작농으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유교 대동주의에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접목시킨 경우가 많았다. ⑥1931년 9·18사변(‘만주사변’) 이후 일본 走狗단체인 조선인민회에 가담하여 ‘만주국’의 ‘2등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⑦한간(漢奸, 중국인 민절)과 (한인) 주구배도 독립운동을 가장한 경우가 많았다. ⑧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통일전선을 추구했다. ⑨통일전선 형성시 표방한 강령(조국광복회, 임시정부 건국강령 등)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남겼다. ⑩1940년부터 동북항일연군(김일성·최용건 등)까지 러시아로 이동하여 만주는 독립운동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⑪해방과 더불어 만주에는 조선의용군이 개신, 진주하였다. ⑫한국독립운동은 국내 독립운동과 재만(在滿) 독립운동, 재중(在中) 독립운동의 3대 지역운동으로 구성되었다.⁵⁶⁾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동하고 있던 던 김구는 그의 회고록『백범일지』에서 “외교로 말하면 임시정부 원년(1919) 이후 국제외교에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중·소·미 등 정부 당국자들의 비공식적인 원조가 가끔 있었을 뿐 공식적인 응원

은 없었다. 오늘에 이르러(1942~43년경 - 필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羅斯福)가 “장래 한국이 완전 독립하여야겠다”고 전세계를 향하여 공식으로 널리 알렸고, 중국의 입법원장 손과(孫科) 씨는 공식석상에서 “일본제국주의를 박멸하는 중국의 양책(良策)이 제일 먼저 한국 임시정부 승인에 있다”고 강조하였다.”라고 회고하였다.⁵⁷⁾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이 시기 한국의 신탁통치안을 구상하고 있었고, 중국은 끝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만큼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55) 박영석,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83~184쪽 및 박영석, 『중국 동북지역(만주)의 항일민족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7집(199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50~452쪽.

56) 조동걸, 『만주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의 의의』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푸른역사, 2001, 375~380쪽.

57)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297쪽.

토론문

황민호(송실대)

〈당일배포〉

2 세션

〈발표6〉

1910년대 해외독립운동가의
국제정세 인식과 ‘공화제’ 임시정부 구상

윤대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토론문 :

신호승(동북아역사재단)

1910년대 해외독립운동가의 국제정세 인식과 ‘공화제’ 임시정부 구상

윤대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머리말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 이후 나라 밖에서는 독립의 방안으로 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임시정부 수립이 논의되었고, 1919년 3.1운동 후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와 관련해서 병합 직전까지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로서 주로 논의됐던 ‘입헌군주제’ 대신 어떤 이유로 ‘공화제’를 채택하게 됐는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것은 1911년 미주 한인사회에서 박용만이 제기한 ‘무형국가론’이나 1915년 중국 관내의 신한혁명당 및 1917년 ‘대동단결의 선언’ 등의 사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¹⁾ 그 결과 1911년 신해혁명의 영향 그리고 대통령제를 경험한 미주 한인사회의 영향 등을 받아 1917년 ‘대동단결의 선언’을 통해 ‘공화제’ 임시정부로 귀결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이들 임시정부의 구상에는 ‘미일전쟁설’, ‘제2차 러일전쟁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등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당시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변화가 한국의 독립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독립전쟁과 임시정부를 구상했다. 때문에 1910년대 이들의 국제정세 인식

1) 강영심, 「新韓革命黨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 1988 김도훈, 「공립협회(1905~1909)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4, 1989 김도훈, 「1910년대 초반 미주한인의 임시정부건설론」, 『한국근현대사연구』10, 1989 방선주, 「박용만평전」,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출판부, 1989

과 임시정부 구상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대개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린 파리강화회의와 민족자결주의의 배경에 집중되었다. 때문에 한말 풍미했던 국제정세를 보던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의 변화 여부에 주목하지 못했다. 또한 그 분석도 1910년대 독립운동가 개인이나 개별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어 국제정세의 변화 임시정부 구상의 연관성을 간과한 한계가 있다.²⁾

본 연구는 이런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가의 국제정세 인식의 흐름과 ‘공화제’ 임시정부를 구상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국제정세 인식을 지금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보다는 당시 이들이 신문 등 정보 매체를 통해 접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국제정세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주목할 것이다. 둘째는 국권회복의 방안으로 ‘공화제’의 임시정부를 구상한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임시정부의 구상에는 하나같이 독립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그리고 셋째는 1910년대 미주, 연해주, 중국 관내에서 계획, 준비됐던 독립전쟁론과 ‘공화제’ 임시정부 구상이 비록 활동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고 있지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1.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국제정세 인식

1) 박용만의 ‘미일전쟁설’과 대미인식의 변화

1910년 8월 강제병합 이후 국권회복의 방안으로 ‘공화제’의 임시정부건설론을 처음 제기한 곳은 미주 한인사회였다.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던 박용만은 대한인국민회의 초청을 받아 『신한민보』의 주필로 초빙된 뒤 쓴 「조선민족의 기회가 오늘이나 내일이냐」라는 논설에서 ‘무형국가론’을 제기했다. 이 임시정부건설론이 제기된 배경에는 ‘미일전쟁설’이 있었다. 그런데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이전에도 ‘미일전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예컨대 공립협회의 기관지였던 『공립신

2) 강영심, 「新韓革命黨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 1988 한애라, 「1910년대 박용만의 국제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95, 2018

보』에서는 1907년 9월 6일 「미일전쟁이 기회」라는 글에서 “미일전쟁은 금년이 아니면 명년이고 명년이 아니면 래명년이라. 3년이 지나지 아니하리니 기회로다 기회로다. 한국의 독립을 회복할 일대 기회로다”라고 하며 이때 우리 동포가 합심, 분기하면 우리의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³⁾

‘미일전쟁설’에 대해 “만주문제가 전쟁근원”이라고 했듯이⁴⁾ 당시 만주의 문호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만주독점에 대해 문호개방과 투자의 기회균등을 요구하며 러시아를 끌어들이 일본을 압박했고, 이 때문에 연일 미일전쟁설이 보도됐다.⁵⁾ 이 갈등은 유럽에서 독일을 포위, 고립시키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에서는 영·프·러·일 4개국이 동맹을 맺었다. 또한 일본이 1910년 7월 시아와 2차 비밀협약을 통해 미국의 만주 문호개방요구를 일축함으로써,⁶⁾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했고 만주문호개방정책도 일시 위축됐다.

그러나 만주와 태평양에로의 팽창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910년대 들어 미국과 일본 간에는 태평양 방면인 서부 해안의 방어를 강화하고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용이하려는 미국의 파나마운하 개발과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태평양 팽창주의가 충돌하면서 ‘미일전쟁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신문에서는 “미일 양국은 장래에 태평양 상업경쟁으로 한번 크게 충돌될 것은 의심 없는 일”이고⁷⁾ “파나마운하 개통되기 전에 일본과 미국에 전쟁이 생길”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⁸⁾

이와 같이 ‘미일전쟁설’이 비등한 가운데 박용만은 이때를 국권회복을 위한 적기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박용만은 일본의 만주 독점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정세를 어

3) 「미일전쟁이 한국에 기회」, 『共立新報』, 1907.9.6

4) 「만주문제가 전쟁근원」, 『共立新報』, 1908.8.4

5) 「日人對美意見」, 『共立新報』, 1907.6.14 ; 「미일전쟁이 한국에 기회」, 『共立新報』, 1907.9.6 ; 「미일전쟁담」, 『共立新報』, 1907.9.6 ; 「미일전쟁설」, 『共立新報』, 1908.1.15 ; 「美日戰爭說 회보」, 『共立新報』, 1908.2.26 ; 「만주문제가 전쟁원인」, 『共立新報』, 1908.3.4 ; 「미일전쟁불가피」, 『共立新報』, 1908.4.15 ; 「美國議會美日戰爭說」, 『新韓民報』, 1910.2.2 ; 「미일전쟁예비」, 『新韓民報』, 1910.6.1 ; 「露日新協約의 內容」·「일미전쟁론」, 『新韓民報』, 1910.7.6 ; 「美日戰爭의 預言」, 『新韓民報』, 1910.7.13

6) 최문형,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2006, 409~411쪽

7) 「미장의 미일충돌론」, 『新韓民報』, 1910.10.12

8) 「美日戰爭論」, 『新韓民報』, 1910.11.16

떻게 인식했고, 또한 어떤 이유에서 미일전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보자.

먼저 ‘미일전쟁설’이 비등하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박용만의 인식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러일전쟁 다시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요 청일전쟁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라고⁹⁾ 비판한데서 잘 드러난다. 박용만은 러일전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는 1904년 전쟁에서 수치를 당했으나 만주는 눈앞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영국이나 미국과 나누지 않기 위해 일본과 동심협력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빼앗고 만주를 점령한 후 먹을 것이 넉넉한 상황에서 서로 공익을 타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¹⁰⁾ 실제 이로부터 1년이 지난 1912년 7월 일본과 러시아는 영국과 미국의 만주 진출에 대응하여 제3차 러일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제2차 청일전쟁은 더욱 창창한 일이라며 청국은 현재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설사 내란이 없더라도 일본과 전쟁할 실력이 없다. 비록 오늘 일본을破한다 하더라도 내일 서양 열강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¹¹⁾ 실제 청국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원세개의 북경정부와 함께 끊임없이 내분에 휩싸였다.

박용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랄만한 기회는 오직 미일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 박용만은 무슨 이유로 미일전쟁을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고 확신했을까?

박용만은 그 근거로 첫째 멕시코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충돌의 한 요인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일본이 멕시코와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반면 일본은 태평양 방어를 위해 멕시코 해면에 석탄 기지를 두기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미국의 간섭에 반감을 가진 멕시코가 일본에게 한 조각 땅이라도 양보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일본 역시 이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과 일본이 충돌을 일으킬 첫째 기틀이라고 했다. 둘째는 만주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이었다. 이미 만주의 문호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논란이 있었고 미국은 만주 전체를 일본이 독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양국의 충돌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

9) 「조선민족의 기회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新韓民報』, 1911.3.29

10) 위와 같음.

11) 위와 같음.

평양 연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국의 군비 확장을 세 번째 요인으로 판단했다. 즉 미국은 최근 필리핀, 하와이 등에 군사물자를 비축하고 또한 해육군 병정을 모집하고, 일본 역시 많은 군량과 석탄을 사고 정탐을 보내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박용만은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당국자들이 두 나라의 정의가 두터워 전쟁은 허무한 일이라고 하는 외교적 수사를 믿는다면 매우 어리석다고 했다.¹²⁾ 박용만의 분석과는 달리 미일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만주와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갈등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곧바로 재현되어 다시 ‘미일전쟁설’의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박용만은 이보다 앞서 쓴 「합중국과 멕시코」라는 논설에서 미국의 먼로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이 멕시코의 혁명에 대응하여 멕시코 대통령의 지위를 보전하고 서구 각국의 이익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국경에 5만 여명의 군사를 파견하자 박용만은 이것은 먼로주의를 이용한 침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즉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의리 있고, 도덕 있고, 거룩한 것으로 말”하는 먼로주의는 바꾸어 말하면 아메리카 대륙을 농락하여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한 방패라고 했다.¹³⁾

박용만의 이러한 국제정세의 분석에는 몇 가지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먼저 그는 “오늘 세계의 외교와 정치는 그런 적은 혐의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큰 이익을 생각”한다고¹⁴⁾ 하여 자기 나라의 국익을 우선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했다. 또한 그는 “만일 미국이 강한 권세가 없으면 능히 먼로주의가 있어도 이용치 못하고 강한 권세가 있으면 비록 먼로주의가 없어도 능히 하고 싶은 대로 할지라”라고 하며 현실의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것이 ‘권세’ 즉 ‘힘’의 논리임을 분명히 인식했다. 때문에 그는 “오늘 천하에는 공론도 없고 경위도 없고 오직 강한 권세요 오직 강한 권세뿐이라. 이 세상에 앞서서 한갓 의리를 믿고 강한 것을 도모치 않는 자는 너무 미련치 않은가”하며¹⁵⁾ 강대국에게 “아무리 정의와 자비를 구해 봐도 소용이 없다”며¹⁶⁾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용만은 이런 국제정세의 분석을 통해 미일전쟁이 1915년에 일어날 것으로

12) 위와 같음.

13) 「합중국과 멕시코」, 『新韓民報』, 1911.3.15

14) 「조선민족의 기회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新韓民報』, 1911.3.29

15) 「합중국과 멕시코」, 『新韓民報』, 1911.3.15

16) 한애라, 「1910년대 박용만의 국제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95, 18쪽

예상했다. 이미 미일전쟁설과 관련해 “파나마운하가 개통되기 전에 일본과 미국에 전쟁이 생길”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듯이¹⁷⁾ 1915년은 파나마운하의 개통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팽창을 두고 대립하며 군비를 확장하던 상황에서 미국이 파나마운하를 통해 대서양함대를 신속히 태평양 방면으로 이동,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이 크게 확장될 무렵이 미일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박용만이 기대했던 미일전쟁은 1915년에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바로 전해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써 그가 기대했던 독립의 기회 역시 오지 않았다.

2) 신한혁명당의 국제정세 인식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독립의 기회로 보고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가 신한혁명당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은 독일이 산둥반도에서 갖고 있던 이권을 차지하려고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군대를 파병했다. 이렇게 되자 중일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상해에서 동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신규식, 박은식 등은 이 상황을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신한혁명당을 결성했다. 이들은 원래 1914년 12월경 사전모임인 상해회의에서 명칭, 조직의 성격,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동지 규합 등의 작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일본이 중국에 요구한 ‘21개 요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중국 내에서 반일 기운이 고조될 즈음인 1915년 3월 신한혁명당 조직을 완료했다.¹⁸⁾

신한혁명당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중국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자 이 시기를 한국독립의 기회로 보았다. 비록 동양에서 독일이 일본에 패했지만 유럽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한 뒤 일본에 빼앗긴 청도를 회복하려고 극동으로 진출할 것이다. 이때 러시아는 다시 내몽고를 회복하고 극동으로 진출하면 미국과 독일은 연합국을 만들어 이에 응하고,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이 중립을 엄수하여 이를 묵인하면서 결국 일본이 고립되어 패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정세 판단 하에 이들은 중국, 미국, 연해주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지를 규합

하고 군비를 준비하는 한편, 이 군비의 철저한 대비를 위해 독일의 보증 하에 중국과 「中韓誼邦條約」이란 밀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조약은 한국에 혁명전쟁 즉 독립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 측이 군사 및 병기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밀약이었다. 그러나 동지 규합과 중국과의 밀약협약의 전권을 위임받을 밀지를 가지고 국내로 파견했던 성낙형 등이 체포되고 또 1915년 5월 중국이 일본이 요구한 21개조 요구안을 수락함에 따라 중일교섭이 기대와 달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기대한 중일전쟁의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이들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럼 신한혁명당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조성된 동아시아의 정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자. 이것은 신한혁명당이 국내에 당원을 파견하여 국내 동포에게 준 「警覺書」에 잘 나타나 있다.¹⁹⁾

신한혁명당은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첫째가 러일밀약이 無形 중에 효력이 취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즉 러시아는 일본의 감언에 속아 3차 밀약을 체결한 후 車倫(내몽고)를 선동, 독립시켜 보호국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려던 중 불행히 구주전란 때문에 연합국에 가담하면서 내몽고의 보호력을 일본에 密托했으나 일본이 이 틈을 이용, 중국에 강제한 21개조에 내외몽고를 포함시켜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드러낼 것이며 이 때문에 러일밀약은 취소되고 양국은 적대관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²⁰⁾

다음으로는 영일동맹이 위협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영일동맹에서 영국과 일본은 한국영토, 중국이익의 共沾 의무를 相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영국이 歐戰의 주동이 되자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지킨다며 영군과 연합하여 독일의 청도를 공격하고 이때 청도 부근의 李家屯을 영국에 귀속시킨다고 밀약했다. 일본은 청도 함락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중일교섭 중 영국의 이익을 다수 포함하여 영국을 기만함으로써 후일 반드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²¹⁾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 독일이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때를 독립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전승은 움직일 수 없으며 전후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의 권리는 모두 독일에 귀속하게 되고 청도문제에 대한

17) 「美日戰爭說」, 『新韓民報』, 1910.11.16

18) 강영심, 「新韓革命黨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 1988, 12쪽.

19) 金正明, 「警覺書」, 『朝鮮獨立運動』I, 原書房, 1967, 282~283쪽

20) 위의 책, 283쪽

21) 위와 같음.

開戰은 이미 정해진 사실로서 동삼성 또는 산둥이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에 일본이 중립을 엄수하는 중국을 멸시하고 중립지대를 침입하면 중국은 이를 공법을 문란케 하는 것이라며 독일과 연합, 공격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문호개방주의를 잃지 않으려고 중국과 독일의 원조국이 되고, 영국과 러시아는 種族關係로서 연합하여 일본의 배후를 공격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때를 대비해 한국 혁명의 주동자는 哀冤의 외교수단으로 중국과 독일에 독립만회를 청구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 서로 중국과 독일과의 교섭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한혁명당은 당시 세계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는 자신들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예컨대 러일밀약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양국은 오히려 1916년 7월 제4차 협약을 맺어 자신들에 적의를 품은 제3국의 對中支配를 방지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원조를 약속하는 비밀동맹을 맺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기본적으로 주축국 독일을 상대로 한 영·미·러·일·미 연합국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사실과 원세개정권의 매판성을 간과했다. 여기에는 신한혁명당의 이런 정세 인식에는 초기 유럽 전에서 승승장구하던 독일의 전세에 영향을 받은바 컸다.

이와 같이 박용만이 예상했던 ‘미일전쟁설’이나 신한혁명당의 ‘독일승리’ 등의 정세분석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시대적 제한성을 간과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10년 전까지만해도 한국의 지식인들은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박용만이나 신한혁명당은 당시 서구 열강들이 외교적 수사로 말하던 ‘정의’, ‘의리’ 등의 허구성은 물론 그 이면에는 ‘힘의 논리’와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국제외교의 현실을 깨달았다. 이들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세계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세계정세를 능동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²²⁾ 아마 이들은 나라 밖에서 객관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관계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고, 신문 등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축적하면서 조금씩 현실적으로 국제정세를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미일전쟁이 한국에 기회임을 강조하면서도 “만일 미일전쟁에 미국이 이기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으면 범을 보내고 사자를 맞는 것같이 일본의

22) 金喜坤, 『中國關內 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 지식산업사, 1995, 64쪽

노예를 면하나 미인의 노예가 되리라”고²³⁾ 경고한 것이나 신한혁명당이 중국과 맺을 계획이었던 「중한의방조약」에서 한국혁명이 성공한 후 ‘중국이나 독일이 한국혁명을 도운 대가로 한국혁명 후 내정 간섭이나 영토 침략 등을 금지한다’는²⁴⁾ 조항을 명기한 것 역시 제국주의 열강의 본질을 인식한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2. 독립전쟁론과 ‘공화제’ 임시정부의 구상

1) 독립전쟁론의 연계성

박용만은 미일전쟁이 일어나 독립의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하여 마땅히 예비할 것은 첫째 일본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고 장래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 ‘무형국가’ 즉 임시정부를 성립해야 한다고 하여,²⁵⁾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독립전쟁론을,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체로서 임시정부 건설을 주장했다. 또한 대한광복군정부 역시 제2의 러일전쟁을 예상하고 북간도와 연해주 및 멀리 미주 등의 국외 한인 사회에서 양성하고 편성한 광복군을 망라하여 독립전쟁론을 구현하려고 했다.²⁶⁾ 신한혁명당은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승리로 끝나면 “북경, 상해, 서간도, 노령, 미국 각지와 연락하고” 중국, 독일과 연합하여 한국혁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었다.²⁷⁾

이러한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전쟁론과 임시정부건설론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대한광복군정부에 관여한 “인사들이 신한혁명당의 결성에 중심역할을 하면서 그 군사적 기반이 신한혁명당의 군비로 전환 될 수 있었다”거나 신한혁명당이 한국혁명에 동원하기로 한 무력 가운데 “미주지역은 1914년 6월 박용만이 하와이에 국민군단을 설립, 군인 양성을 목적으로 완전한 군대를 조직한 사실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고²⁸⁾ 했다. 또한 박용만이 “1914년 國民軍團을 창설하여 활동할 때 이상설과 연락되고 있었으므로 1915년 이상설과 함께 신한혁명당을 결성했던 신

23) 「미일전쟁이 한국에 기회」, 『共立申報』, 1907.9.6

24) 金正明, 『中韓誼邦條約』, 앞의 책, 284~285쪽

25) 「조선민족의 기회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新韓民報』, 1911.3.29

26) 윤병석, 「李東輝의 亡命活動과 大韓光復軍政府」, 『한국독립운동사연구』11, 1997, 106쪽

27) 金正明, 『警覺書』, 앞의 책, 282쪽

28) 강염심, 앞의 논문, 123~125쪽

규식과도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²⁹⁾ 이처럼 이들 세 지역의 연계 가능성만을 언급했을 뿐 그 실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 세 지역의 독립전쟁론과 임시정부건설론에 과연 상호 연계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실상은 어떠했는지 보자.

우선 이 세 지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이상설이다. 이상설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참여한 뒤 런던을 거쳐 미국에 왔다. 북간도와 노령의 대표적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이상설은 이듬해 8월 콜로라도 덴버에서 박용만이 소집한 애국동지대표회에 이승만과 함께 노령 대표로 위임받아 참석했다.³⁰⁾ 이때 이상설은 이 대회를 주관한 박용만과 만났을 것이고 애국동지대표회의 개최 취지는 물론 박용만이 독립군 양성을 위해 제시한 한인군사학교 설립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이후 이상설은 이 대회를 계기로 전개된 미주 한인사회의 통합운동에 참여했고, 1909년 2월 미주의 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합성협회를 통합한 국민회를 조직했다. 이때 국민회는 시베리아와 만주에 지방총회를 두기로 하고 그해 5월 이상설과 정재관을 ‘원동’에서의 독립운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견했다.³¹⁾ 미주에서 연해주로 온 이상설은 김성무, 전명운과 회합, 시베리아 전역에 국민회의 원동지방총회 건립에 노력했다. 이 무렵 국민회는 대동보국회와 통합, 대한인국민회를 결성하면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아래 북미, 하와이, 멕시코, 시베리아와 만주 등지에 지방총회를 두었다. 그 결과 1911년 10월 시베리아 지방총회가 치타에서 건립되었고, 이후 1914년에 이르기까지 시베리아 전역에 총 33개의 지방회가 설치되었다. 하얼빈에 본부를 둔 만주 지방총회도 설치되었다. 이들 지방회에서는 『신한민보』, 하와이 지방총회의 기관지인 『국민보』를 배포했다.³²⁾ 뿐만 아니라 이상설은 당시 노령 한인사회의 대표적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의 의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에서 노령의 독립운동가들이 국민회 원동지회에서 배포하는 『신한민보』, 『국민보』를 통해서 미주 한인사회의 동정과 박용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9) 趙東杰, 『韓國民族主義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322쪽

30) 方善柱, 「박용만평전」, 『在美韓人の 獨立運動』, 한림대학교출판부, 1989, 20~21쪽

31) 「국민회보」, 『新韓民報』, 1909.6.2

32)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러시아지역의 韓人社會와 民族運動』, 敎文社, 1994, 127쪽

한편 1913년 11월경 이상설의 측근인 이용화가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하와이에 도착했다.³³⁾ 이용화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하던 시기에 그가 소속된 권업회는 각 지역의 독립군조직을 연계한 대한광복군정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용화가 하와이에 도착한지 두 달 지나 박용만을 중심으로 한 하와이 한인 사회의 유지들은 대조선국민군단과 국민군단사관학교의 설립을 합의했고, 1914년 8월에 국민군단과 사관학교의 낙성식을 가졌다. 이용화는 그 직전 상하이행 배를 타고 하와이를 떠났다.³⁴⁾ 이용화가 하와이에 머무는 동안 박용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이상설의 측근이고 그 무렵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정부의 조직이 준비되고 있었고, 1914년 5월경 작성된³⁵⁾ 대한광복군정부의 병력 편성표인 「各處軍容情勢詳細」에 ‘미국지방에서의 주무기관 ; 박용만’과 ‘학생무관교련 수’ 등이 이미 편제되어 있었다.³⁶⁾ 또한 1914년 2월 이동휘는 『신한민보』에 미주 동포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국민보』에 실린 소년병학교 학생들의 사진을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병법을 배우며 공익과 의협심을 배양하는 것이 제1 급무”라는³⁷⁾ 글을 실었다.

이처럼 이상설의 측근인 이용화의 하와이 방문이나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기도 전에 이 부대원이 대한광복군정부의 병력 편성표에 등장하는 점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의 정·부통령인 이상설과 이동휘가 박용만의 독립전쟁론과 독립군양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상설과 박용만 사이에 대한광복군정부의 창설과 독립전쟁 계획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박용만은 노령뿐만 아니라 국내와 상해와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예컨대 1912년 10월 박용만은 평양의 손정도에게 답신을 보내 지난 편지에서 자신에게 권했던 ‘만주 식민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용만은 편지를 받은 이후 ‘만주 식민책’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식민책을 실시할 “장소, 지질, 지가 및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곳과 견적 가격 등을 급히 알려 달라”고 했다. 또한

33) 「량씨상록」, 『新韓民報』, 1913.10.24 ; 「리씨상록」, 『新韓民報』, 1913.11.7

34) 한애라, 앞의 논문, 24쪽

35)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앞의 책, 134쪽

36) 金正明, 「各處軍容情勢詳細」, 앞의 책, 288쪽

37) 이동휘, 「나의 사랑하는 신한민보에 부탁하여 합중국 각지방에 있는 동포에게 문안하노라」, 『新韓民報』, 1914.2.19

이동녕과의 연락이 끊어졌으니 그에게 편지를 보낼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³⁸⁾ 손정도가 권했다는 ‘만주 식민책’이란 독립군 양성을 위한 독립군기지를 뜻하며 이는 곧 그곳에서 미일전쟁에 대비한 ‘屯田制養兵’을 실시하려는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박용만이 손정도에게 보낸 편지는 사전에 발각되어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그와의 관계는 단절됐을 것이다. 하지만 박용만은 곧바로 상해와 연결된 국내 조직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1912년 2월 국민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상해의 조성환, 신규식, 신형호 3인이 ‘國民鐵血大會 新韓光復喜歡’이라는 墨書를 보내와³⁹⁾ 상해와 미주 지역이 일찍부터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의 신규식, 박은식과 박용만의 연계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조선국민회 외교통신원인 백세빈이다. 조선국민회는 1914년 9월 하와이에 가서 박용만을 만난 장일환이 귀국한 뒤 박용만과 합의한 국내 정보의 통보와 국권회복운동을 목적으로 동지를 규합하며 조직을 준비하다가 1917년 2월 조직한 비밀결사이다. 이때 백세빈은 중국 안동에 내외연락기관으로 배치되어 『국민보』를 회원들에게 반포하는 임무를 맡았다.⁴⁰⁾ 사실 백세빈은 이 이전부터 미주에서 상해의 신규식, 조성환, 박은식 등에게 보낸 『신한민보』, 『국민보』를 다시 받아서 은밀히 국내외에 배포하며⁴¹⁾ 미주, 상해, 국내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와 『신한민보』, 『국민보』의 매체를 통해서 노령과 상해에서는 일찍부터 박용만이 제기한 독립전쟁론과 임시정부건설론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런 공유를 바탕으로 미주, 노령, 상해 세 지역의 독립전쟁론이 독립노선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전개됐다. 대한광복군정부의 정통령인 이상설이 상해로 와서 신한혁명당을 조직하고 대한광복군정부가 편성한 병력이 신한혁명당의 군사조직으로 전환된 것은 이런 연계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 이들 세 지역의 독립전쟁론은 이미 병합을 전후하여 모색된 독립노선이었다. 신

38) 「機密 제58호 在米 排日鮮人の 書信에 관한 건(1912.11.1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歐米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9) 『新韓民報』, 1912.2.5

40) 「高第3094號 秘密結社發見處分の 件(1919.2.18.)」,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内地 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1)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編), 1976, 17쪽

민회의 서간도독립군기지 건설운동과 신흥무관학교의 설치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독립전쟁론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군사적 강국인 일제를 직접 무력으로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적기’에 독립전쟁을 실행해야 했다. 이들은 독립전쟁의 시기로 ‘미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승리’ 등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때를 ‘적기’로 판단했던 것이다.

2) ‘공화제’ 임시정부의 구상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으로 구상한 것이 임시정부였다. 이런 움직임은 1907년 이후 공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사회의 통합연합기관 설치 운동이 전개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1910년 5월 하와이와 미주 본토는 물론 멕시코 지역까지 아우른 한인들의 자치기관으로 대한인국민회가 조직되자 이 단체를 정치적 조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임시정부 건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1910년 강제병합 전 미주 한인사회에서 공립협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와 관련하여 ‘국민주의’(국민주권), ‘입헌’, ‘대의정체’, ‘삼권분립’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주장들을 근거로 국민주권주의 내지 공화제 임시정부를 주장하는데⁴²⁾ 물론 공화제 논의도 있을 수 있으나 ‘공화제’에 대한 명확히 주장은 없다. 강제병합 전 국내에서 계몽운동가들이 근대국민국가 건설과 관련된 입헌정체를 논의하는 가운데서 ‘대의제’, ‘입헌’, ‘삼권분립’, ‘자유’, ‘평등’ 등은 공통된 내용이었고 이들은 현존하는 군주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역’인 공화제가 아닌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또한 병합 직전 병합론이 미주에 전해진 무렵 『신한민보』에 실린 「噫死而不知其痛乎(슬프다 나라이 죽어도 그 백성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는가)」을 근거로 “대한인국민회는 일제에 투항한 융희황제를 대한제국의 군주로서 전면 부인”했다고 해석했다.⁴³⁾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가’는 “일인의 예비함과 같이 융희황제가 동경에 가서 작록을 받을지면 우리는 우리의 임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즉 우리는 마땅히 이씨의 황실을 존송하는 중심으로 황위 계승할 성군을 택”했다.⁴⁴⁾

42) 김도훈, 「공립협회(1905~1909)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4, 1989 참조

43) 김도훈, 「1910년대 초반 미주한인의 임시정부건설론」, 『한국근현대사연구』10, 1989, 254쪽

44) 「噫死而不知其痛乎(슬프다 나라이 죽어도 그 백성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는가)」, 『신한민보』, 1910.7.6

즉 새로운 국가란 황제를 교체한 군주제이거나 아니면 입헌군주인 것이다. 이처럼 미주 한인사회 역시 대한제국의 군주가 현존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910년 8월 강제 병합된 뒤인 9월 21일 『신한민보』에서는 「嗚呼舊韓已死矣(오호라 옛 한국이 죽었도다)」라는 논설을 통해 병합을 구한국 즉 대한제국의 망국으로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마땅히 마음을 합하여 대한민족의 단체를 공공히 하며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공법에 상당한 가정부(假政府는 公法之所許)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⁴⁵⁾ 이어 신한민보의 주필 최정익 역시 10월 5일 「大韓人之自治機關」이란 논설에서 강제 병합에 대해 “오늘 우리는 나라이 없는 동시에 정부도 없으며 법률도 없으며 일체 생명 재산을 보호할 기관이 없”는 상태라며⁴⁶⁾ 강제 병합으로 인한 망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것은 마치 1907년 고종의 강제 양위 이후 의병들이 대한제국을 “국가는 있으되 그 實은 없는 것과 같”다거나⁴⁷⁾ 의병을 “대한민족의 대표자”로⁴⁸⁾ 자칭하며 망국을 현실로 인식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정익은 국가 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이 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대한국민회를 대표하여 공법상에 허한 바 가정부의 자격을 방하여 법립(입법), 행정, 사법의 삼대기관을 두어 완전히 자치제도를 행”하게 하자며 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임시정부의 건립을 주장했다.⁴⁹⁾

최정익에 이어 신한민보 주필로 취임한 박용만은 『신한민보』의 논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임시정부건설론을 전개했다. 그가 주장한 임시정부는 “조선민족을 한 헌법 앞에 관할하여 한 무형한 국가를 설립하자 함이니 가령 우리 지방 북아메리카와 하와이와 해삼위와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 다 일체로 그 공회에 속하게” 하자는 것이다.⁵⁰⁾ 그리고 그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정치적 조직의 계획」이란 논설을 통해 임시정부가 완전한 정치적 조직을 갖추기 위한 大綱과 이에 대한 이론적

45) 「嗚呼舊韓已死矣(오호라 옛 한국이 죽었도다)」, 『新韓民報』, 1910.9.21

46) 「大韓人之自治機關」, 『新韓民報』, 1910.10.5

47) 湖南義所, 「告示」, 『韓國獨立運動史』1, 국사편찬위원회, 679쪽

48) 沈魯術, 「歸順勸誘書에 對한 返書(1908.5.7.)」, 『暴徒에 關한 編冊』11, 146쪽

49) 「大韓人之自治機關」, 『新韓民報』, 1910.10.5. 최정익의 이 논설에 대해 문체의 특징적 스타일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최정익의 글이 아니라 박용만의 글을 최정익이 약간 손질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方善柱, 앞의 책, 52쪽)

50) 「조선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무형한 국가를 먼저 설립할 일」, 『新韓民報』, 1911.4.5

근거를 제시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한다섯 가지 大綱은 “첫째 외국에 나온 조선민족을 마땅히 무형한 국가와 무형한 정부 앞에 통합할 일, 둘째 완전한 헌법을 정하여 일반 한인법률상 공민이 될 일, 셋째 사람마다 의무를 담당하고 권리를 이용하게 할 일, 넷째 정치적 구역을 나누어 행정기관이 효력을 얻게 할 일, 다섯째 중앙총회로 권리를 모아 법률을 의지하여 호령이 실행케 할 일”이다.⁵¹⁾ 이처럼 박용만은 무형국가를 미주에서 먼저 시작할 것을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주를 넘어 전체 해외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건설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박용만은 자신이 임시정부를 이룬바 ‘무형정부’라 한 것에 대해 “원래 국가의 성립은 백성과 토지로 기초를 삼고 법률과 정치로 집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나 지방 우리는 백성은 있고 토지는 없어 불가불 남의 토지 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고로 무형한 국가라 함이라.”고⁵²⁾ 하여 일제의 국토 강탈로 임시정부를 나라 밖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假政府가 변하여 眞政府가 되어 무형한 국가가 자라서 유형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⁵³⁾ 하여, 독립 전에는 독립전쟁을 총괄하고 독립 후에는 정식 정부를 준비하는 임시정부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노령에서 세워진 대한광복군정부는 민족의 군대가 되는 독립군을 주도하여 일제와의 독립전쟁 결행을 총괄하는 ‘군사정부’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⁵⁴⁾ 다만 이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시체제에 들어간 러시아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자국 내에서의 한인의 모든 정치, 사회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모체가 된 권업회와 함께 1914년 9월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처럼 대한광복군정부는 실제 활동은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이름만 남게 된 것에 불과했다.

반면 노령에서 추방되어 상해로 온 이상설이 신규식, 박은식 등과 함께 1915년 3월 조직을 완료한 신한혁명당은 “자유 국민다운 자격을 얻으려면 內援外應의 힘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定理”이며 이를 위해 재외 독립운동자들이 “秘密無形 중 견고한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고 했다.⁵⁵⁾ 신한혁명당은 이 ‘비밀무형의 견고한 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이 없지만 다음 글을 통해서 이들이 지향한 임시정부의

51) 「정치적 조직의 계획」, 『新韓民報』, 1911.5.17·24·31

52) 「정치적 조직의 계획」, 『新韓民報』, 1911.5.17

53) 「국민적 상식을 備하라」, 『新韓民報』, 1911.9.20

54)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앞의 책, 135쪽

55) 金正明, 앞의 책, 284쪽

정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⁵⁶⁾

구주전쟁 후의 일본은 동양에서 고립되어 점차 위축당하고, 지나 독일의 연합군대와 대전해야 할 위기에 처하였다. 조선의 독립회복은 바로 이때니, 지금부터 지나, 독일에 은밀히 內通할 준비가 필요하다. ... 그런데 양국은 군주정치로서 종래와 같이 조선의 有志가 공화정치를 주장함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 名義 때문에 마침내 목적을 달성키 어려울 것이므로 李王家의 一人을 이 운동의 맹주로 하기로 결정했다.

즉 신규식, 이상설, 유동렬 등은 신한혁명당 조직을 협의하면서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하여 일본과 전쟁을 할 때 중국의 군사 원조와 독일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국이 帝政이므로 공화주의를 표방해서는 목적을 이루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왕가를 이용하는 것이 득책이라며 신한혁명당을 조직하기로 했다.⁵⁷⁾ 그런데 이런 이유로 신한혁명당이 구상한 임시정부의 政體를 “입헌군주제적 보황주의”라거나⁵⁸⁾ 또는 “입헌군주제적 帝政”이라는⁵⁹⁾ 평가가 있다. 물론 이들이 중국과 맺으려던 「중한의방조약」의 체결 주체를 ‘한국 ○○○ (광무제-필자)’로 정하고 중국과 독일이 帝政國이란 현실을 크게 의식한 점에서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과연 이런 평가가 타당한지 좀 더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신한혁명당의 조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권 회복 후에도 공화정치파와 제정파의 주의를 달리”하였으나 “중국과 독일에 의지하려면 제정이 된다면 동정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주의를 주창하는 자가 점차 수를 늘려 유동렬처럼 쟁쟁한 공화정치 주창자도” 제정파에 가담했다고 했다.⁶⁰⁾ 신규식은 신해혁명에 참여하여 원세개정권의 요시찰 인물로 지목되었고, 박은식은 원세개의 專政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등 신한혁명당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상당수가 공화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종을 내세운 단체가 ‘임시정부’가 아니라 ‘黨’이고 고종을 당수로 추대한 점, 이들이 독립전쟁을 ‘한국혁명’이라 하고 ‘당’의 이름도 ‘신한혁명당’이라 한 것은 공화정을 지향한 중국의 신해혁명을 의식한 것이다. 더구나 임시정부를 구상하면서 ‘비밀무형의 견고한 정부’라고 했듯이 ‘무형정부’는 곧 박용만이 임시정부 건설론에서 제기한 ‘무형정부’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독일과의 외교

56) 金正明, 앞의 책, 277쪽

57) 金正明, 앞의 책, 279쪽

58) 강영심, 앞의 논문, 132쪽

59) 金素眞, 『韓國獨立宣言書研究』, 國學資料院, 1990, 63~64쪽

60) 金正明, 앞의 책, 281쪽

적 교섭이라는 당장의 필요성 때문에 ‘당’을 조직했지만 조약 체결 후 내지 독립 후에도 정부의 정체를 帝政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처럼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강제병합을 계기로 군주제에 대한 부정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국민주권론에 기초한 공화제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흐름은 먼저 미주 한인사회의 임시정부건설론으로 나타나 박용만의 ‘무형국가’로 귀결되었다. 이후 정부를 표방한 대한광복군정부가 노령에서 창설되었으나 이 정부는 독립군을 지휘, 독립전쟁을 수행할 ‘군정부’였다. 신한혁명당은 외교교섭 상의 절박성 때문에 ‘제정’을 표방한 ‘당’을 조직했으나 이들이 지향한 임시정부인 ‘비밀무형의 견고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화제를 지향했다.

맺음말

이상으로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전쟁론과 공화제 임시정부 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들은 나라 밖에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국제관계의 실상과 언론 매체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세를 현실적·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제2차 러일전쟁’, ‘미일전쟁’ 그리고 제1차 대전에서의 독일의 승리를 국권 회복의 ‘적기’로 파악했다. 나아가 이들은 그 적기에 대비하여 해외 한인사회를 기초로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이를 구현할 정치적 조직으로 ‘공화제’의 임시정부를 구상했다. 그리고 이 구상은 공간과 시간을 달리하여 전개되었지만 그 주체들은 인적 내지 조직적인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의 구상은 국제정세의 현실이 이들의 예상에 빗나감으로써 실현될 수 없었지만, 국민주권설에 입각한 공화제의 임시정부 건설을 주창한 1917년 7월 「대동단결선언」으로 다시 확인되었다. 1918년 6월 노령에서 열린 전로한족대표자회의에서 노령 각지의 한족회 지부에 대해 “공화정치의 실행방법을 운동할 것”을 결의했듯이⁶¹⁾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공화제는 임시정부건설론의 주된 흐름이 되었다.

61) 姜德相, 『現代史資料』26, みすず書房, 1977, 229~230쪽

토론문

신호승(동북아역사재단)

본 발표문은 국가의 '政體'에 대한 독립운동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화제'로 나아가게 된 배경과 과정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사는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연구에서 소략하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주권자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법 즉, '政體'는 국가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政體'는 독립운동에서 구성원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구성원의 독립 의지는 '政體'의 지향과 당위성을 통해 의지를 행동으로 연결해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국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공화제'를 기반으로 한 독립국가 수립은 독립운동의 중요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777년 보르네오에서는 '蘭芳共和國'이 건국하였고, 1869년 일본에서는 '蝦夷共和國'이 건국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895년 '포모사 공화국(臺灣民主國)'과 1899년 '필리핀 제1공화국' 그리고 1911년에는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중화민국' 건국으로 이어졌다.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政體'에 대한 독립운동가의 구상은 세계사적 측면에서도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현재의 시대적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논증하고 있는 해외 독립운동가의 '공화제' 인식 형성과 '공화제'를 기반으로 한 임시정부 구상 역시 '공화제'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발표자의 논증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토론자 역시 동의하지만, 독자의 관

점에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여쭙보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우선 논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여기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공화제'와 '사회진화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진화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연선택과 도태라는 측면에서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진화론적 측면에서는 정의보다 국익과 힘에 의한 관계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당시 해외독립운동가들이 스펜서적 인식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국제 관계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개념상 그 반대가 오히려 적절한 설명이라고 보인다. 종합한다면 탈 사회진화론적 인식이 '공화제'라는 정체로 이어질 수 있는 개념상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정보의 층위와 접근성에 대한 것이다.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우선 인식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박용만을 비롯한 당시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를테면 본문에서도 박용만 등이 잘못된 정세판단을 하게 된 요인이라고 언급한 비밀동맹의 형성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박용만 등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비롯해 러일밀약과 같은 열강 간의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겠느냐는 점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비준조차 거치지 않는 이런 비밀의 경우 언론을 통해서도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여기서 주요 무대로 삼고 있는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상황에서는 정보의 왜곡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중에 각종 불확실성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 등으로 사실 간의 인과관계조차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하거나, 이미 시효성을 상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 정세를 분석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만 등 당시 해외독립운동가의

정세판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 대상은 누구였고, 설득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반드시 독립운동을 위한 정치적 조직체로서 ‘임시정부’를 필요로 했는가 하는 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안창호 역시 처음에는 정부의 형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본문에서는 ‘공화주의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근거로서 고종을 당수로 하는 ‘신한혁명당’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임시정부’가 아닌 ‘당’을 독립운동을 위한 정치적 조직체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1930년대 이후 ‘당’의 형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조직체로서 ‘공화제 임시정부’로 귀결되었다기 보다는 1919년을 전후한 시대적 특수성에 의해 ‘공화제 임시정부’를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립한 국가를 살펴보면 식민지 본국에 저항하기보다는 협력함으로써 독립을 획득하였다. 대표적으로 폴란드, 체코 등이 그러하였고,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은 파리강화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도 충분히 독립할 수 있었다. 일부 식민지에서는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는 이른바 ‘소국주의’보다 ‘대국주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식민지 잔류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정세 판단과 국내에서 자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국제 정세에서는 일본의 전쟁을 지원하여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 배경으로 ‘미일전쟁설’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일본과 전쟁설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모든 열강을 상대로 제기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과 연계된 독립운동가의 배경과 본문에서 주된 사료적 근거로 삼고 있는 『신한민보』가 미주한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다.